

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440-11

2018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8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간사

2017년과 2018년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전환기적 시기였습니다.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2018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18년 9월 서명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요인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테러·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그리고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2018년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기점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을 건설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하여 미래전에 대비한 주도적 방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무기체계 중심의 군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국방운영체계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개방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국가방위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장병들이 보람 있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반드시 구현할 것입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과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소상히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2018 국방백서」를 통해 우리 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8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30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33
제3절 국방개혁 2.0	37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42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1
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59
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62
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7
제6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70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84
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87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1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96
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104
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13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124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32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135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151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164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170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182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187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192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01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10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15

부록

특별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222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27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231
	4.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23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40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42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43
	4. 남북 군사력 현황	244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45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6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47
	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48
	9. 남북 군사관계 일지	26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267
	11.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269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0
	13.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1
	1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6
	15.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81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83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285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87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88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91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92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93
	23. 국방기구도	294
	2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96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06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1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8



G20 정상 회담(2018년 11월)

제1절 세계 안보정세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안보위협 지속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

유럽 지역은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 위협,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난민할당제 도입을 통해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유럽 일부에서 반유럽연합, 반이슬람, 반난민 정서 확산에 따른 극우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유럽연합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에서 일반 대중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ISIS²⁾에 의한 테러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역내 반이슬람·반이민 정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덴마크, 몰타, 영국을 제외한 2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신무기와 군사 장비 개발에 공동투자하고 군사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³⁾)’ 구축에 서명하고, 17개 협력 사업을 합의하는 등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는 ISIS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중동

1) 2017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 이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 추진

2)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3)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지역 내 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면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과 반군 세력 간의 갈등 및 터키군의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년 간 지속되어온 예멘에서의 내전은 평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종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은 2018년 5월 미국의 이란 핵 합의(JCPOA)⁴⁾ 탈퇴 선언과 대이란 제재 복원,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저발전, 국가역량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등 만성적인 문제들로 인한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종족 간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등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소말리아에서는 2017년 10월 알샤바브에 의한 차량 자폭공격으로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 등에서는 보코하람, 알샤바브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요인 다양화 및 범위 확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영역을 상실한 ISIS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이 필요 없는 ISIS 2.0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 역시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의 하나이다. 민간 기관은 물론 정부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017년 6월 닷페트야 랜섬웨어 공격, 2018년 3월 터키 가상화폐거래소 공격 등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지속되고 있어 각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애쓰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도 국제 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 2015년에는 메르스가 26개 국가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사회는 감염병을 중요한 안보위협⁶⁾으로 인식하고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4)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과 함께 2015년 7월에 체결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합의문서(JCPOA :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5) 글로벌 테러 확산, 무명테러 증대, 노마드형 테러 등이 주요 특징

6) 2014년 9월 18일 유엔 결의 제2177호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한다”고 선언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멕시코 강진, 발리 화산분출,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는 지진이,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하와이 화산 분화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재해·재난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발생 국가만의 능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호, 재건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3.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은 국경의 제한 없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제 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구축과 효과적인 위협 대응을 위해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⁷⁾)뿐만 아니라 유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Conference on Cyberspace)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15년 9월 제2차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에서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국제정치·경제·사회·안보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유엔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GDACs⁹⁾)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정보, 재난 구호 현황과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에서도 재난구호 방안을 논의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7)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8) ASEAN Regional Forum

9) Global Disaster Alert and Coordination System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또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정세는 한반도 비핵화 변수와 맞물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1. 역내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대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기조하에 국가안보전략(NSS)¹⁰과 국방전략(NDS)¹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명시하고 장기적·전략적 경쟁을 공식화하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통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4자 협력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방 예산을 증액하여 아태 지역 배치 전력 증강 추진, 재래식 전력 강화, 핵 억제능력 현대화,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등 군 현대화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청사진으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소강(小康)¹²사회 건설의 전면적인 기초 아래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050년까지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의 전면적 건설을 통한 ‘세계 일류 강군 육성’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향후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기초한 ‘전수방위’¹³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제협조주의에

10)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안보 관련 최상위 문서(NSS : National Security Strategy)

11)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하는 문서로, 미 합참의 「국가군사전략(NMS)」 등 하위 문서에 대한 작성 지침(NDS : National Defense Strategy)

12) ‘소강(小康)’은 중국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뜻의 ‘온포(溫飽)’ 다음 단계를 말함. ‘온포’가 기초적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소강’은 문화적 여유까지 가미한 중산층 생활을 의미

13)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 또한 자위를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보유하고 유지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수동적 방위전략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¹⁴⁾를 내세우며 일본의 안전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2018년 이후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다차원 횡단 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완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유럽, 중동 등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외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동방정책¹⁵⁾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 동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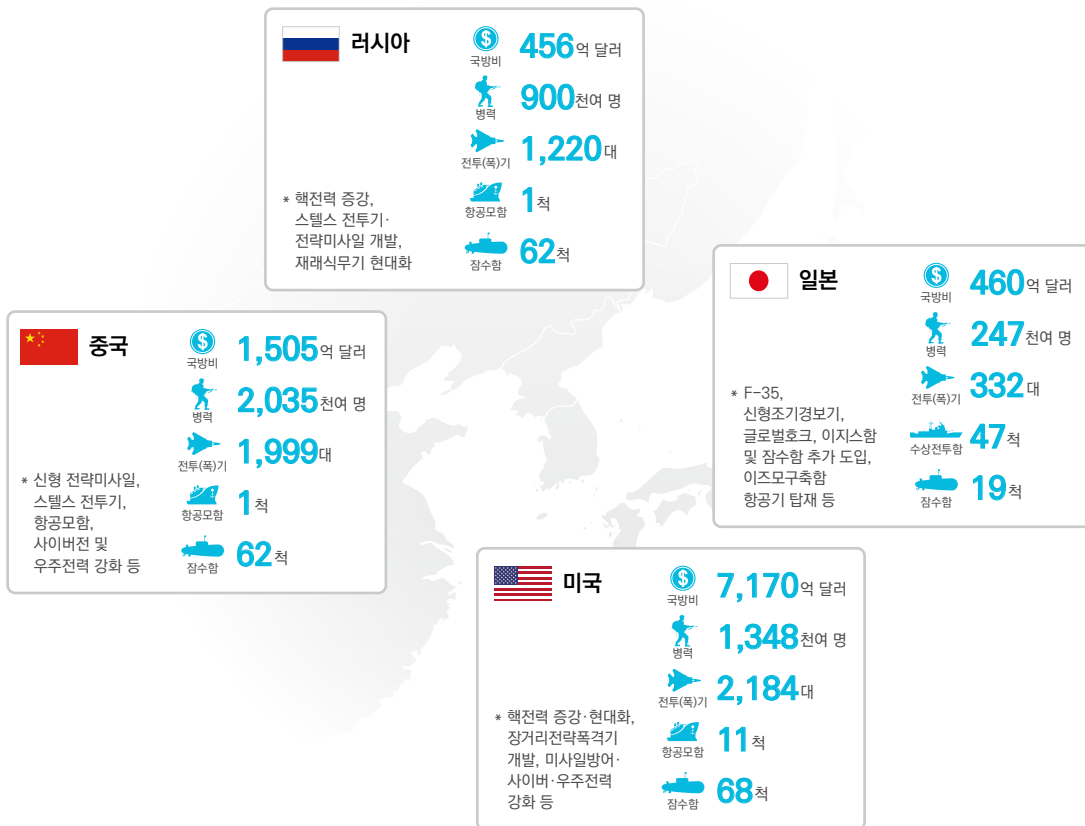
| 미국 | 미국은 2017년 「국가안보전략(NSS)」과 2018년 「국방전략(NDS)」에서 본토 보호, 자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와 영향력 확대 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국으로 평가하면서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 견제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주권 존중과 공동번영을 위해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십과 다자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역내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미·일·호, 미·일·호·인 등 소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확대된 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법에 근거한 항행의 자유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 지역의 비확산 체제 유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은 2018년 5월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역내 미군 주둔 확대와 군사훈련 및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14)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일본이 그 국력에 걸맞게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

15) 신동방정책은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협력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강대국 러시아 재도약을 위해 2012년부터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추진 중이며, 2015년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통해 본격화

[도표 1-1]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미국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¹⁶)’을 발전시켜 최적의 합동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축체계를 현대화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2018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지하에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¹⁷)」에 서명함으로써, 2016년부터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켜 ‘힘을 통한 평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산 사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전년 대비 국방비 170억 달러 증액(7,170억 달러,

16)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1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GDP 3.1% 수준)과 군 병력 2만 4,100여 명 증원을 추진하고, 대비태세 강화, 새로운 위협 대응, 군별 현대화 계획, 동맹국 및 우방국 지원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였다.

육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47만 6천여 명에서 1만 1,500명을 증원하고, 전술 차량 3,000여 대와 다목적 장갑차량 200여 대 등 전력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군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기 위해 2018년 6월 육군성 예하에 ‘육군 미래사령부(AFC¹⁸)’를 창설하였다. 해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51만 2,000여 명에서 8,600명을 증원하고, 핵잠수함 2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3척 등 전력구축 사업을 승인하였다. 공군은 병력 규모를 현재 32만 5,000여 명에서 4,000명을 증원하고,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 기존의 획득 및 성능개량 예산을 정상 편성하여 전력을 증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F-22의 지상공격과 전자전 능력을 보장하고 있으며, B-2와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¹⁹)를 개발 중이다.

아울러 이번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의회에 당 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을 제한하였다. 한편 2018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외교적·군사적 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켜 나갈 것임을 지속 강조하였다.

미국은 사이버 및 우주 분야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017년 8월 사이버 사령부를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춘 통합사령부로 격상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우주 분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주군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분야에서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중국 | 중국은 군의 현대화와 동시에 고효율적인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세계 강군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건설, 2035년까지 국방·군대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 전국 인민정치 협상회의)에서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1% 증가한 1조 1,069억 위안으로 책정하고, 2015년 병력 30만 명 감군 선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감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군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대의 경량화 및 기계화,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연안 방어전략과 근해 방어전략을 거쳐 원해호위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2년 라오닝 항공모함 전력화에 이어 첫 자국산 항공모함 취역 노력 등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추진하

18) Army Future Command

19) Long Range Strike Bomber

고 있다.

공군은 걸프전 및 코소보전 등 현대전의 영향을 받아 국토방공 위주 형태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략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토방공임무 전담 요격전투기는 감소한 반면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와 전폭기는 급증하였다. 또한 원거리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급속한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로켓군은 핵 반격 능력과 중·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에 주력하는 가운데 차세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DF-26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DF-41의 전략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HGV)를 탄두에 탑재 가능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DF-17의 시험발사를 실시하는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대응한 신형무기체계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2015년 12월 31일에 창설된 새로운 군종으로, 군 작전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전,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우주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하여 우리 영해에 근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군용기 및 민항기와의 상호 충돌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주한 중국 무관을 7차례 초치²⁰⁾하여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다.

| 일본 |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에 따라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 제²¹⁾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급유와 탄약 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안전확보 및 출동경호 임무 추가 등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8년 말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서 '다차원 횡단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정하고, 2018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5조 2,986

20) 2018년 2월 27일, 4월 28일, 7월 27일, 8월 29일, 10월 29일, 11월 26일, 12월 27일

21) 자위대법·선박검사활동법·국제평화협력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 개정 및 국제평화협력지원법 신설 등

역 엔으로 확정하였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의 각종 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육상총대²²⁾를 신설하고, 조어도(센카쿠, 다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였으며,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다. 향후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고정익 초계기부대의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²³⁾

항공자위대는 일본 주변의 공역에 대한 상시 경계·감시를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를 유지하고 있다.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였다. 향후 2023년까지 신형 전투기(F-35A 42대), 신형 조기경보기, 채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하여 창설한 사이버방위대와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부대를 증원하여 임무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두 부대를 통합하여 2020년 '우주·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우주 공간에서 각국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주를 감시하는 전문부대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력증강과 더불어, 통합막료장이 각종 사태 발생 시 부대 운용에 전념할 수 없는 결점을 보완하고, 총리 보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통합사령부'²⁴⁾를 창설하여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군 조직을 개편하였다.

| 러시아 | 러시아는 군 구조 및 편제 개편, 장병 임금 인상 및 군 주거 환경 개선 등 과감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대내외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해 왔다. 특히 2017년까지 전력증강 결과 전투장비의 59%를 현대화하였으며, 야루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대 등 전략부대를 증·창설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였다. 2018년부터 향후 8년간 무기체계 현대화를 위해 약 34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작전환경하에서 군관구별 특색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별 현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2) 육상자위대의 각 부대를 신속·유연하게 전국적으로 통합운용하는 작전사급 부대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해당

23)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위해 2023년까지 호위함을 47척에서 54척으로,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증강하고, 고정익 초계기는 P-1 신형초계기 위주로 65대를 유지할 예정임. 또한 초계 헬기를 76대에서 80대로 증강하고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시킬 예정이며, 이즈모형 구축함에 F-35B가 탑재 가능하도록 개조를 검토 중

24) 2018년 12월에 개정한 방위력 정비의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육·해·공자위대의 전력을 통합하여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창설에 대하여 명기

육군은 군관구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서부 군관구는 국경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빠드-2017 훈련을 실시하였고, 1만 3,000여 명의 병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 최신형 탱크 ‘아르마타’ 등 주요 전략무기체계가 대거 참여하였다.

해군은 2018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건조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2017년에 중국과 정례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제고하여 역내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2018년 전력화를 목표로 MIG-35 다목적 전투기, SU-57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TU-160 장거리 전략폭격기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미사일군은 2017년 토폴-M 전략핵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하였고, 핵전력 야루스 대륙간탄도미사일 3개 연대를 전력화하였다.

한편 동부군관구는 2017년 TU-95, TU-22를 주력으로 하는 전략폭격기 사단을 창설하였고, 대규모 항공기동훈련, 특수부대 상륙훈련 및 대테러훈련 활성화 등 극동 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함대는 기존의 S-300방공대대를 S-400방공대대로 교체하여 방공전력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에서도 기존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해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노력과 함께 핵개발에 따른 제재 및 고립국면 탈피를 위한 외교활동에 주력해 왔다. 또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해 왔으나,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표방하면서 남북 및 대외관계 개선 등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정립에 주력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 내부 정세 | 북한은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권세습을 공식화한 이후 2011년 12월 17일 최고지도자의 유고에 따라 신속히 권력을 이양하였고, 당·정·군 고위간부들을 세대교체하면서 정권안정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2016년 5월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제7차 당대회와 제13기 제4차 6월 최고인민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동시에 기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고 국무위원장을 정권의 공식적인 최고수반으로 공표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른 제도적·법적 통치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정권 차원에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2017년에는 9월 3일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소위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은 2018년 신년사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핵탄두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 자립성 강화와 함께 주민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4월 20일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공식화한 이후 정권 차원에서 경제 현장 위주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공개매체 등을 통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 증산돌격운동 등을 강조하며 경제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 9일 정권수립일 70주년을 계기로 3년 만에 사면조치를 단행하고 대규모 열병식 및 집단체조와 해외 고위인사 초청,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 탈피를 시도함과 동시에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 및 정책 변화

에 따른 외부 사조 유입과 주민들의 사상이완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사회주의 체제우월성에 대한 선전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북한은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경제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주민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과학교육 발전을 통한 중장기 경제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과학 인프라 증설 및 과학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 대남 정책 |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상황 변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사적 긴장 조성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국제 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 중이던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우리 정부의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대응하여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남북관계는 급랭되었다.

2017년에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개최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악화된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한편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설정하며 '추가적인 핵개발과 투발수단 전력화' 추진을 공언하였다.

2월 '북극성-2형'을 시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하였다. 특히 우리의 제19대 정부 출범 4일 만인 5월 14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정세를 긴장시켰으며, 이후에도 7월 6일 우리의 '베를린 구상' 및 7월 17일 남북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해 제재와 대화는 병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된 가운데 북한이 2018년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에 특사단과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4월 27일에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문점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후 북한은 당국 및 민간차원의 대남접촉을 지속하는 한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26일 4차 남북 정상 회담에 이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5차 남북 정상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며 「9월 평양공동선언」,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호응하고 있다. 한편 전력증강 등 안보 현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선전매체들을 활용하여 선별

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경제 활로 마련에 유리한 외부적 환경 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적십자 및 군사,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 간 접촉을 상시화하고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관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당국 및 민간 투트랙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 대외 정책 | 북한은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2018년 들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미 정상 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탈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2·29 미북 합의」²⁵⁾ 과기로 미국과의 공식적인 대화가 단절된 이후, 미국의 계속된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였다. 특히 2017년 1월 미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한 가운데 8월 ‘괘 타격계획’을 공개하고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일환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11월에 발사하였다. 그러나 2018년 3월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이후 4월 20일 ‘핵·ICBM 모라토리엄’ 선언에 이어 5월 24일 외신기자단을 초청하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6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하였으며, 7월 27일 미군 유해 송환과 함께 동창리 엔진시험장 시설물 일부를 해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등을 포함한 북미 간 후속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일 관계는 2014년 5월 양국 간의 「스톡홀름 합의」²⁶⁾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들어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 일본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협의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일 정상 회담 추진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 대북 압박 정책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북일 간 대화는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 관계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부침이 반복되었다. 2016년 이후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북중관계는 경색되었으나, 2018년 들어 북중 양국은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은 3월 1차 북중 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 정상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25) 2012년 2월 29일 미국의 대북지원을 대가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합의

26) 2014년 5월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재북 일본인을 재조사하기로 합의

시도하고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 대표단의 방중을 통해 북중 간 경제협력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러 관계는 2011년 북러 정상 회담을 통해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한 이후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금년 러북 수교 7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014년 소치 올림픽,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계기로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하여 친선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2018년 5월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 시 북러 정상 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등 북러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 군사전략 |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²⁷⁾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세습 이후에도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시도하는 한편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WMD²⁸⁾,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왔다.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육성 및 최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사이버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그간 전략적 환경 변화에 맞춰 군사전략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 등에 따라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군사지휘구조 |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서 국방전력건설 사업을 비롯한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의 총정치국은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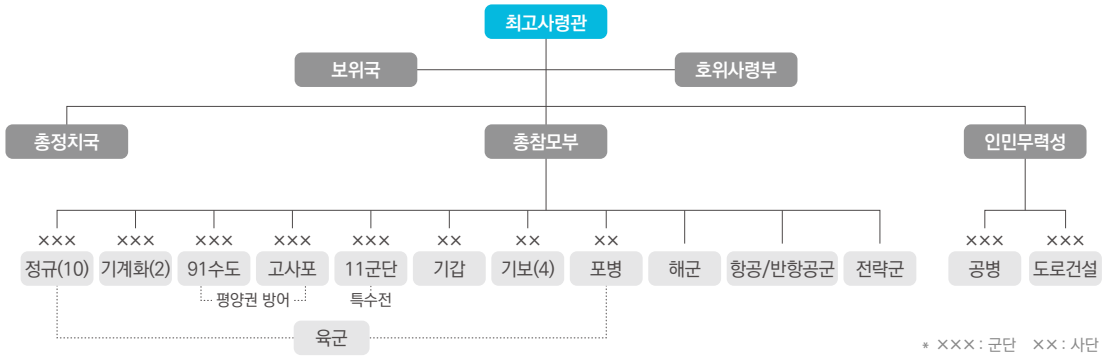
27) 북한 헌법 제60조에서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

28) 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 1-2]와 같다.

[도표 1-2]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3. 군사능력

| 육군 |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²⁹⁾, 고사포군단, 11군단³⁰⁾,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³¹⁾ 구축을 통해 C4I³²⁾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수행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최근 개발이 완료되어 일부 배치된 300mm 방사포³³⁾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29) 구(舊) 평양방어사령부

30) 전략적 특수전부대, 일명 폭풍군단

31) 지휘관의 결심 및 타격을 지원하는 체계(GS-2000)

32)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33) 수차례의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2015년 10월 당 설립 70주년 열병식에서 실(實)장비를 최초 공개

가능하다. 또한 122mm와 200mm 견인방사포³⁴⁾를 추가 생산하여 전방과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최근에는 사거리 연장탄 및 정밀유도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³⁵⁾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갑 및 기계화부대는 선군호 및 준마호 등 신형장비를 추가 생산하거나 부분 성능개량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요인 암살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³⁶⁾를 창설하였고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하는 등 특수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3]과 같다.

【도표 1-3】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 장비

			
전 차 4,300여 대	장갑차 2,500여 대	야 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 **해군** ■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34) 기존 차량에 탑재된 방사포를 평시에는 화포만 운용하고 유사시 차량이나 트랙터 등으로 견인하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방사포

35) 북한군은 방사포탄을 개량하여 정밀유도탄, 사거리연장탄, DPICM(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s)탄, 화염탄, 대공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공중작용탄 등의 다양한 특수탄을 개발 및 운용 중

36) 2016년 11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 TV에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임무 등에 대해 보도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³⁷)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³⁸) 탑재가 가능한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함정으로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 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4]와 같다.

[도표 1-4]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 함정

				
전투함정 430여 척	상륙함정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20여 척	지원함정 4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 공군 | 공군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³⁹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어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⁴⁰와 SA-5⁴¹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 지역에는 SA-2와 SA-3⁴²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GPS 전파교란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교란 장비를 개발하여 대공방어에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7) Very Slender Vessle

38)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39) 기존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 변경(2012년 5월)

40) 최대사거리 56km의 중·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2 : Surface to air-2)

41) SA-2 보완용으로 개발된 최대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5 : Surface to air-5)

42) 최대사거리 25km의 중거리, 저·중고도 표적 요격용 유도탄체계(SA-3 : Surface to air-3)

지상관제요격기,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자동화 방공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5]와 같다.

[도표 1-5]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전투임무기 81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34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해군 포함) 290여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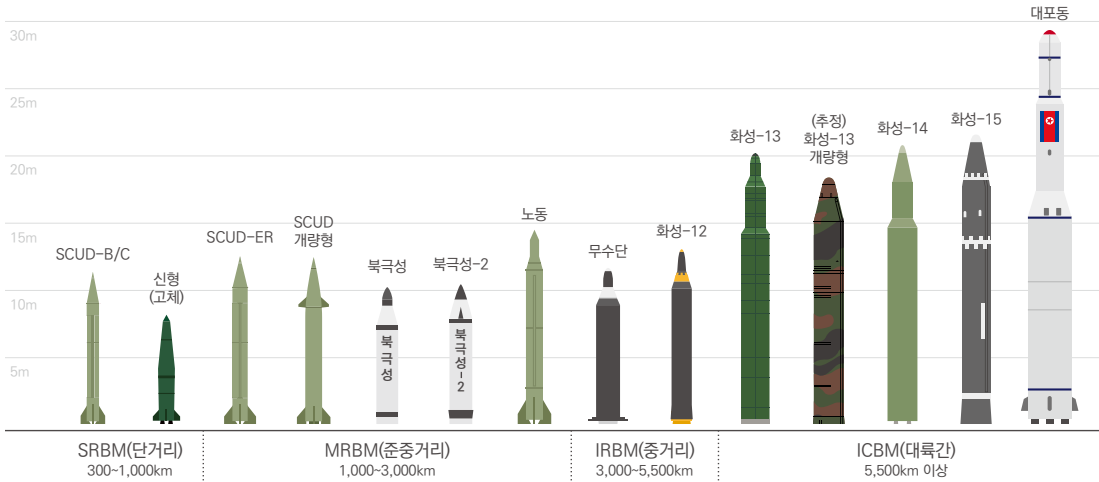
전략군 | 북한은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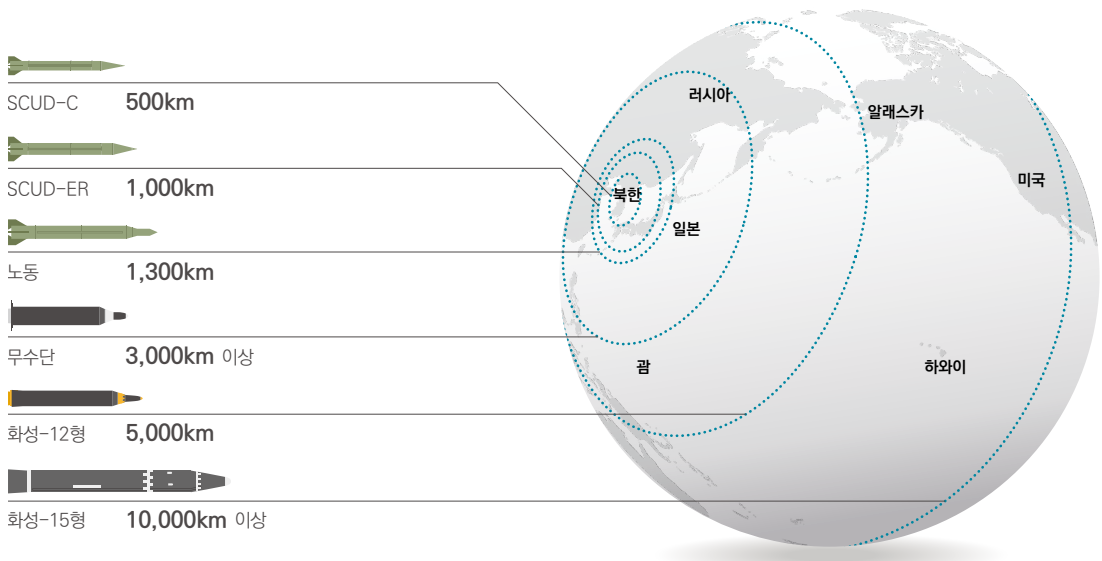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킨드-B와 500km의 스킨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킨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한 스킨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이 현재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는 [도표 1-6]과 같다.

북한은 작전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북극성-2형, 화성-12/14/15형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였다. 특히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으로 발사하였으며, 7월과 11월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그러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도표 1-7]과 같다.

[도표 1-6]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도표 1-7]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속능력 |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 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

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북한 예비전력 현황

구 분	병 력	비 고
계	762만여 명	
교도대	60만여 명	동원예비군 성격(17~50세 남자, 17~30세 미혼 여자)
노동적위군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17~60세 남자, 17~30세 교도대 미편성 여자)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고급중학교 군사조직(14~16세 남녀)
준군사부대	32만여 명	호위사령부, 군수동원지도국 등

북한은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하고 있다.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수공장에서는 전투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비와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30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33
제3절 국방개혁 2.0	37



전군 주요지휘관회의(2018년 12월)

제1절 국가안보전략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선정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100
100대 국정과제

국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5대 국정목표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 국제 사회 공조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의 포괄적인 추진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것이다.

▮ **동북아 및 세계평화·번영에 기여** ▮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환경조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우선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도, 아세안,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 지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국제 테러, 감염병, 난민 문제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 현안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사이버위협, 테러, 재난, 생활 안전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등을 선정하였다.

▮ **한반도 평화·번영의 주도적 추진** ▮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구상’¹⁾ 등의 본격적인 이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확대, 남북합의 법제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으로, 남북관계 상황 변화 등 여건 조성 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 경제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

|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책임국방을 구현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기적 안보 상황에 대비하여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통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이고 강도 높게 「국방개혁 2.0」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외부환경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아울러 장병 인권 보장, 복무 여건 개선 및 선진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균형 있는 협력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안보 및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글로벌 리더십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계로 심화·발전시키는 한편 주변국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²⁾을 추진하여 외교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연재난, 감염병, 마약, 난민 문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동대응하고, 공공외교, 국제경제,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협력과 기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사이버위협,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주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우리 군은 국방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정책 6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튼튼히 하고, 장병들이 가고 싶고 국민들이 보내고 싶은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국방역량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 군사당국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인 위협과 테러·사이버공격·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평화통일 뒷받침 |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이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갈 수도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의 국방역량을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군사적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 우리 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능한 안보’는 우수한 첨단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및 강인한 정신력 등을 토대로 우리 주도의 전쟁 수행능력을 구비하여, ‘강한 힘’으로 대내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튼튼한 국방’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적극 대응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표 2-1]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국방정책 기조 |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을 6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은 물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사이버공격, 테러,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의 확대·발전을 통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전략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할 것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 사회 여건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전반의 효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방비 절감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 장병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군대를 육성할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항

구적 평화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추진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3.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 개념과 군사력 건설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목표 | 우리 군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한다. 군사전략 목표는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 개념 | 우리 군의 군사전략 개념은 안보환경 변화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위협 감소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비통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춘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도발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위기 완화조치를 병행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억제 실패 시에는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

평시 주변국과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고 억제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한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외 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대비와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위협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조기에 안정을 회복한다.

| 군사력 건설방향 |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목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군구조(지휘구조, 부대구조, 병력구조, 전력구조) 개편을 통해 우리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다. 사이버·우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테러, 국제범죄,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체계를 보강한다.

제3절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군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국방개혁 2.0」 추진 배경

필요성 | 우리 군이 직면한 안보환경을 진단해 보면, 안보위협 측면에서는 다양한 전방위 안보위협의 대두와 함께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되고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 이전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주변국들 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군비 경쟁의 심화로 잠재적 위협이 증가하고, 극단주의 이념 확산, 정보화 속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 등으로 인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확산될 것이다.

국방 여건 측면에서는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2년 이후 병역자원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경제 여건 고려 시 국방 분야로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해 국민들은 선진사회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정치 관여, 방산 비리 등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된 상황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정책추진 여건 제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성적인 국방 발전과는 수준을 달리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국방개혁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은 2006년도



국방개혁 2.0

에 수립한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매 정부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국방개혁은 지연과 차질이 반복되면서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존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교훈을 토대로 국방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 차별성 | 「국방개혁 2.0」은 이러한 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기존 계획과 달리 실행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동력을 확보하였다. 2006년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은 당시 정부의 잔여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획이 완성되어 추진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개혁 2.0」은 현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잔여 임기 동안 충분한 동력을 유지한 채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 분야로의 재정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추진에 필수요소인 전력증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고, 「국방개혁 2.0」은 국방운영의 효율화 및 인력운영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인식하여 60여 개의 법령 제·개정 소요를 식별하였다. 이 중에서 법률은 17개 중 현재 14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을 목표로 모든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법령 개정 지연에 대비하여 법령 개정 전에도 국방부 훈령이나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착수 가능한 개혁과제는 우선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성원임을 철저히 깨달아 국방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국방개혁 2.0 목표와 추진기조

| 목표 |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는 것이다. ‘강한 군대’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의미한다.



▣ **추진기조** ▣ 국방개혁의 추진기조는 첫째,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간, 병과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군인과 국방관련 공무원·민간인력의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의 문민화를 지속 이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둘째,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지능화된 감시-타격체계, 과학화 훈련체계, 스마트 병영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고, 부대 및 전력구조 정예화는 물론 국방운영과 병영문화를 포함한 국방 전 분야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선도와 방위산업 증진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민·군 협력 등을 통한 국가 자원을 국방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방재원의 제한을 완화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및 복지 구현과 국방 전반에 대한 개방성 제고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42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51
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59
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62
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67
제6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70



각 군 주요 전력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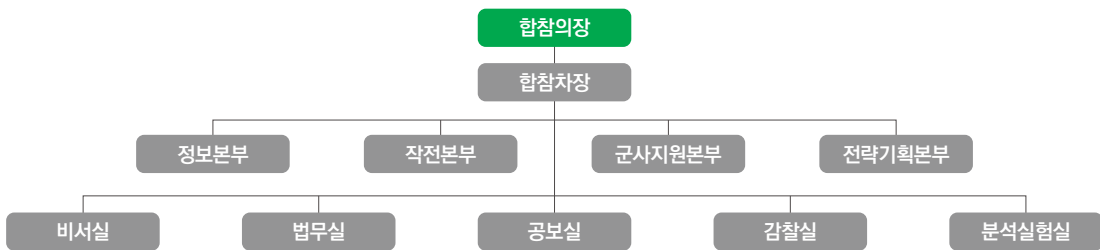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다양한 국지 도발 및 전면전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관리를 위해 조기 경보태세 확립, 위기관리체계 발전,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침투·도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하여 전시계획 발전,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극대화 등 군사대비태세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쟁지속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력과 장비·물자를 획득·유지하고 있다.

1. 군사조직 및 보유 전력

| 합동참모본부 조직 |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과 계엄업무 등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¹⁾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1) 1948년 연합참모회의, 1954년 합동참모회의, 1961년 연합참모국



대한민국 국군
공익광고

합참은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임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래합동작전수행에 최적화된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육군 |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전차, 장갑차, 야포/다련장은 해병대 전력 포함
 * 지상작전사령부 : 2019. 1. 1. 부 창설, 동원전력사령부 : 2018. 4. 6. 부 창설

지상작전사령부는 작전지역 내에서 모든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다양한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민·관·군 통합작전으로 합동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한다. 특수전사령부는 전시 특수작전과 평시 평화지원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작전을 수행한다.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의 평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여 전시 상비병력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동원사단 및 보충대대를 군단에 제공한다. 그 외 사령부는 인사 및 군수지원, 교육훈



육군
홍보 영상



육군 드문넷
전투단 창설

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미래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신속결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를 개편하며, 정찰·공격·전자전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봇 전투체계²⁾ 등 감시·정찰능력과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다련장로켓³⁾ 등의 기동 및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해군 |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 병력은 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⁴⁾, 대잠작전⁵⁾, 기뢰작전⁶⁾,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 해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전략 도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 2) 드론(Drone)과 로봇(Robot)의 합성어로 유인 전투체계의 능력을 보완·대체하기 위한 유·무인 전투체계
- 3)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시스템으로 다량의 화력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무기
- 4) 수상전투함, 잠수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 통제권을 확보·유지하거나 적의 수상세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
- 5) 적 잠수함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켜 자유로운 해양 사용을 보장하는 작전
- 6) 기뢰를 사용하여 적 해군 세력을 차단 또는 무력화하거나 적의 기뢰 사용을 거부하는 작전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기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차기구축함, 차기호위함, 차기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입체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 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 공군은 공군본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도표 3-4] 공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⁷⁾, 항공차단작전⁸⁾, 근접항공지원작전⁹⁾을 비롯하여 핵·미사일·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공중전투사령부는 공군작전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전술임무기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공중기동, 감시정찰, 특수임무 및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하고, 공중기동전력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한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탄도탄 및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7) 공중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항공 우주력과 방공체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CA : Counter Air)

8) 적의 군사력이 사용되기 이전에 차단·교란·지연·파괴하여 적 전력의 증원·재보급·기동성을 제한하는 작전(AI : Air Interdiction)

9) 아군과 근접하여 대치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을 공격함으로써 아군의 공격, 반격 또는 방어작전을 지원하는 작전(CAS : Close Air Support)



공군
홍보 영상

공군은 F-35 등 최신에 전투기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¹⁰)를 도입하여 공중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¹¹’과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¹²’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 연합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10) Unmanned Aerial Vehicle

11) 연합사의 위기조치 절차 중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행동 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

12) 한미 연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증원부대의 부대전개목록과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우리 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한미 간 전체적인 전투력이 약화하는 일이 없도록 미 증원전력 전개계획 발전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국지 도발 대비태세 유지

| 감시 및 조기 경보태세 확립 |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연합정보자산을 통합 운용하여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보하는 상시 감시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정보자산을 통한 첩보 외에도 대내외 유관 기관의 관련 첩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정보를 작전 부대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다목적 실용위성, 군정찰위성 등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위기관리체계 발전 |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주도의 위기관리체계와 한미동맹의 공동 위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기초로 안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발전시켰다. 또한 주기적인 위기관리연습을 실시하여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부대별 위기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등 상시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 접적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오랜 기간 북한은 접적 지·해·공역에서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를 비롯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도에 구축 완료된 접적지역 일대의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최적화된 상태로 발전시켜 경계태세를 질적으로 격상시켰으며, 능동적인 DMZ 작전¹³⁾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화력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피호와 방호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다련장로켓을 추가 배치하였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불가침부속합의서(1992)」를 통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사항에 합의한 바 있으나, 그동안 북한은 북방한계선 무실화를 위해 북방한계선 침범, 무력도발 등을 지속하였다. 현재 남북은 「판문점선언(4. 27.)」을 통해 합의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13) 불규칙적인 수색 정찰, 추진철책 관리 강화 등

서해상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해 평화 수역 설정은 북방한계선을 인정·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과 공동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무인항공기, 해상작전헬기, 단거리지대지유도무기 등 감시·정찰·타격전력을 지속 보강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전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중감시 및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여 탐지·식별·추적·타격 절차 등 방공작전 수행체계를 보완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감시·결심·타격 체계를 최적화하고,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할 것이다.

|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 우리 군은 수도권과 후방지역의 국가 중요시설 테러,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유관 기관 간 통합방위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 수행태세 완비를 위해 민·관·군·경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발 유형별 작전계획 및 대응 매뉴얼을 발전시키고 주기적인 통합방위연습 및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테러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 대테러 특공대 및 유형별 대테러 작전부대를 지정하고,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대테러 작전수행 및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¹⁴) 전파 교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호협업체계를 갖추고 위성항법장치 전파혼선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사이버공격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4) Global Positioning System



독도 홍보 영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도표 3-6]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영역



*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 |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유지·증강하고 있으며, 전력 대부분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유사시 추가적인 전력 재배치나 조정 없이도 기습 공격과 속전속결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공동의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¹⁵)·을지프리덤가디언(UFG¹⁶) 등 연례적인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PX¹⁷)을 통해 이를 검증·보완하고 있으며, 독수리(FE¹⁸)훈련·호국훈련 등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FTX¹⁹)을 통해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다만, 2018년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의하에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등 일부 연합연습·훈련을 유예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승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연합·합동전력을 운용하여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공간 등 전 영역에서 동시·통합작전을 수행하고 조기에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단기간에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것이다.

|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양국 군은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전쟁지속능력 확충 | 전쟁지속능력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 유형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군은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해 전시 소요와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물자를 획득·유지하고 있으며, 조달·정비지원·물류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민·관·군과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통합 활용함은 물론 국제군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15) Key Resolve

16) 전시 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연합연습으로 정부의 을지연습을 병행(UFG : Ulchi-Freedom Guardian)

17) 각급 제대의 지휘관과 참모 조직의 임무 수행연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통신을 유지하면서 지휘소 이동·운용, 지휘·참모활동 절차 연습,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의 적용 등을 숙달(CPX : Command Post Exercise)

18) Foal Eagle

19) Field Training Exercise

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및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왔다.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다.

1. 전방위 핵·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대응능력 발전

|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및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²⁰을 토대로 연합 억제·대응능력을 향상해 왔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전략으로서 미국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확장억제²¹ 개념보다 한 단계 발전된 억제·대응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북한이 핵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모든 위기상황별로 이행 가능한 군사·비군사적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미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억제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²²),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²³) 등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차관보급 정례 협의기구로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²⁴)와 함께 매년 전·후반기에 각각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양한 억제·대응 방안들을 중점적

20)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했으며, 미국이 동맹국과 수립한 최초의 억제전략으로서 일반적인 '확장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된 전략 개념

21)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개념

22)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23)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tation Group

24)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연습²⁵⁾을 매년 실시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기획, 위협 평가, 지역 안보협력, 능력 발전, 전략적 소통, 연합연습 등 6개 분야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외교 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례 협의기구로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



한미통합국방협의체(2018년 7월)

회의는 외교·국방장관회의와 격년으로 개최하고,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는 본회의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미는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 수단을 군사(M)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정보·경제(DIE) 영역까지 확대하여 억제·대응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2018년 1월 제2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에서는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 확장억제 협력체계 발전 등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군사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한미 간 고위급 정책·전략 협의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보여준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2018년 2월 초 발간된 미국의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²⁶⁾이다. 국방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작성 방향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연합억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발전 | ‘맞춤형 억제전략’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으로 대비하는 개념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일명 4D²⁷⁾ 작전개념)’이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탐지, 교란, 파괴, 방어(4D)의 모든 분야에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한다는 의미이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4D 작전개념’을 합의한 이후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4D 작전개념’에 기반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수행과 능력향상에 대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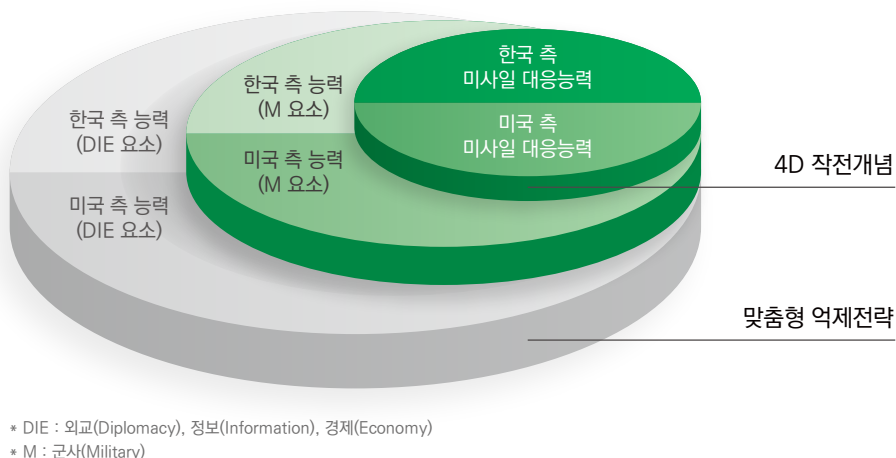
25) 가상의 시나리오 상황 아래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토의식 연습(Table Top Exercise)

26) 역대 4번째 NPR(1994·2001·2010·2018)로서 미국 행정부의 핵 정책·전략·전력·태세 구축 관련 대통령 지침을 담은 문서

27) 탐지(Detect) : 정보·감시·정찰(ISR)자산을 운용하여 교란·파괴·방어 지원
교란(Disrupt) : 북한 미사일 운용을 지원하는 고정 기반시설 타격
파괴(Destroy) : 북한 탄도미사일 및 이동발사대(TEL) 직접적 타격
방어(Defend) : 우리 측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체적 지침을 반영한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하였다. 2016년 이후 한미는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 등 5개 분야에 대한 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도표 3-7]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개념



* DIE :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y)
* M : 군사(Military)

|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구축 |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4D)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한국형 3축체계는 기존 북한 위협 중심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적 타격체계²⁸⁾’는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²⁹⁾와 응징적 억제³⁰⁾를 통합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원거리 감시능력 및 정밀타격능력 기반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다층방어체계로 탐지체계, 지휘통제체계, 요격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군은 전방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 가능 지역을 확대

28) 기존의 Kill-Chain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체계를 포괄하는 개념

29)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에게 침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30) 보복 위협을 통해 예상하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상대방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

하고 요격능력을 향상해 한반도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다층방어³¹⁾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현재는 탄도 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엇 등을 전력화하여 수도권 핵심시설 및 주요 비행기지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미사일 대응능력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향후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 정책 지원 |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근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다양한 국방외교 채널과 국방협의체를 활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군의 정보 및 군수지원, 통역, 검증 등 지원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 검증 시 활용 가능한 군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지원소요를 염출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때까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전력증강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완료되고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그 시점에서의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와 전력소요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2. 화학·생물 위협 대비 능력 발전

| 화생방 대비태세 발전 | 우리 군은 화학·생물무기 공격 위협과 화생방 사고·테러, 질병 등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이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제대별 화생방부대는 오염지역 정찰과 제독임무를 수행하고, 화생방 테러작전 지원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³²⁾)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의 화생방특수임무대대가 전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방독면·보호의·제독제·치료제 등 방호장비 물자를 확보하고 화생

31) 복수의 요격체계로 적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 교전이 가능한 방어체계

32)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Rapid Response Team

방 방호시설도 구축하는 등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민·관·군 통합훈련 및 유관 부처 협조체계 발전 | 화학·생물무기 테러 및 공격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민·관·군 통합훈련과 유관 부처 간 협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공격 및 테러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³³⁾,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화랑훈련³⁴⁾ 등과 연계한 민·관·군 통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범국가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국가방사능 방재 합동훈련³⁵⁾,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생물테러 모의훈련³⁶⁾ 및 생물테러 종합평가대회 등을 통해 유관 기관 간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화학·생물무기 공격 및 테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보전파체계, 감시·탐지·식별 및 정보공유체계, 제독 및 치료체계 등을 발전시켜 범국가적인 대비·대응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이다.

국제 협력 발전 | 우리 군은 화학·생물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유사시 위협 대비 공동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국장급 연례 협의체인 대확산회의(CPWG³⁷⁾)를 양국 유관 기관의 참여하에 운용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회의 명칭을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CWMDC³⁸⁾)로 변경하여 정책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2011년부터 한미 생물 위협 대비 국가적 통합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매년 실시해 왔는데, 2017년부터는 한미 화생방 대응연습(Adaptive Shield)으로 대체하고 훈련 범위를 화생방 전 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미 화생방 대응연습은 한반도 내 발생 가능한 화생방 관련 위기 대응시스템 점검과 범국가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토의식 군사연습이다. 이를 통해 화생방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량 피해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대응체계도 향상하고 있다.

또한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 양국 화생방방호사령부 및 유관 기관 간 다양한

33) 범국가적 재난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참여하는 훈련

34) 전·평시 적의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경 참여하에 격년마다 실시하는 후방지역 통합방위 종합훈련

3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2003년부터 격년마다 원전시설별로 실시하는 훈련

36) 17개 광역자치단체별 1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과 전국 110여 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

37)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

38)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³⁹)과 생물무기금지협약(BWC⁴⁰) 가입국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검증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⁴¹)의 군 기관에 대한 정기사찰 시 국가 호송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약 준수 및 이행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05년부터 매년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화학 테러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화학무기금지기구 국제화학방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간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 향상해 나갈 것이다.



국제화학방호교육 실습(2018년 9월)

3. 국방우주력 발전

| 국방우주력 발전 기반 강화 | 국방부는 중기적으로 우주공간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방우주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방우주력 발전 여건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방부 우주조직 설치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 채널을 운영하여 국방우주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우주에서 효과적인 합동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사우주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및 군정찰위성 등의 우주전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8년 2월 국가 중기 우주개발정책 기조와 계획을 수립하는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개정에 참여하여 정찰위성 확보와 우주감시기관 역량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우주 안보환경과 우리의 국방우주력 현황을 반영하여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되는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를 통해 주변국들의 급속한 우주개발 확대 등 변화된 우주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목표를 재정립할 것이다. 또한 정책기반 구축, 운

39) Chemical Weapons Convention

40)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41)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 확대 등 4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우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보 분야의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협의하는 등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국방우주력 발전의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기반의 국방우주협력 발전 | 국방부는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 민·관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러 분야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미 국방부와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관련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11차례의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개최하여 국방우주정책 관련 정보공유,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상황인식⁴²⁾ 협력, 국제우주상황 조치연습 참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4년에는 한미 간에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시로 미국의 전략사령부로부터 우주물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2015년에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을 설치하여 우주통제 기반능력을 확보하고, 우주정보 분석, 위성 충돌위험 예상 시 관련 기관 전파 및 상황조치, 연합연습 시 우주상황조치연습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정보상황실은 2018년 4월 중국 우주 정거장 텐궁의 추락정보를 미 전략사령부로부터 제공받아 정부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우주물체 추락에 적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한미 국방부는 2017년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을 최초로 실시하여 한반도에서의 항법위성·통신위성 교란 등 우주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위협상황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 국방 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에서 양국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우주 전문인력 양성 협력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42) 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험에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예보, 경보)하는 개념(SSA :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양국은 앞으로도 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 및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주정보 공유 및 인력양성·기술교류를 활성화하며 우주 연합연습 시행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주권 국가의 핵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군사목표 달성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테러부대의 장비·물자를 보강하는 등 테러 대응체계와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1.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군은 2010년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하지만 2016년 국방망 해킹사고 및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 논란 등으로 국방 사이버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많은 국가가 사이버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사이버사령부를 설립하거나 육·해·공군과 별도로 사이버군을 창설하는 등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는 도전적인 비전하에, 사이버공간을 정확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창출·유지·보호하고, 사이버전장에서 적대세력에 비해 사이버공간 활용의 우위를 보장한다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조직, 인력, 전력, 제도 분야의 전략과제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와 10대 실행과제를 선정하였다.

|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 국방 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의 군사대응행동을 '사이버작전'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 사이버조직의 임무와 업무 수행체계를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국방부는 사이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합동참모본부는 전군의 사이버작전을 지휘하며, 사이버사령부는 전군 차원의 사이버보안 및 작전의 최종실행 책임부대 역할을 수행한다. 각 군 본부 및 각급 부대는 소관 영역과 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과 방어작전을 책임지게 된다.

| 사이버사령부 조직·기능 전면 개편 | 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할 예정이며, 합참의장의 지휘에 따라 사이버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부대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폐지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였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과 선제적 예방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보작전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작전지원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며 부대 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수 사이버 인력 확보 및 양성 | 국방부는 군 정예의 사이버전사가 사이버전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관리와 교육훈련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등 신분별로 맞춤형 인사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교와 부사관은 사이버 전문 특기를 신설하고 보직 경로를 설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군무원은 사이버직렬을 신설하여 민간 우수인력의 군무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사이버전문병으로 선발하여 군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정예 사이버전사 양성을 위해서 국방 사이버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사이버전 훈련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격 시나리오에 따른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 사이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버전력체계도 기술변화의 속도에 맞춰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사이버공격의 전술기법절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중방어 개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사이버작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사이버 국제협력 적극 동참 |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국제규범 수립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사이버 신뢰구축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며,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채널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사이버 분야 다자간 실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영국 런던 및 프랑스 니스 차량돌진 테러, 인도네시아 연쇄 폭탄테러, 이집트 모스크 테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테러 양상은 주체와 수단, 대상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있으며 테러 발생국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사제총기 난사, 2017년 연세대 텀블러 폭발 사건 등은 국내에서도 사회 불만 계층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군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대응체계와 대테러작전부대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개정을 통해 유관 기관과 테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키고 전담조직별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하였으며,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함으로써 대테러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2017년부터 5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 대테러작전부대에 최신 장비 및 물자를 보급하여 작전수행능력과 생존성을 향상했다. 또한 지역 단위로 지정된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유형별 대테러부대를 패키지화하여 다양한 테러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 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시 대테러와 안전활동을 완벽히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회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제적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대테러 회의와 대테러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 대테러 협력 및 공조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내외 테러 위협에 대응하여 민·관·군·경이 통합된 작전수행체계 및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제 사회 및 우방국과의 대테러 연합훈련과 위탁·수탁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 대테러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평창올림픽 대비 대테러 훈련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신종 테러' 등 완벽 대비

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국방부는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 내 재난 발생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재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재난 발생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에 대한 국제적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재난 긴급구호체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군 내 재난 예방 활동 강화 |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군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군부대가 산악 지역에 있고 노후 시설도 산재하여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이에 우리 군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재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군 내 노후 시설과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 속 안전점검 활동과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내실화하고 있으며,⁴³⁾ 재난안전 대비활동 및 유사시 행동절차 숙달을 위한 지휘관 중심의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재난 예방, 대비, 복구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민·관·군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 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최신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매뉴얼을 실제훈련에 적용·보완하고 있다.⁴⁴⁾ 특히 2018년 5월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송파구청과 송파구 내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이 참여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을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학사에서 실시하여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⁴³⁾ 2018년의 경우 68일간(2. 5. ~ 4. 13.) 군 시설 약 94,000여 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식별된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조치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즉시,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관리

⁴⁴⁾ 2018년에는 296회의 민·관·군 합동훈련에 1만 5,800여 명의 군 병력이 참가하여 상황 조치능력을 숙달하였음



대형화재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2018년 5월)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훈련(2018년 5월)

육·해·공군 각급 부대에 400여 개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군 내 재난 발생 상황은 물론, 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긴급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주관으로 매년 시기별로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각급 부대 재난관계관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국가재난 지원체계 구축 | 최근 지진, 산불, 가뭄, 집중호우 등 재난이 대형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 재난 극복을 위한 대민지원활동 또한 군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를 위해 91만 2천여 명의 병력과 2만 8천여 대에 이르는 장비를 지원하였다.

2017년 5월 강릉·삼척·상주 지역 산불 및 2017년 7월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복구지원 활동을 하여 지자체의 복구 비용을 절약하고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생활 터전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 시에는 5천 8백여 명의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담장파손 잔해 제거, 기와복구 지원 등 민간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제설작업, 행사진행 지원 등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군 내외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 10월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복구 시 6천여 명의 병력으로 해변 부유물 제거, 침수 가옥 정리 등을 하였으며, 7~8월 폭염 시에는 장비 867대와 2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온도



강릉·삼척·상주 산불 잔물 정리(2017년 5월)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장 제설 지원(2018년 3월)

저감 살수지원 및 농업용수·급수를 지원하였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활동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생업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표 3-8] 최근 5년간 대민지원 현황

2018년 11월 30일 기준

연 도	지원 내용	지원 인력(명)	장비(대)
	총 계	912,266	28,115
2014년	집중호우 및 태풍(나크리), 폭설 피해 복구	146,733	2,532
	AI, 소나무 재선충 방제	70,907	204
	세월호(실종자 수색·구조, 운구·의료지원)	370,710	11,387
	산불 지원, 해양오염, 건축물 붕괴 지원	6,682	135
2015년	산불 지원	15,654	443
	실종자 수색·구조	8,419	185
	구제역, AI, 소나무 재선충 방제, 메르스 의료지원	12,339	480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고니), 폭설 및 건축물 붕괴 피해 복구, 해양오염 지원	11,973	2,278
2016년	산불 지원	5,180	180
	구제역, AI, 소나무 재선충 방제	5,658	577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차바), 지진 피해 지원	55,227	594
	폭설 및 건축물 붕괴, 해양오염 피해 복구 지원	5,573	47
	실종자 수색·구조	2,111	95
	철도·화물 노조 파업 지원	35,410	400
2017년	산불 지원	23,707	169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39,003	1,736
	실종자 수색·구조	2,473	152
	구제역·AI 방제	33,042	3,279
	폭설, 지진 피해 지원	17,474	659
2018년	산불 지원	8,636	186
	가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원	16,125	1,049
	해양 실종자 수색·구조, 해양오염 피해 복구 지원	1,249	199
	구제역·AI 방제	10,133	1,136
	폭설, 지진 피해 지원	7,848	13

2. 해외 재난 긴급구호체계와 국제협력

| 해외 재난 긴급구호 지원 및 협력 강화 |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재난은 해당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복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대규모 해외 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파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은 [도표 3-9]와 같다.

[도표 3-9] 최근 10년간 해외 재난구호 지원 현황

시 기	지역(재난)	지원 내용
2008. 5.	중국(대지진)	● 수송기(C-130) 3대, 군용 텐트 등 구호물자 26.6t
2009. 11.	캄보디아(태풍)	● 수송기(C-130) 1대, 생필품 등 구호물자 7t
2010. 1.	아이티(지진)	● 공군 구조사 1명(의료지원)
2010. 3.	칠레(지진)	● 군용텐트 136동
2011. 3.	동일본(지진, 해일)	● 수송기(C-130) 10대(총 4회), 구호물자 58.8t, 구조대 102명 수송
2011. 10.	터키(지진)	● 군용 텐트 100동
2013. 11.	필리핀(태풍)	● 수송기(C-130) 9대(총 4회), 구호물자 329톤, 구조대 포함 2,022명 수송
2016. 4.	일본 구마모토현(지진)	● 수송기(C-130) 2대, 구호물품 11만 달러(천막, 담요, 햇반, 생수)
2018. 7.	라오스(뎀 사고)	● 수송기(C-130) 5대(총 3회), 구호물자 23t, 의료팀 20명 수송
2018. 10.	인도네시아(지진)	● 수송기(C-130) 3대(10. 8. ~ 11. 30.), 텐트 170동, 국제구호물자 456t 수송
2018. 10.	사이판(태풍)	● 수송기(C-130) 1대, 피해지역 고립 국민 799명 이동 지원

또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에 대한 국제적 공조활동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해외재난 긴급구호체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세안 재난구호 민간협력회의와 아세안 군 의료 및 재난구호 연합훈련 등 5회의 국제회의와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다국적 연합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연습과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재난구호 분야 회기 간 회의 등 6회의 국제회의와 훈련을 통해서 국제기구들과 체계적인 재난구호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태국 국방부 재난구호 분야 대표단이 방한하여 우리의 기상예보, 재해·재난 통

제시스템을 견학하고 재난구호를 위한 상호 관심사를 토의함으로써 한국-태국 재난구호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전문가 실무회의와 도상훈련 등 6회의 국제회의와 훈련에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태국 국방부 재난구호 대표단 방한(2017년 8월)



ADMM-Plus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전문가 실무회의 (2018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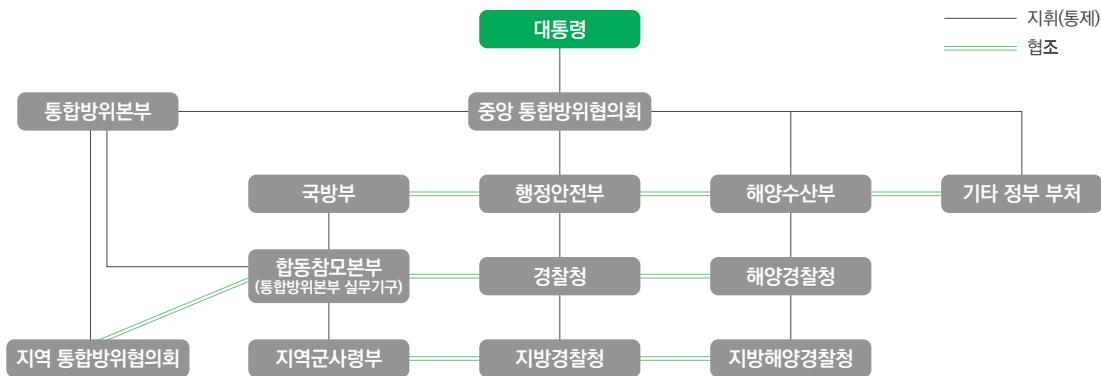
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리 군은 증대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1. 통합방위기구 운용

정부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본부,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통합방위기구를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는 [도표 3-10]과 같다.

[도표 3-10] 통합방위 지휘 및 협조체계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통합방위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가 차원의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지침,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⁴⁵⁾

45)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부처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업무를 주관하는 기구로 합동참모의장이 본부장이 되며,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인·감독,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 수립, 통합방위작전·훈련에 관한 지침 및 계획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통합방위 관계 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 226개의 시·군·구에 설치되며 의장은 광역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⁴⁶⁾, 통합방위작전 지원 대책 수립, 취약지역 선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되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2. 통합방위 수행체계의 개선 및 발전

안보영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방위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중앙통합방위회의의 개최 50주년의 해로서 핵, 테러, 생화학 위협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테러 대비 방안, 핵·사이버위협 대비 방안, 재해재난 시 국민안전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제50차·제51차 두 차례의 중앙통합방위회의의 결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17개의 후속조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통해 분기 단위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또한 통합방위본부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후방지역 종합훈련인 화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대전·충남·세종, 제주, 서울, 전남·광주 등 4개 권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8년에는 부산·울산, 경남, 충북, 인천·경기, 전북 등 5개 권역 7개 시·도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켰다. 특히 2018년도부터 화랑훈련의 평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통합방위본부를 주축으로 정부통합평가단⁴⁷⁾을 통해 유관 기관을 전담 평가함으로써 훈련 통제력을 강화하고 평가 수준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6)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시·도 협의회에서만 가능

47)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소방청, 중요시설 소관부처 담당자 30여 명으로 구성

아울러 안보환경 변화 및 각종 연습·훈련 중 도출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

제6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국방부는 실전적인 부대훈련과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방 교육훈련 목표인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 또한 미래전 양상과 전장 환경에 부합한 유능한 간부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복무 간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단기복무 간부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 우수인력 확보 |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병력구조가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이를 운용할 우수 간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향후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면 장교나 부사관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군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복무 간부를 확대하여 직업성을 강화하고 있다. 간부의 정원구조를 중·소위와 하사를 줄여 초임 획득 규모는 줄이는 대신 직업군인으로 장기복무하는 간부를 늘려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의 인력운영체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활용해 군 간부의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단기복무를 희망하는 장교·부사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단기복무 장려금(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중기복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대학 및 전문대 재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하여 학업 기회와 간부 복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군가산복무지원금⁴⁸⁾ 지급 인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인력획득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수한 중·단기복무 간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여성인력의 군 내 활용을 위해 여군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 5.5%이던 여군 비중을 2022년에는 8.8%로 확대하고 여군 소위와 하사의 초임 획득 비율을 2016년 6.5%에서 2022년에는 13.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군 증가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여군 인사관리와 근무 여건

48)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된 후에 기본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는 조건으로 대학 및 전문대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록금 수준의 지원금

을 개선하여 여군의 역량 발휘를 보장하여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 창의적 군사 전문인재 양성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방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군사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군사 전문인재 양성은 전문학위교육과 국외군사교육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문학위교육은 군 교수, 연구개발, 특수기술 분야 등의 군사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다. 국내외 우수 교육기관에서 석·박사 학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래전장 주도를 위해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300여 명을 선발하고 있다.

국외군사교육은 선진 군사지식 습득, 무기체계 운용, 전투기술 숙달 및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이다. 40여 개국의 국방대학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연간 300여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군사의외 영역의 확대와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중동,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파견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다.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 추진 중점 | 국방부는 야전에서 요구하는 정예장병 육성을 위해 민간인을 군인화하는 양성교육, 해당 병과·계급·직책별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잠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보수교육 등 학교교육체계를 효과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교관 중심의 강의 위주 교육에서 교육생 중심의 토론·실습 등 참여형 교육과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첨단무기체계 도입, 과학기술의 발달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우수 간부 육성을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 국방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신병 교육체계 개선, 국방대·합동대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군 및 국직·합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은 [도표 3-11]과 같다.

[도표 3-11] 각 군 및 국직·합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과정 수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국직·합동부대
양성교육	40	20	9	6	4	1
보수교육	1,922	704	690	335	18	175

|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관생도 주도의 토론·발표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행 등 ‘참여형 교

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야전의 요구를 반영한 실전적 군사훈련을 위해 초등군사반 교육과 연계한 생도 훈련목표를 정립하고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관생도들이 타군을 이해하고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2012년부터 3군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견학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1학년 생도들은 과학화 전투훈련과 GOP 부대 주·야간 경계체험 등을 강화한 육군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2학년 생도들은 최초로 해군 함정에 편승하여 국내 주요 도서와 러시아·일본 등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해상훈련을 체험하고 함상 생활을 경험하는 등 해군의 임무와 역할, 영해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정세를 이해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였다. 3학년 생도는 2019년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 작전부대 견학, 특성화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GOP 경계 체험 중인 3군 사관생도(2018년 1월)

|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 | 2015년부터 우수 부사관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년제 전문대학 6곳에 '부사관 학군단'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2017년 1기 145명, 2018년 2기 173명 등 2개 기수가 임관하였고, 현재 부사관 학군단 3기, 4기가 재학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부사관 학군단의 지속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초 임관한 1기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후보생의 자질, 수요자의 필요성, 대학교 선호,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사관 학군단 제도는 지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9년부터 정상 운영 및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국방 온라인 교육 활성화 | 우리 군은 소집교육으로 인한 야전부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다수의 교육생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주로 각급 교육기관의 소집교육과 연계하여 온라인 강의로 사전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소집교육 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과정 이수가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집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야전부대의 근무자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군의 우수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방 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⁴⁹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병이 근무지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교

49) 군사(Military)교육을 수강인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하는(Open), 웹 기반으로(Online) 구성된 강좌(Course)(M-MOOC : Military-Massive Open Online Course)



육·해·공군 사관생도,
해상 합동교육

육을 이수함으로써 군사전문성과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공개강좌는 2015년 합동군사대학교의 작전수행과정, 해양전략 등 7개 강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17개, 2017년 35개 강좌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에는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육군 보병학교 등 16개 기관에서 4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모든 장병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신병 교육체계 개선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신병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최단기간 내에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군사훈련과 병과교육을 실시하고 야전에 조기 보임시킴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군사훈련은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필요한 교과목을 설정하여 훈련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며, 병과교육은 병과별 임무와 역할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전에서 요구하는 과목으로 확대 및 집중 교육하고 불필요한 과목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 국방대·합동대 조직 개편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조직운영 효율성 증진과 비전투 분야의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등 군사교육기관의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정책 분야의 학술 및 교육기관은 국방대학교 중심으로 통합하고, 합동군사대학교는 합동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군 자체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현역 장성이 보임되는 국방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현역 직위를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현역 장병이 수행하던 업무 중 민간인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민간 위탁 또는 민간인력 채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 부대훈련 | 국방부는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전투원 및 전투부대 육성을 목표로 각 군의 실전적 부대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과 과학화 훈련장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은 병력 감축에 따른 군사력의 질적·기술집약형 구조로의 변화와 교육훈련 여건의 제한⁵⁰⁾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 마일즈 장비(MILES)⁵¹⁾,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TMPS⁵²⁾),

50) 사격 등에 의한 소음, 훈련부대 이동 간 교통체증,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훈련장 주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민원이 지속 증대
51) 레이저 발사기와 감지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교육훈련장비(MILES :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52) Tank Multi Purpose Simulator

잠수함 대함 모의훈련장비, 공중전투기동 훈련장비(GPS-ACMI⁵³), 전자전 훈련장비(EWTS⁵⁴)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훈련장비를 활용하는 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과 더불어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군단급과 사단급의 제대 단위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면서 훈련장 권역화와 주둔지별 훈련장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군은 모의훈련장비를 활용한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유도무기 모의전술훈련장 등 과학화 훈련장을 구축하고 함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정손상통제⁵⁵ 훈련이 가능한 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기지방어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고 방공포병 과학화 종합훈련체계 등을 도입 중이다.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TMPS)를 활용한 훈련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요 훈련 | 육군은 전사적 기질과 기풍이 충만한 개인과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악조건하 전투사격 등 전장상황에 부합된 실전적인 훈련과 마일즈 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다양한 분야의 연합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의 공격 양상과 전투상황에 부합된 전투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다양한 적 상황을 가정한 임기표적⁵⁶에 대해 실전적 전투사격을 강화하고 있으며, 야간 실사격 훈련, 실하중하 거점점령 훈련 등 악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훈련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투임무 위주로 체력단련을 강화하고, 개인 및 팀 단위의 최정예 300 전투원을 연 1회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과학화 훈련으로는 마일즈 장비와 모의훈련장비를 활용한 훈련, 전투지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훈련은 주둔지 또는 임의지역에서 쌍방 교전훈련을 실시한 후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훈련결과를 제시하여 전투력을 크게 향상하는 훈련으로 소대급부터 연대급까지 보병부대·기계화부대·특전부대 등 부대 유형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과학화전투훈련단에 포병·전차·헬기 등을 포함한 연대 전투단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장을 확장하고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과학화 전투훈련



중대 마일즈 훈련(2018년 3월)

53)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54)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55) 함정의 평시 태세 유지부터 손상상황 대응 및 복구까지, 모든 손상과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최대의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56)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전투 실시간에 나타나는 표적

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의훈련장비(Simulator)를 활용한 훈련은 가상의 전장환경에서 사격, 조종, 전술모의 등을 훈련하는 것으로 실제 전투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컴퓨터 모의기법을 이용한 전투지휘훈련(BCTP⁵⁷)은 지휘관과 참모의 전투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제대별 부대지휘절차와 통합전투력 운용능력을 높이고 있다. 향후에는 실제지형 훈련상황(Live), 모의장비훈련(Virtual), 컴퓨터 모의기법을 활용한 전투지휘훈련(Constructive), 게임(Gaming)을 연동하는 과학화 훈련(LVCG⁵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외에도 특수작전, 비정규전, 공중침투,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제병협동훈련, 공중강습, 고공강하훈련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2]와 같다.

【도표 3-12】 최근 2년간 육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2017년	44	42	42	-	2	-	2
2018년	33	31	31	-	2	-	2

해군은 동·서·남해 각 해역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실전적 해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휘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협동 및 합동훈련, 연합훈련, 순항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협동 및 합동훈련은 지상·해상·공중의 합동전력이 참가하며, 대함·대잠·방공작전 등 다양한 작전유형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훈련, 서북도서방어훈련, 북방한계선 국지도발 합동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투탄 실사격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2017년 10월)

연합훈련은 연합방위체계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과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연합훈련으로 구분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작전수행능력 제고와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해 해상 대특수전부대훈련, 대잠해양탐색훈련, 상륙전·기뢰전·구조전·해안양륙군수지원 훈련 등 다양한 훈련

57)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58) Live Virtual Constructive Gaming



해군 동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훈련으로는 기뢰전훈련, 코브라골드 훈련,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⁵⁹), 다자간 구조훈련(KOMODO⁶⁰)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색 및 구조훈련(SAREX⁶¹) 등이 있고, 최근에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변국 및 우방국과의 연합 기회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3]과 같다.

[도표 3-13] 최근 2년간 해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2017년	31	27	23	4	4	1	3
2018년	24	19	17	2	5	-	5

순항훈련은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대상의 원양 항해훈련으로 사관생도들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전 세계를 권역별 4개 항로로 구분하여 매년 항로를 번갈아 가면서 약 100~130여 일 동안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훈련 방문국과의 연합 기회훈련, 연합해군 통신훈련 등 군사교류협력뿐만 아니라 6·25 전쟁 참전국 보은 행사와 해외교민 위문 행사, 방산협력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해군은 전장환경 변화와 무기체계 현대화에 따라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모의훈련장비를 활용한 해상 종합전술 훈련장, 유도무기 모의전술 훈련장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함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정손상통제 훈련이 가능한 현대화된 표준훈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주도적인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 대비훈련, 국지도발 대비훈련, 세부 임무별 훈련을 실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시작전 대비훈련에는 공군 단독훈련과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 공군 단독훈련으로 전투태세훈련, 전시 전장공간관리 훈련, 비행단·전투사 공격편대군 훈련,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Soaring Eagle)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훈련으로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 다자간 연합전술훈련(Red Flag-Alaska), 인도 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Cope North)을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연합전술훈련(Red Flag-Alaska)
(2018년 10월)

59) Rim of the Pacific Exercise

60) KOMODO는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의 섬 이름

61) Search and Rescue Exercise

국지도발 대비훈련으로 서북도서 국지도발 대응훈련, 해안침투 합동훈련, 적 특수전부대 해상침투 저지훈련, 야간 침투 및 공격훈련, 항공기 피랍 및 공중테러 대응훈련, 귀순·망명 항공기 유도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 임무별 훈련에는 방어제공훈련, 항공차단/중심전략표적공격훈련, 근접항공지원훈련, 공수/특수 작전훈련, 전투탐색구조훈련 등이 있다. 방어제공훈련은 영공 침범을 기도하는 적의 공중침투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영공침범 대응훈련, 대량 항적 침투대응훈련, 합동·연합방공훈련 등이 해당된다. 항공차단/중심전략표적공격훈련은 전방으로 증원된 적의 지원전력이 우리 군에 위협이 되기 전에 교란·지연·파괴하는 훈련과 적 중심지역 전략표적을 공격하는 훈련이며, 긴급항공차단훈련은 이동표적 탐지 및 공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상군, 미 합동 감시/표적공격 레이더체계(JSTARS⁶²), 특전사 항공기 폭격 유도요원과 연합·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접항공지원훈련은 지상군과 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으로 주·야간, 도시·해상, 후방지역 근접항공지원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특수작전훈련으로는 전시 저고도 침투 및 공수작전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 공중수송훈련, 공중기동기 공중투하 편대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시 전투탐색 및 구조작전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특전사 합동탐색구조훈련, 조명지원하 해상 탐색구조훈련, 전투탐색구조 기동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제 기동훈련 제한에 따른 지상모의훈련 장비, 공중전투기동훈련 장비(GPS-ACMI⁶³), 전자전훈련 장비(EWTS⁶⁴) 등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4]와 같다.

[도표 3-14] 최근 2년간 공군 연합훈련 현황

단위: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소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2017년	20	18	18	-	2	-	2
2018년	21	18	17	1	3	-	3

해병대는 강제진입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상륙훈련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기동부대훈련, 연합·합동훈련, 제대별 전술훈련 등을 통해 최고도의 작전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62) Joint Surveillance & Target Attack Radar System

63) 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64) Electronic Warfare Training System

신속기동부대훈련은 강제진입작전, 서북도서 방어작전, 안정화작전, 비군사작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쌍룡훈련 및 호국훈련 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상륙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연합·합동 강제진입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북도서 증원훈련, 울릉도 및 제주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상륙훈련(2017년 4월)

연합훈련은 한미 해병대 전술제대급 연합훈련(KMEP)⁶⁵⁾을 연 20여 회 이상 실시하여 병과별 능력발전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코브라골드 훈련, 칸퀘스트 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 등의 해외 전지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쿨롱동 훈련, 필리핀 발리카탄 훈련 참관 등을 통해 다국 간 해외 연합훈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은 [도표 3-15]와 같다.

[도표 3-15] 최근 2년간 해병대 연합훈련 현황

단위 : 회

구 분	계	국 내			국 외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소 계	한미 연합	다자간 훈련
2017년	19	18	18	-	1	-	1
2018년	15	12	12	-	3	-	3

제대별 전술훈련은 독립전장을 주도·관리할 수 있는 작전수행 완전성 구비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부대별 특화된 공수훈련, 상륙기습훈련, 유격훈련 등과 연계한 전술훈련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쌍방훈련으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상륙합 탐재훈련 및 대대급 이하 상륙작전 기회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합동⁶⁶⁾연습⁶⁷⁾과 훈련⁶⁸⁾ | 우리 군은 급변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합동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65) 한국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전술 제대급 연합훈련으로 한미 해병대가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KMEP :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66) 동일 국가의 2개 군 이상의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활동, 작전, 조직

67) 작계수행절차 숙달을 위해 작전계획, 교리,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Exercise)

68) 개인과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Training)



2017 해병대
코브라골드
(연합상륙) 훈련

태극연습은 전·평시 작전수행과 지휘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합참이 주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례적인 지휘소 연습이다. 합참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995년부터 태극연습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이후에는 작전사령부(군단급)까지 연습에 참가하여 전구급 합동 지휘소 연습으로 발전되었다. 2005년부터는 합참이 개발한 전구급 합동작전 모의모델인 태극 JOS⁶⁹⁾모델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연습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호국훈련은 제대별 작전계획 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합참이 주도하여 매년 실시하는 전군 차원의 야외기동훈련이다. 2015년부터는 화랑훈련 등 성격이 유사한 훈련과 연계하고 동·서해상 훈련을 통합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작전환경, 훈련 여건, 부대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동작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화랑훈련은 통합방위본부 주관하에 민·관·군·경의 모든 작전요소가 참가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으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작전계획 시행 및 지원절차를 숙달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향후 화랑훈련과 충무훈련⁷⁰⁾을 통합하여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연합⁷¹⁾연습과 훈련 | 한미는 현 연합방위체제하에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연합전력의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투준비태세와 연합작전 수행 및 작전지속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키리졸브(KR)연습 및 독수리(FE)훈련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이다.

키리졸브(KR)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합참이 계획 분야, 대항군 운용, 사후검토를 주도하는 등 우리 군 주도의 전구 연합연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 연합으로 시행되는 독수리(FE)훈련은 후방지역 방호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이다. 2002년부터 훈련의 효율성 제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연합전시증원(RSOI)⁷²⁾연습과 통합하여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이 키리졸브(KR)연습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키리졸브/독수리(KR/FE)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 시행하고 있다.

울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은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으로서 우리 군 단독 및 한미 공동 대응

69) Joint Operation Simulation

70)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태세 유지와 전시전환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71) 2개 이상 동맹국 부대나 기관 간의 협력관계

72) 1994년부터 Team Spirit 훈련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능력 향상, 전면전 시 한미 연합 전쟁수행능력 향상, 정부와 연계한 전쟁수행체계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 단독 태극연습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미 간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연습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과 연합연습 주도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전구연습·훈련체계인 합동연습·훈련체계(JTS⁷³)를 각 군 본부, 작전사, 합동부대까지 확대 적용⁷⁴하여 체계적인 연습·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합동·연합연습을 위한 각종 위게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연습 수행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연합연습·훈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한미는 현 연합방위체제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연습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장병 정신전력교육 강화

| 정신전력교육 체계 및 현황 |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장병 정신전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신병 정신전력교육은 ‘선 정신무장, 후 전투기술 숙달’을 목표로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과제를 집중 편성하여 교육하고 훈련과 병영생활 전반을 정신전력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인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은 학교 정신전력교육과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 정신전력교육은 교관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표·토의식 교육과 교관화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부대 정신전력교육으로는 지휘관 중심의 일일·주간·반기 단위로 집중 정신전력교육을 실시하여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TV와 IPTV⁷⁵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시청하고 장병 스스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현장 체험식 행동화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특히 신문을 활용한 교육기법(NIE⁷⁶)과 영화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강인한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73) Joint Training System

74) 합참은 2012년도, 작전사는 2017년도, 각 군 본부 및 합동부대는 2018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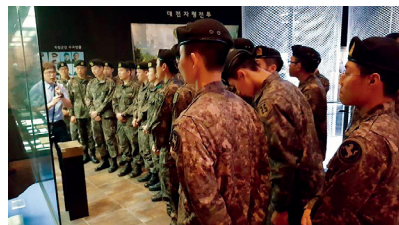
75) 인터넷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76) Newspaper in Education

정신전력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지원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대급 제대의 정신전력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애국심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역사교육 확대 | 장병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에 독립군·광복군 역사교육을 연간 10회 이상 반영하고 독립기념관과 업무협업 프로그램을 전 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애국심·자긍심 고양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장병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양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방문 체험식 역사교육(2018년 1월)

| 국방정신전력원 설치·운영 | 국방정신전력원은 군인정신 함양 및 국가관·안보관 확립에 관한 교육, 정신전력에 관한 전투발전 및 교리연구, 장병 정신전력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을 주 임무로 하는 군 정신전력 전문 교육기관이다.

정훈장교 및 부사관 대상의 필수 보수과정 교육 이외에도 군인정신, 문화예술, 통일안보 등 다양한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병 정신전력 관련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전력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논문 공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장병 인성교육 추진 | 바르고 건전한 민주시민이자 훌륭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창의, 용기, 책임, 존중, 협력, 충성, 정의의 인성교육 7대 덕목을 선정하고 인성교육체계를 정립하였다.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집중 교육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생활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인성교육 민간전문가 집중 교육(2018년 5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84
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87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91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96
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104
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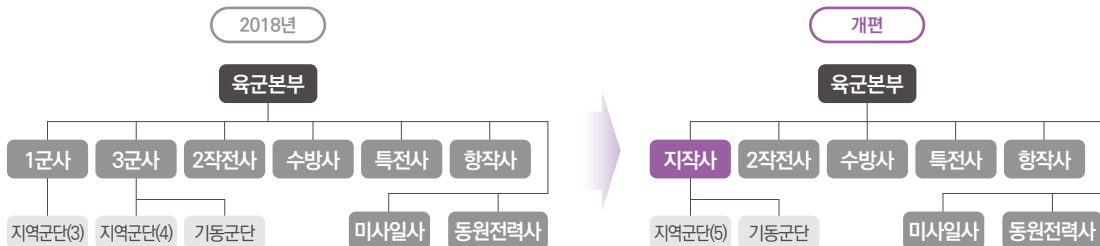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북한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육군은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작전 능력을 보강하여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로 개편하며, 공군은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다층방어 능력을 보강하여 효과 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한다. 국직부대는 임무 수행의 효과성과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것이다.

1. 각 군 부대구조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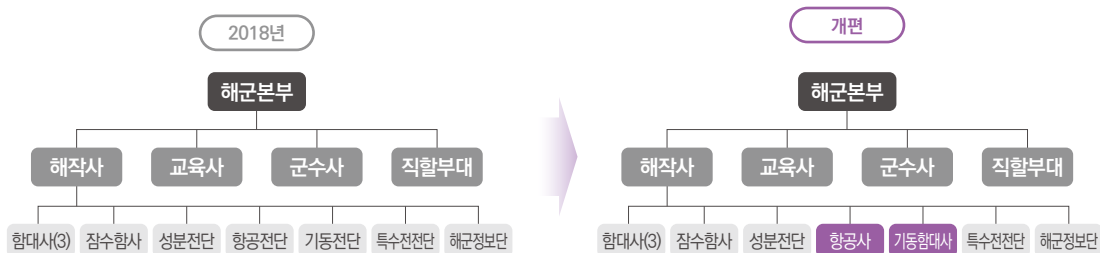
| 육군 | 육군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하여 군단 및 사단 수를 조정하되, 드론봇 전투체계와 위리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할 것이다.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지상작전 지휘 및 수행을 위해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할 예정이다. 2작전사령부는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존 향토사단을 지역방위사단으로 개편하고, 광범위한 후방지역에서의 감시체계 운용, 수색정찰·타격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단과 항공단 등을 편성함으로써 작전수행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할 것이다. 육군 부대구조 개편 계획은 [도표 4-1]과 같다.

[도표 4-1] 육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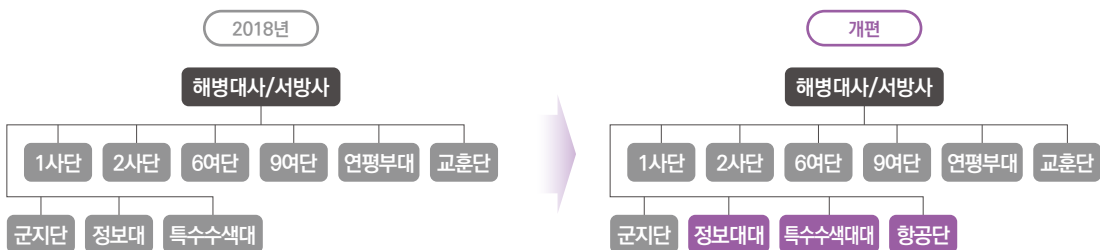
【해군】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해양관할권과 해상교통로 등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다. 기동전단은 원·근해 해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구축함 전력 증강과 연계하여 기동함대사령부로 개편한다. 항공전단은 넓은 해역에 대한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및 해상작전헬기 등 전력 증강 및 임무 확대와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할 것이다.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2]와 같다.

【도표 4-2】 해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해병대】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및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해병대사령부는 군정 기능 수행은 물론 상륙작전 등 연합·합동작전 수행 및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항공단, 정보대대 등을 편성할 것이다. 또한 해병 및 상륙사단은 연대를 정보·기동·화력 능력이 보강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여 전략적 기동부대로서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다.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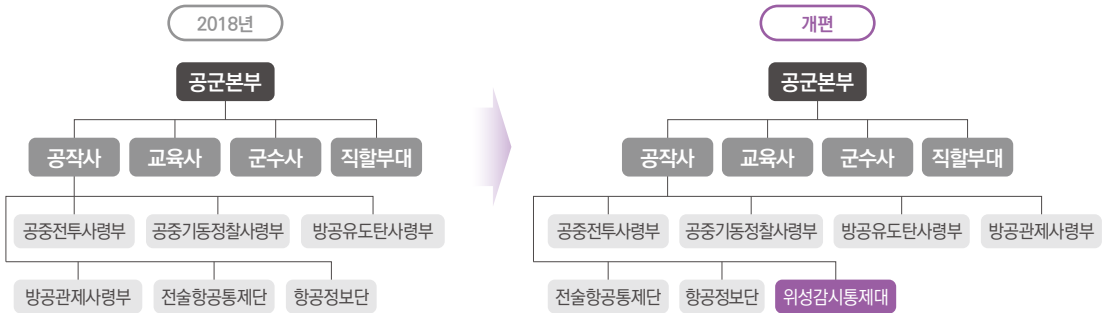
【도표 4-3】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계획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공군 |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전자전기 등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감시통제비행전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한반도 상공의 위성 활동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할 것이다. 또한 복합·광역다층방어를 위해 탄도탄감시대 증편, 패트리엇 성능 개량, 천궁 및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포대 편성 등 방공유도탄사령부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은 [도표 4-4]와 같다.

[도표 4-4] 공군 부대구조 개편계획



2. 국직·합동부대 개편

국직·합동부대는 부대별 임무 수행의 효과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것이다. 27개의 국직부대 중 불필요한 행정, 지원조직을 감편하고, 인력구조를 현역 일변도에서 민간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부 국직부대는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각 군으로 전환시켜 군별 전문성과 특성을 강화하도록 개편할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내 사찰 및 동향감시 등의 임무를 삭제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창설하였으며,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의무개혁 마스터플랜에 따라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최근 증대되는 국내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편하여 향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직과 임무 수행능력을 보강할 것이다.

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투 분야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하고 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전투부대로 전환되는 군인은 전투 필수직위에 보강하여 상비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다.

1.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국방부는 미래 전략환경, 군사전략, 병역자원 수급 전망 등 가용 병역자원, 부대 개편계획 등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육군병력은 36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현 정원을 유지할 것이다. 상비병력은 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하면서 병력구조를 병 위주에서 간부 위주로 정예화할 것이다. 비전투 분야 근무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고 현역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병력을 보강할 것이다. 아울러 첨단무기와 장비 전력화를 통해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다.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도표 4-5]와 같다.

[도표 4-5] 상비병력 감축 계획



2. 국방인력구조 개편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 우리 군은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8.3만 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다.¹⁾ 그러나 청년 인구 감소 및 중장기적인 청년실업률 감소 전망에 따라 향후 군 간부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존의 간부 증원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계획을 군인, 군무원, 민간 근로자를 총 국방인력 개념으로 설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계획」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 규모에 맞게 2022년을 목표연도로 군별·신분별·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한다.

둘째,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인은 작전 및 전투 중심으로 배치한다.

셋째, 초임 간부 획득 전망, 최첨단 장비 운용, 숙련된 전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현재의 장교 및 부사관 계급구조는 하위 계급의 정원 구성비가 과도한 '대량획득-단기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 국방부는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비병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전투 분야는 작전 및 총기·탄약 취급 등 군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전투·지휘통제 직위를 제외하고 그 밖의 직위는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비전투 분야에서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 근로자로 대체할 것이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군사적 전문성 및 기술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부대의 해·감편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12년까지 장군정원은 국방개혁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국방부는 2012년에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까지 실제 감축된 인원은 8명에 그쳐 대내외 비판

1) 우리 군은 상비병력을 2005년 말 68.2만 명에서 2018년 말 59.9만 명으로 8.3만 명 감축하였고, 부사관을 2005년 말 9.7만 명에서 2018년 말 12.7만 명으로 3만 명 증원

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이후 장군정원 변천 현황은 [도표 4-6]과 같다.

이에 국방부는 장군정원 감축을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하여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장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다음 4가지 원칙하에 「장군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한다.

둘째, 비전투 분야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 전문가로 전환한다.

셋째, 각 군·부대별로 유사 임무·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계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 및 예하 부대의 규모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정한다.

넷째,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 분야 지휘관의 계급이 과도하게 상향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도표 4-6] 장군정원 변천 현황

연도(년)	장군 정원(명)	상비 병력(명)	기간 중 주요 사항
1953	109	70.6만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창설
1957	333	72.0만	미국 핵무기 배치 및 상비병력 감축(1957~1959)
1961	239	60.0만	상비병력 감축
1969	329	60.0만	청와대 습격·무에블로호 사건(1968) 이후 자주국방 표방, 동원·항토사단 창설
1975	360	60.0만	한국군 현대화 계획 추진(1971~1977)
1979	442	60.8만	울곡계획에 의한 전력 증강(1977~1986), 한미연합사 창설(1978)
1986	387	63.0만	간부 삭감 계획(1982~1986)
1989	434	65.5만	88 서울올림픽 대비 전력 증강(1987~1988)
2007	444	66.9만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1994), 국방개혁 추진(2006~추진 중)
2013	441	63.3만	장군정원 감축 계획 수립(2012~2030, 60명)
2017	436	61.8만	장군정원 감축 계획 수정(2012~2030, 46명)
2022(계획)	360	50.0만	장군정원 감축 계획 재수립(2018~2022, 76명)

국방부는 「장군정원 조정 계획」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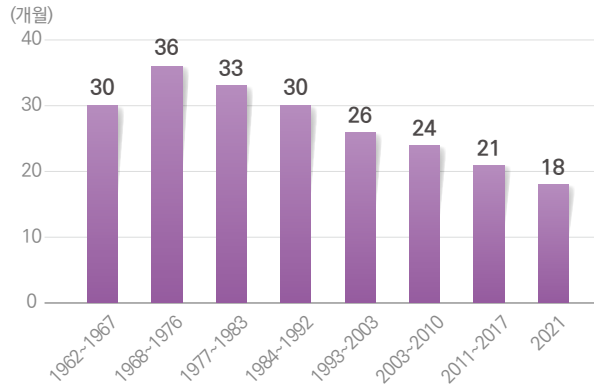
이번 「장군정원 조정 계획」은 기존 계획 대비 감축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전투부대는 보장하는 계획이다. 특히 각 군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장군정원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국방개혁 2.0」의 핵심적인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병 복무기간 단축

| 병 복무기간 단축 추진 | 국방부는 우리 군을 기술집약형 강군으로 정예화하고 청년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되며, 공군의 경우 추후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며, 개인의 입대일자별 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기간 변화(육군 기준)

| 전력 저하 방지 대책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전에 맞는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신병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과학화 훈련을 통해 병 숙련도를 조기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병사들이 군 복무 중에는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임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군 전반의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다양한 군사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전략환경 평가와 위협분석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과 합동작전수행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1. 전력증강 기본 방향

국방부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북한,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핵·WMD와 장사정포 위협을 억제·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그리고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한 적정 전력, 테러·사이버위협 및 재해·재난 등의 대비 전력, 4차 산업혁명·IT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이다.

전장 기능별로 보면, 전장인식전력은 군정찰위성, 다양한 유·무인정찰항공기, 전자전·신호정보수집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지휘통제·통신전력은 신속한 전장상황 인식 및 결심이 가능하도록 연합·합동 및 각 군 전술 C4I체계의 성능을 보강할 것이다. 또한 위성통신 및 공중중계 기반으로 입체적인 통신체계를 발전시키며, 사이버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상전력은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전력과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신속대응을 위해 지상 및 공중에서의 기동능력을 보강하고, 개인전투체계²⁾ 및 드론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해상전력은 구축함(KDDX), 호위함(FFX), 잠수함(KSS-Ⅲ), 상륙함(LPX) 등을 확보하여 한반도 주변 해양우세를 유지하고, 상륙작전 및 해상교통로 등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원해 기동부대의 작전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2) 각 병사들이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착용하는 전투 피복, 전투 장구 및 장비의 통합된 전투체계

공중전력은 공중우세 확보와 주요 핵심표적 조기 제압을 위해 차기 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잠재적 위협 대비 및 국익수호 등 확대된 작전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 우주기반감시체계 등을 확보할 것이다.

방호전력은 핵·미사일, 장사정포 및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탐지·추적·요격능력을 보장하고, 전자기 펄스(EMP³⁾)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할 것이다.

2. 주요 전력증강 사업 및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 2017년 전력증강 사업 | 2017년 국방비 40조 3,347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6년보다 4.5% 증가한 12조 1,970억 원이었으며, 2017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7]과 같다.

[도표 4-7] 2017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성능 개량
기동 / 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2전차, 대형공격헬기 230mm급 다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연구개발) 무인 경전투차량(연구개발)
해상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개토-Ⅲ급 구축함(Batch-II) 장보고-Ⅲ급 잠수함(Bat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초계기-II
공중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F-35A 공중급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관제레이더(PAR)

| 2018년 전력증강 사업 | 2018년 국방비 43조 1,581억 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7년보다 10.8% 증가한 13조 5,203억 원이었으며, 2018년에 추진한 주요 전력증강 사업은 [도표 4-8]과 같다.

3) Electro-Magnetic Pulse

[도표 4-8] 2018년 주요 전력증강 사업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전장인식 / 지휘통제·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상전술 C4체계 2차 성능 개량
기동 / 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K2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mm급 다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급 무유도탄(연구개발)
해상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개토-III급 구축함(Batch-II) 장보고-III급 잠수함(Batch-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복합감응기뢰소해구
공중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F-35A 공중급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 KF-16D 수명연장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94.1조 원을 투자하여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미래지향적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테러, 재해·재난 등 점증하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활성화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먼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북한의 도발 징후를 탐지·식별할 수 있는 감시정찰전력과 탐지·식별된 정보를 통합·전파하여 타격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지휘통제전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탐지·식별된 표적을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과 은밀 타격이 가능한 F-35A 등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발사된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매-II와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포병탐지레이더-II, 정밀유도무기, 군위성통신체계-II 등을 확보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미래지향적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해 지상전력은 정찰용 무인항공기, 230mm급 다련장 등을 확보하여 감시 및 타격 범위를 확장하고, K2전차, 105mm 곡사포 성능개량, 81mm 박격포-II 등의 신규 장비를 전력화함으로써 운용 병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광개토-III급 구축함(Batch-II) 등을 전력화하여 수상 및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공중전력은 F-35A 스텔스기와 한국형 전투기(KF-X) 등을 전력화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하여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K2전차 침수도하훈련(2017년 11월)

아울러 테러, 재해·재난 등 점증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경, 의무후송 전용 헬기 등 대테러 능력과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보강하고, 대형수송함 등을 전력화하여 재외국민의 신속한 후송 및 의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국방 R&D 분야 투자를 확대하여 무인체계,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방위산업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3.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 방위사업 관련 법령 정비 | 국방부는 책임국방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방위사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2016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하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게 하는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산업체가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할 때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훈령에 근거하던 시험평가⁴⁾ 수행의 방식과 절차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정책 결정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2017년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패에 따른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도전적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소요검증 및 분석평가 수행 | 국방부는 국가 재정과 국방예산 획득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적절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소요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이후 총 35건의 소요를 대상으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중 26건의 소요에 대해 소요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소요 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

4) 특정 무기체계의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거에 명시된 제반 요구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며 합참이 이를 위임받아 수행

순위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총 222건의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앞으로 사업별 분석평가에서 유사 및 연관 사업 간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검토하거나 사업별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종합적 관점의 분석평가로 발전시키고, 분석평가 결과의 축적, 관리, 공유가 가능한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석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 시험평가의 적기 수행 | 시험평가(Test & Evaluation)는 구매 혹은 연구개발로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기술이 군의 요구성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방부는 2014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시험평가 업무를 이관받아 2018년 11월까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등 총 139개 사업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되어 전력화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앞으로도 시험평가를 적기에 실시하여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방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관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 고도화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산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비리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 이행을 조력하는 모든 업체를 법적·제도적 관리 아래 활동하도록 기존 군수품 무역대리점⁵⁾에 적용하던 등록 제도를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⁶⁾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방위사업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단 접촉하는 공직자는 징계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취업심사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이력 관리 및 사전 접촉 신고를 의무화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감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출연기관의 자체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평가·검사·관정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며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임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정부 부처 수준의 행동강령을 마련함과 동시에 윤리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 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 환경 조성 | 방위사업 관리·계약업무 종사자들의 소신 있고 정당한 업무수행과 적극적인 행정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개발 중 시행착오 등은 재도전

-
- 5)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 체결의 제반과정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 및 단체
 - 6)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하여 조력하는 모든 무역 대리·중개·컨설턴트 기관 및 단체

의 기회를 부여하고, 부정·비리 없이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제도⁷⁾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사·감사·조사 등을 받을 경우 내부 법률·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환경 개선은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감을 강화하여 우수한 무기를 획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총수명주기와 신속 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 국방부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소요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예산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미래전쟁수행개념과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소요 결정 이전에 사전개념연구제도⁸⁾를 신설하고, 합동작전 수행개념과 국방재원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의 전력화 우선순위 판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과정 중 기술의 진부화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작전운용성능(ROC)⁹⁾을 구체화하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본부 간의 협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획득과 운영 유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와 무기체계 장비 유지비를 통합하는 구조로 예산체계를 개선하고, 신속시범구매제도¹⁰⁾를 신설하여 전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보위협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 국방부는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방전력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조정·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현안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간 정례화된 조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

7)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8) 소요기획 단계에서 심층연구를 통해 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단계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획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 수준의 연구수행 제도

9)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키는 성능 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별되며, 이는 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10) 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이미 운용 중인 무기체계 및 민간 기술을 시범 운용하고, 성능이 입증되면 야전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국방정책목표와 지침을 하달하고 정책 이행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책·관리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체계를 보강할 것이다. 총수명주기 관점의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험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험평가 결과 관정기관을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조정하고, 시험평가 전문지원기관을 신설·병행할 예정이다. 항공기, 헬기 등의 항공기 사업 분야는 획득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인 비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3군 통합 감항인증¹¹⁾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방획득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총수명주기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복업무를 해소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국방획득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향후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해 우리의 방위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국방획득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 전문역량 강화와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가 첨단화, 복잡화되고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현대 국방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획득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과 방위사업청 교육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방획득 교육체계를 방위사업청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방획득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문 교육기관은 방위사업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 '선교육 후보직'을 원칙으로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구현하도록 전문역량을 함양하고 소통·협업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국방획득 요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관리전문기관(PMO¹²⁾) 제도를 신설하여 특정 사업이 착수된 후 종결될 때까지 일련의 사업관리 과정을 한 조직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축적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전문직공무원¹³⁾ 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 전문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사업관리와 함께 전문성 및 업무노하우를 배양하도록 할 것이다.

|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

11)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

12) Project Management Office

13) 전보의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로 제한해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으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으로 구분(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영 제28211호(2017. 7. 26.))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 시급성,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추진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체계개발, 신속구매제도 도입 등 연구개발 및 구매방식과 함정·소프트웨어 등 무기체계 유형을 고려한 연구개발 모델을 다양화할 것이다.

또한 개발 중간 단계에서 소요, 총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사업 중간점검'을 제도화하고 계약제도를 진화적 획득¹⁴⁾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로 개선하여 성능·비용·일정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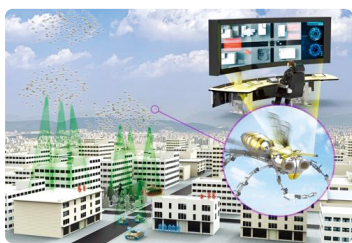
아울러 「방위사업법」 개정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능률적인 업무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수행해 온 원가 산정, 규격자료 관리와 같은 전문적·반복적 업무는 아웃소싱하고 사업관리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할 것이다.

4. 국방 R&D 역량 강화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책임국방을 구현하고 첨단기술이 전쟁 양상을 주도하는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의 국방 R&D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추격형 R&D'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신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창출하는 창의적·도전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국방 R&D 수행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도전기술�개발¹⁵⁾ 제도를 신설하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인 기술기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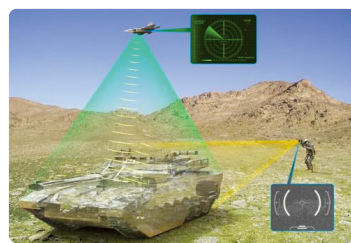
【도표 4-9】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 국방 모습(예시)



군집형 초소형 무인기



초공동 해수흡입 잠수정



투명 스텔스 전차

14) 선진 획득개념의 하나로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는 시차별 소요 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증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 전략으로 구분

15)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거나 소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

또한 분야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 품질관리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전담기관이 되도록 출연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 기술에 대한 조사·예측, 기술 기획·분석·평가 및 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할 것이다.

| 국방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 R&D 제도를 개방하고 유연화하여 민간 참여를 유인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분야에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¹⁶⁾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체계개발뿐만 아니라 최초로 양산하는 사업의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까지만 지체상금¹⁷⁾을 부과하는 지체상금 상한제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업체의 무기체계개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성과물의 공동 소유, 국방 R&D 인프라의 민간 개방,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부족기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R&D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기초연구 분야에 국가 R&D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R&D와 국방 R&D 간 분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4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은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이러한 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5.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활성화

|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품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공급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고 책임국방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방위산업은 가격 위주의 경쟁 환경 및 높은 진입장벽으로 기술력 있는 우수 민간 기업의 유입 및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방위산업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대통령 주관 국방산업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국방산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도

16) 연구개발 결과가 미흡하여 연구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17)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할 시,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

전직·개방적·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하여 국방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기술·품질 분야의 비중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¹⁸⁾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다.



국방산업진흥회의(2018년 9월)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각 군 및 체계업체로부터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개발 수요를 창출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이를 개발하는 선순환구조¹⁹⁾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체계·협력업체 간의 적정 책임분담범위 정립 등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유인하고,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방위산업진흥원(가칭)’도 설립할 예정이다.

방산수출 활성화 방산수출은 방산업체의 가동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방력 강화,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우방국과의 국방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간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 방산협력 양해각서(MOU)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2006년 이후 10배 이상 증가한 연간 31.2억 달러의 수출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출 실적은 [도표 4-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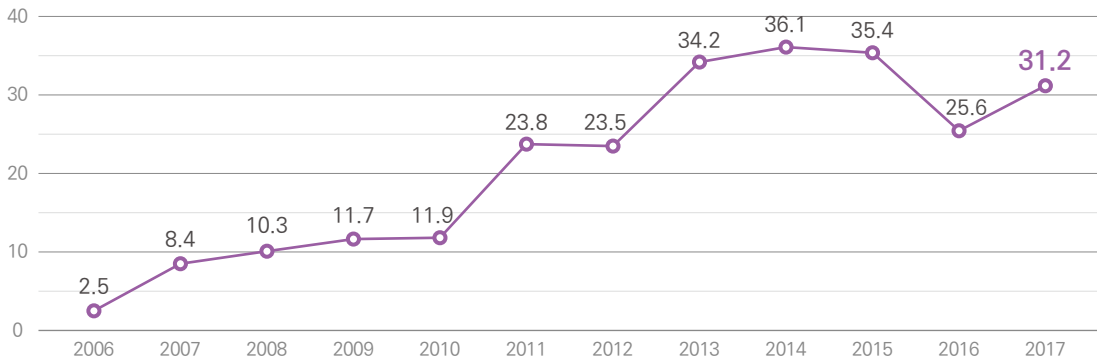
또한 수출대상국이 북미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출품목이 탄약·총포 중심에서 기동 화력, 항공 등으로 첨단·고도화되는 등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18) 군, 체계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고수준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5억 원 지원

19) 부품관리 종합정책 수립(국방부) → 부품 국산화 소요 발굴(각 군, 체계업체) →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방위사업청) → 부품 개발/납품(국방 중소·벤처기업)

[도표 4-10] 방산수출 실적

단위: 억 달러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구매국의 요구사항은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방산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능동형 수출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까지 방산기술 획득 중심의 절충 교역²⁰⁾ 제도를 방산육성, 수출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협력²¹⁾ 제도로 전환하고 가치추적²²⁾ 제도 및 산업협력 쿼터제²³⁾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매국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품목·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방위사업청이 직접 방산물자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수출방식 또한 중고 무기·임대·패키지 수출 등 다양한 방식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국방기술품질원 내에 방산수출 전담조직인 방산수출지원단(가칭)을 2019년에 신설하고, '방위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산제품의 수요자인 상대국 정부와의 방산협력을 위하여 방산군수협정 체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편 방위산업 국제협력 전문가인 방산협력관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 현지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서울 국제항공

20)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는 교역

21)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술의 공동개발과 생산, 합작 투자 등을 권장하거나, 국내 부품·기술 등을 수출하게 하는 등 일정한 협력관계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

22) 국외업체가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이행하고 축적한 가치를 향후 사업에 활용

23)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기본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국내 업체의 부품, 기술용역 등으로 계약하도록 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 기회 확대

우주 및 방위산업전(Seoul ADEX²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등 방산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전에는 53개국 78명의 주요 국방인사가 참석하여 ‘국제 방산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에는 역대 최고인 405개 업체가 참가하여 188억 달러의 수주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8만 명이 전시회장을 관람하여 항공 및 방위산업을 수출형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향후에도 방위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방산수출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 등의 소요를 정부가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방위산업구조를 수출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24)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공군 블랙이글스
홍보영상



2017
서울 ADEX

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국방부는 병력 및 물자 동원체계를 효율화하고,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병력 부족을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원태세 및 예비군 훈련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국방정보화를 혁신하고 선진기술과 민간 우수자원을 활용한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해 전쟁수행 기반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자원체계 확립 | 전쟁 개시 전 억제력을 확보하고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동원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에는 육군의 전시 동원전력 강화를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를 통해 개전 초기 작전 긴요부대에 대한 동원전력을 정예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동원전력사령부는 동원 즉응태세는 물론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를 육성하여 유사시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할 것이다.

국가 동원·예비전력 분야의 정책 및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6월 국방대학교 안정보장문제연구소 산하에 예비전력 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세미나 개최,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비전력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 동원 정책·전략수립과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식(2018년 4월)



육군 동원전력
사령부 창설

또한 국방부는 군의 작전소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병력동원 시행을 위해 국방동원정보체계²⁵⁾ 성능을 향상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 부처의 정보체계와의 연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 병력동원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시상황을 가정한 관·군 합동 동원절차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무훈련을 통해 인원과 물자에 대한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여 정부 충무계획과 군 동원계획을 검증하고 있다.

전시 동원되는 물품 및 업체의 규모를 최적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자원관리 주무부처와 공동으로 동원 소요를 심의·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자 동원을 위해 정부 합동 동원자원조사 및 중점 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자원 동원의 실효성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예비군은 국가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관리되고 있으며, 평시 지역 안보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면서 전시 현역부대와 함께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군은 「예비군법」과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편성되며, 전시 현역부대 확장에 동원되거나 전·평시 지역 및 직장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2018년 12월 기준 예비군의 규모는 275만여 명이며, 그 외 전국 단위로 여성예비군과 특전예비군 등 지원예비군²⁶⁾ 6천여 명이 편성되어 있다.

예비군은 행정구역이나 직장 단위로 제대가 편성되며 복무 연차와 전시 임무를 기준으로 세분되어 관리된다. 예비군 관리의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지역책임 부대에 위임되어 지역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방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이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 실질적인 훈련을 통한 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훈련장 관리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208개 훈련장을 2024년까지 40개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영점·기록사격이나 분대전투사격이 가능한 영상 모의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전훈련 장비²⁷⁾를 활용한 시가지 전투 등 분대 단위 교전훈련이 가능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소부터 훈련평가, 퇴소 등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훈련 관

25)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 부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

26) 예비군법 제3조에 따라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비군에 지원한 자 중에서 선발된 인원

27) 레이저 발사총기, 감지기, 훈련통제·분석시스템, 전광판 등으로 이뤄진 쌍방 교전훈련 장비 일체

리체계²⁸⁾를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관리하여 예비군의 훈련 만족도와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은 5개소²⁹⁾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훈련이 없는 주말에는 훈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안보체험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군의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부대별 전시임무에 맞는 과목을 검토하여 예비군훈련에 반영할 예정이며, 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증액³⁰⁾하는 등 훈련방법 개선과 국민편의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범 도입한 비상근 예비역 복무제도³¹⁾의 시행 규모와 대상을 2023년까지 확대하여 전시 동원부대의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방정보화 혁신

|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정보통신기술(ICT³²⁾)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국방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³³⁾),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지능화할 것이다. 군위성, 정찰기, 무인기(UAV) 등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ICT 감시정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감시정찰(ISR³⁴⁾) 역량을 크게 향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지휘통제를 보장할 것이다.

가상현실(VR³⁵⁾) 기술을 적용해 훈련체계를 실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장 환경과 군별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에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 해군에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공군에 ‘기지작전 훈련체계’ 등을 구축할 것이다. 위험성과 기술 숙련도가 높은 군 장비를 정비하는 교육과 실제 정비 활동

28) 예비군훈련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입·퇴소관리, 훈련평가, 훈련지원 등이 가능한 과학화된 훈련관리체계

29) 경기 지역 1개소(2014년도 : 금곡훈련장), 충북 지역 3개소(2017년도 : 괴산, 충주, 옥천), 강원도 1개소(2018년도 : 만종)

30)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 2017년 10,000원 → 2018년 16,000원 → 2019년 32,000원

31)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편성된 예비역 간부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비상근으로 연간 15일간 복무하며 부대훈련 동참, 동원자원관리 등으로 유사시 즉각 임무 수행태세 확립을 위한 제도

3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33) Artificial Intelligence

34)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35) Virtual Reality

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체계는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체계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한 병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진동·열상 감지센서 기술을 활용한 침입탐지체계와 사물인터넷(IoT³⁶⁾ 기반의 인원·장비·시설 원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육군훈련소에는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교육훈련 평가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훈련병의 건강정보를 관리하고, 실내환경 온·습도 조절을 자동화하여 생활관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조성할 것이다. 이외에도 무선 LTE를 이용한 원격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위급환자 발생 시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갈 것이다.

[도표 4-11]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36) Internet of Things

국방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 및 산학연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국방에 접목하여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 초연결 네트워크 및 차세대 컴퓨팅 환경 구축 | 국방부는 초연결·초지능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민간투자사업(BTL³⁷)으로 구축된 국방광대역통합망은 현재 7,000여 회선을 수용하고 있으며 야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반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향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고속·대용량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국방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차세대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cloud)³⁸ 기반으로 구축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는 등 관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용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한 국방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여 작전지원 여건도 보다 스마트하게 개선할 것이다.

| 국방정보시스템 고도화 | 국방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사, 군수, 동원, 재정 등 주요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 데이터와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공개 소프트웨어를 군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 주도의 연합연습 및 훈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방 M&S³⁹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연합연습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위게임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합성전장훈련(LVC)체계⁴⁰를 구축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 강화 | 미래전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감시·지휘통제·타격체계와 정보체계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37) Build Transfer Lease

38)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공간

39)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합성어로서 소요제기·결정, 획득, 분석 평가 및 교육훈련까지 과학적 기법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 (M&S : Modeling & Simulation)

40) Live(실기동), Virtual(가상), Constructive(위게임) 체계를 하나의 합성환경으로 구성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한 최첨단 실전적 훈련체계

이루어져야 하므로 체계 간 상호운용성⁴¹⁾이 매우 중요하다.

무기체계와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정보화표준⁴²⁾을 개정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연동 종합관리체계 구축, 국제표준의 상호운용성 평가 인증제⁴³⁾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 전술데이터링크의 상호운용성을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국방 상호운용성 평가 및 인증체계를 정립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 발전과 상호운용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 상호운용성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선진기술과 민간 우수자원 활용 등을 통한 군수지원 역량 강화

| 수리부속 및 조달 혁신 | 2012년부터 과학적인 수리부속 수요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 ‘수리부속 소요분석팀’을 신설하여 주요 장비별 수리부속 수요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23개 장비 모델을 개발·적용하여 수리부속 수요예측 정확도가 2013년 대비 73%에서 79%로 향상되었고 예산은 200억여 원이 절감되었으며, 2018년 예산 편성 시 129억여 원(19개 장비), 2019년 예산 편성 시 169억 원(23개 장비)의 국방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도태 예정 장비의 수리부속은 도태 5년 전부터 필수 수리부속만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미 확보 중인 수리부속을 활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수리부속 수요예측 정확도는 2023년 85%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장비별 적정 수리부속 확보와 효율적인 재고관리 등 수리부속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적기 조달이 제한되는 해외도입 장비의 수리부속에 대해서는 ‘무응찰 품목 조달 대응 매뉴얼’⁴⁴⁾을 활용하여 해외업체로부터 품목별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해외 수리부속 조달률을 2013년 67%에서 2017년 74%로 향상시켰다. 또한 단종 및 조달이 어려운 수리부속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생산체계 구축 노력도 병행하는 등 수리부속의 안정적 조달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41) 지·해·공 전력 및 전자요소 간에 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교환·운용할 수 있는 특성

42) 전력지원체계 개발 시 체계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는 정보기술 표준

43)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개발 과정에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여부와 구현 여부를 평가하여 국방부가 인증하는 제도

44) 해외 도입 장비 수리부속 조달구매 시 무응찰이 발생한 경우, 품목정보 확인에서부터 품목 조달까지의 구매 과정별로 조치해야 하는 업무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

| 물류 혁신 | 국방부는 전투부대에 필요한 군수품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물류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보급지원 단계의 간소화, 동일한 지역에 있는 부대에 대한 통합 수송, 물류 시설·장비·물자 표준화 등을 시행하였다.

물류 혁신 추진으로 기존에 4~5단계의 보급지원 절차를 2~3단계로 간소화했다. 나아가 정보체계 활용과 물류 취급 장비 확보 등을 통해서 전투부대가 군수품을 청구한 후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34.2일에서 평균 6.4일로 단축해 물류 속도를 40% 이상 향상시키고 수송비용은 50% 이상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적용 부대 및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 정비지원 혁신 | 국방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적시적인 정비지원을 통한 전투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해 민·관·군 자산을 통합 활용한 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는 2010년부터 공군 KT/A-1 항공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9개 장비에 적용하고 있으며, 조달 기간 단축과 장비별 가동률 향상, 예산 절감 효과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항공 장비 위주에서 전자, 자주포 등의 지상 장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객관적인 성과 검증을 위해 심층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장비가동률 상승, 재고 비용 절감, 군수지원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을 개정하고, 주요 장비의 정비환경 및 부품 조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성과기반군수지원 사업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다수의 민간 외주 정비업체를 야전부대가 많은 전방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민간 정비업체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 중이며, 그 결과 운송 및 대기 기간 단축 등 신속한 정비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에는 야전정비지원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군수품 품질 개선 | 군수품 사용에 대해 장병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민간 업체의 군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군수품 상용화와 국방규격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수품 상용화는 상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군수품을 발굴하여 민간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한 후 군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신속히 구매·보급하는 제도이다. 품질과 성능은 높이고 연구개발비 절감과 다수의 조달원을 확보하게 되어 군수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⁴⁵⁾

45) 2016~2017년에는 215개 품목을 상용화하여 83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 달성

또한 국방규격 개선을 위해 제정된 지 20~30년이 지난 낙후되고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적극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국방규격을 공개⁴⁶⁾하여 군수품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한국산업표준(KS)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국방규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전력지원체계 발전 | 전력지원체계⁴⁷⁾는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군수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우수한 민간 기술을 군수품에 접목(spin-on)시키고 민·군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은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민·군이 공동개발(spin-up)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에 민·군 기술협력 사업⁴⁸⁾을 시작하여 현재 경량화 방탄헬멧 등 4개 품목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산학연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 향후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명실상부한 전력지원체계 전문 연구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제 군수협력 강화 | 국방부는 전쟁지속능력 향상과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국제 군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군수협력은 양국 간 정례협의체, 각종 다자·양자회의 및 전시증원군지원 계획 협조, 연합훈련 시 상호군수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에 체결한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은 공병, 정비, 보급 등 12개 분야의 전시 미국 증원부대 지원계획으로서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9월 서울에서 ‘한미 전시연합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수송, 유류, 보급 등 전시 지원 12개 분야 중 11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합의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7월 서울, 그리고 2018년 7월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한미 군수협력위원회(LCC)’가 개최되었으며, 총수명주기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폭발물 안전평가, 탄약 분야 협력 등



제49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개최(2017년 7월)

46) 총 21,599건의 규격 중 공개 가능한 11,017건(51%) 대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2013년 4,143건 → 2014년 4,623건 → 2015년 8,961건 → 2016년 11,017건으로 공개 완료

47) 무기체계 외의 장비, 물자, 일반시설, 자원관리, 기반체계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 2012년 비무기체계에서 전력지원체제로 용어 변경

48) 군과 민간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논의되었다. 특히 향후 양국 간 개인전투체계 분야 협력을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해 우리 군의 개인병사체계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방국인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이스라엘,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과의 군수협력은 상호군수 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호주, 이스라엘 등과는 정례협의체가 구성되어 군 급식 문제와 탄약 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도표 4-12]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현황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국가(체결연도)
미국(1988), 태국(1991), 뉴질랜드(2007), 터키(2008), 필리핀(2009), 이스라엘·호주·캐나다(2010), 인도네시아·싱가포르(2011), 캄보디아·스페인·영국(2012), 몽골(2013), 독일(2016), 베트남(2018)

2017년 9월에는 제46차 태평양 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PASOLS⁴⁹⁾)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26개 회원국 129명이 참석해 다자간 군수협력체계 발전과 국제평화유지활동 분야의 군수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제 군수협력 교류에 기여하였다.



제46차 태평양 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2017년 9월)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방산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군수품을 우방국에 전략적으로 양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아시아 국가에 불용 군수품을 양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남미와 아프리카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양도 품목도 함정, 항공기, 기동·공병 장비에서 화력장비, 탄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군수품 양도 현황은 [도표 4-13]과 같다.

[도표 4-13] 군수품 양도 현황

시 기	지 역	양도 품목
1993~1999년	아시아	함정, 항공기, 차량, 장구류 등
2000~2009년	아시아, 남미	함정, 항공기, 공병장비, 기동장비 등
2010년~현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양주	함정, 공병장비, 기동장비, 화력장비, 상륙장비, 탄약 등

49)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 Seminar

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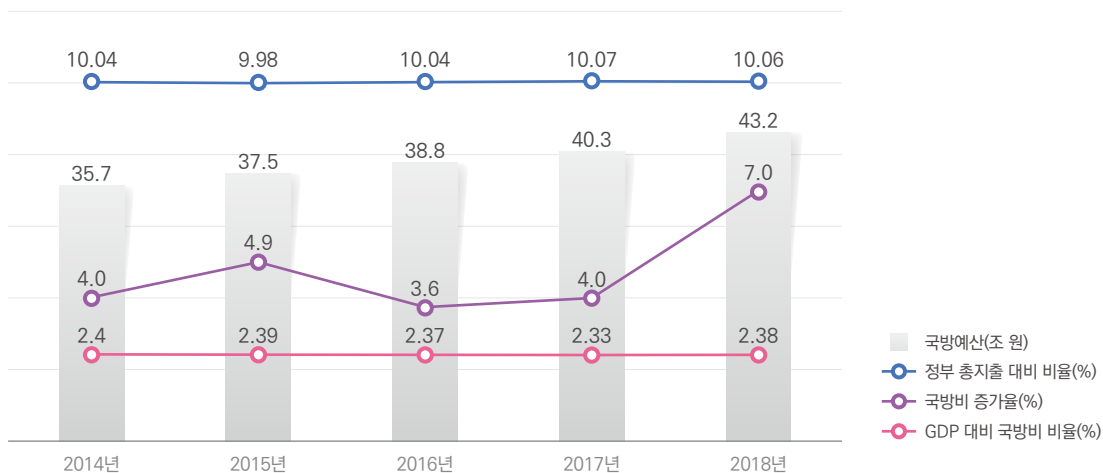
다양한 안보위협에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국방 전 분야에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1. 국방비의 현실

국방비는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방정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을 집행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상 국방비의 적정 규모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유지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5년간 국내총생산(GDP) 및 정부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2.38%, 정부 총지출 대비 10.06%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는 [도표 4-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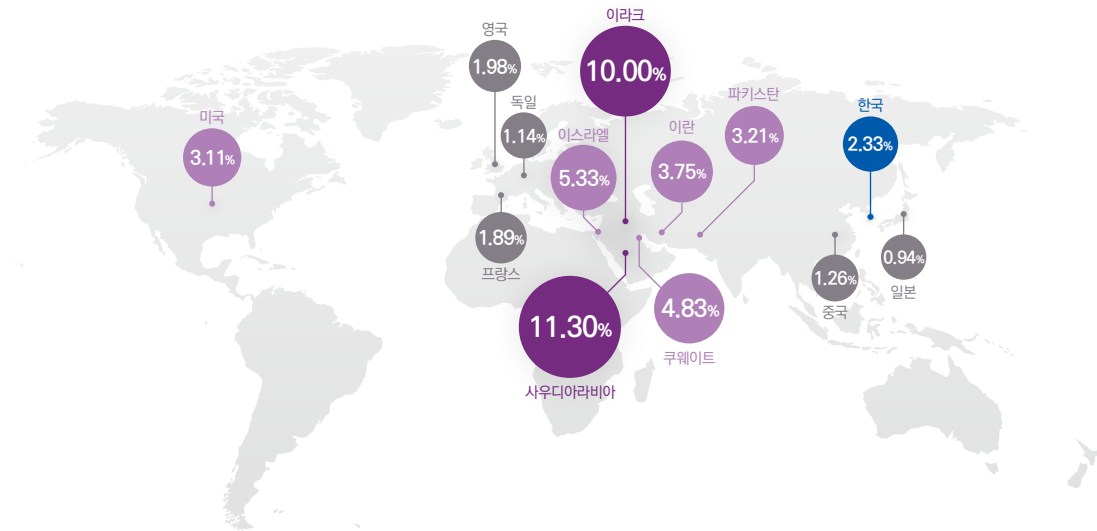
[도표 4-14] 최근 5년간 국방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각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위협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도표 4-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안보위협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같은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7년 기준 2.33%로서 세계 평균인 1.99% 및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도표 4-15]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규모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우리 안보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우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동향 속에서 남북한 현안을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인권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병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장병들이 안전하게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추어 군 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는 「국방개혁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급식비, 장비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에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재량성 경비의 확보를 위해 국방비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안보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적정 국방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2019 국방예산 | 2019년 국방예산은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대비 8.2% 증가한 46조 6,971억 원이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733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32.9%를 차지하며,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1조 3,238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기준 국방예산 규모와 배분 현황은 [도표 4-16]과 같다.

[도표 4-16] 2019년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B)	증감(B-A)	증가율	
국방비 계	43조 1,581	46조 6,971	3조 5,390	8.2	
전력운영비	소 계	29조 6,378	31조 3,238	1조 6,860	5.7
	병력운영비	18조 4,009	18조 7,759	3,750	2.0
	전력유지비	11조 2,369	12조 5,479	1조 3,110	11.7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	15조 3,733	1조 8,530	13.7	

전력운영비는 2018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 원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등 7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방인력 재설계를 위한 민간인력 증원 등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의 13개 「국방개혁 2.0」 과제 이행을 위해 약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현존 전력의 능력 발휘를 위한 적정한 후속군수지원과 장병복무 여건 개선,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사이버 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복무 중인 장병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단축 대비 실전적 훈련강화를 위한 소대급 마일즈 장비 확보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하였다.

여군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군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고 야간 보육교사 인건비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성인지 교육 확대 등 여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 예산을 증액하였다.

장병의 사역 임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청소·제조의 민간인력 활용과 시설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 보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간호사 등 자격인력을 확충하고 장병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였다.

신세대 장병의 입맛에 맞는 군대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2.0%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을 증원하였으며, 손세정제, 미세먼지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장병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물자획득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또한 해·강안 경계철책 및 유희시설 철거 예산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주거시설·다중이용시설의 내진 보강 공사 소요도 증액하였으며, 민·군 기술 융합 네트워크, 사이버 공방훈련장 등 국방 전반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및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군 내 사망 사고 유가족 및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다.

아울러 현존 전력의 최적화된 기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 정비지원, 노후·부족 장비 및 물자 확보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드론을 신규 전력화하기 위한 드론봇 전투실험 소요 예산도 반영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비무장지대 유해발굴능력 강화 및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장병 취업지원활동 지원 예산, 국민참여 예산인 장병 동계패딩 보급 예산 등도 적극 반영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2018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 원으로 북한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력 확보,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 R&D 구현과 방위산업 활성화 여건 보장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우선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구축에 필요한 32개 사업에 5조 785억 원을 편성하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6개 사업에 1조 7,799억 원을 편성하였다.

군 구조 개편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소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능·능력 보강을 위해 34개 사업에 3조 5,093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국가 R&D와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여건 보장을 위해 3조 1,928억 원을 편성하였다.

| 2019~2023 국방중기계획 |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방개혁 2.0」 과제, 「2019~2023 국방기본정책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국방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위력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의 총 재원 규모는 270.7조 원으로, 전력운영비는 5.8%, 방위력개선비는

10.8%, 전체 국방비는 연평균 7.5% 증가하는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국방중기 재원 규모는 [도표 4-17]과 같다.

[도표 4-17] 국방중기 재원 규모

단위 : 조 원

구 분	2018년	대상 기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방비 (증가율)	43.2 (7.0%)	46.7 (8.2%)	50.3 (7.8%)	54.1 (7.5%)	57.8 (6.8%)	61.8 (7.0%)	270.7 (7.5%)
전력운영비 (증가율) (점유율)	29.6 (5.3%) (68.7%)	31.3 (5.7%) (67.1%)	33.3 (6.3%) (66.2%)	35.4 (6.3%) (65.4%)	37.3 (5.3%) (64.5%)	39.3 (5.4%) (63.5%)	176.6 (5.8%) (65.2%)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점유율)	13.5 (10.8%) (31.3%)	15.4 (13.7%) (32.9%)	17.0 (10.8%) (33.8%)	18.7 (9.8%) (34.6%)	20.5 (9.8%) (35.5%)	22.5 (9.8%) (36.5%)	94.1 (10.8%) (34.8%)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전력운영 분야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해 장비 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을 통한 전쟁지속능력 확충에 5조 3,437억 원의 재원을 반영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에 3,464억 원을 반영하였다. 전투근요 수리부속 확보,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확대, 신규무기체계 정비지원 등을 통해 장비가동률을 보장할 계획이며, 탄약성능 보장을 위해 2023년까지 480여 동의 이글루 탄약고 신축 등 탄약저장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화 교육훈련을 통한 정예장병 양성을 위하여 2023년까지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 42식을 확보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9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합동성·야전 요구가 반영된 양성·보수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하여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 배치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부문에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데 3조 4,330억 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간부 계급구조는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기존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982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8개의 예비군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훈련이 가능한 예비군훈련대로 개편하고, 동원사단의 전력 보장을 통해 실전적 예비군훈련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2022년까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을 목표로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간부 예비군의 부족을 해소하고, 전시 예비역 간부의 역할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국민의 편익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유희 군 시설, 군 무단사용 사·공유지 등을 작전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개방형 국방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데 1조 6,814억 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스마트비행단, 특수작전모의 훈련체계 및 스마트 병영환경을 구축하고, 개인전투체계, 수송용 드론 확보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운영 분야에 적용하여 재래식 전력을 스마트 군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8,41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 내 사고·범죄 피해 장병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병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40억 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장병 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에 21조 4,358억 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병 봉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증액하고, 병사들의 의식주 질적 수준의 개선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2023년까지 9,309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 및 영양위생관리사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인당 개인용품 현금지급액을 2023년까지 월 9,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병원 특성화 및 현대화 추진 등을 통해 군 의료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다. 2018년 현재 2,000명에 대해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하던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3년까지 전 장병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조 3,284억 원을 반영하였다. 우선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대체할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장병의 전투임무 전념여건을 보장하고,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여군인력 확대 등에 따라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테러, 재해·재난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고 국방 과학기술 및 국내 방위산업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핵·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32.3조 원을 배분하였다. 전략표적 타격능력 구비를 위해 군정찰위성,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F-35A 등을 확보하여 감시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하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을 통해 탄도탄 탐지능력과 핵심시설 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사일 전력 보강을 통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둘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33.4조 원을 배분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

행능력, 정밀유도무기, 통신 능력 보강에 약 4.5조 원을 편성하였고,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전장기능별 필수전력에 28.9조 원을 투입하여 사단정찰용무인기, 차륜형장갑차, 공중급유기 등을 확보함으로써 전장 인식 및 기동화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점증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0.9조 원을 배정하여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 능력과 폭발물 원격 탐지 및 원격 제거 능력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무후송 전용 헬기, 대형수송함 등이 전력화될 예정이므로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능력이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1.9조 원을 편성하였다. 국방비 대비 국방 R&D 점유율을 연평균 8.1%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방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기술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연구개발 보장을 위한 R&D 기관 재구조화 및 인프라 보강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 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투자 비중을 연평균 81%로 유지하여 방산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보장하였다.

4. 국방경영 효율화

| 국방재정개혁 추진 | 군 내부에 효율적인 선진경영기법을 확산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은 전력운영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조달, 수리부속, 물류 등 군수 핵심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는 국방경영의 단순 효율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재정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국방재정개혁 추진단’으로 전환하여 국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국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운영하기 위해 기획문서체계를 최적화하는 등 국방기획관리제도 발전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17년에는 군 마트 판매병 및 부대복지회관 관리병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기여하였다.

2018년에는 전화교환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교환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군 전화 교환시스템 최신했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군 주거시설의 관리인력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전반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발굴하고 제거함으로써 재정개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한정된 국방비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국방부는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업적·집행적 업무 성격의 기관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군 내외에서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여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조직 운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009년 시범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18년 현재 정비, 보급, 의료, 인쇄, 정보화 분야의 16개 기관이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은 [도표 4-18]과 같다.

[도표 4-18] 군 책임운영기관 현황 : 16개 기관

계	16개				
	16개	국직(6개)	육군(2개)	해군(5개)	공군(3개)
2009년	3개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보급창	
2011년	3개	국군대전병원		1함대수리창	83정비창
2012년	3개	국군의학연구소		2함대수리창	82정비창
2013년	3개		종합정비창	3함대수리창	종합보급창
2014년	3개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비창	
2017년	1개		종합보급창		

군 책임운영기관들은 생산성 증가,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해군보급창은 2009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 평균 청구처리기간을 37.14일 감소시켰으며, 국군수도병원도 민간 위탁 진료율을 8.5%에서 3.04%까지 낮추고 2015년에는 종합병원으로 인증을 받는 등 군 의료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들은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59건의 대외 인증, 206건의 출판저작권, 117건의 특허출원을 획득하고 355건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기관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과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민간자원 활용 ┃ 국방부는 5년 단위의 「민간개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시설관리, 복지시설 운영 등 전투지원 분야에 민간인력, 자본, 시설, 경영기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서

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민간개방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보급부대가 담당하던 세탁, 폐품수집, 물자 정비, 부식 수송 및 분배 등 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장병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병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에스코(ESCO)·와스코(WASCO)⁵⁰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화된 에너지·수도시설을 초기 국가재정 투입 없이 개선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병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근무지원의 안정성, 장병복지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 구조 개혁 및 국방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국방 각 분야에 적극 적용해 나갈 것이다.

50)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초기 재정투자 없이 군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일정 기간 발생한 절감 예산으로 사업비를 상환(ESCO : Energy Service Company, WASCO : Water Service Company)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124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32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135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151



한미 연합방위지침 서명식(2018년 10월)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방안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의 전통적인 신뢰와 결속력을 유지·강화하면서 모든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동맹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미는 양국의 전략적 자산과 군사적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의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한미동맹은 지난 65년간 외부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치·경제발전에 도 크게 기여해 왔다.

한미 정상은 2017년 6월 정상 회담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는 양국 간 굳건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 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¹⁾,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²⁾,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³⁾ 등 다양한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통해 양국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검증·조율하고, 주요 동맹현안들을 해결하며,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5월 최초로 개최된 이래 지난 50년 동안 다양한 동맹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1977년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결과 1978년에 연합군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한미군사위원회회의도 설치함으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한미안보협의

-
- 1) 한미 국방장관과 국방·외교 고위관리가 참여하는 양국 간 최고 안보협의체(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2) 양국 합참에서 연계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군사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MCM : Military Committee Meeting)
 - 3) 다양한 한미 국방협의체들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 연합군사령부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2018년 10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략문서⁴⁾에 합의하였다. 한미는 2019년도에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⁵⁾) 평가를 시행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한미 국방부는 미래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하면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미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⁶⁾에서 한미동맹 만찬을 개최하여, 굳건한 양국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항구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는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안보 사안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범위 면에서도 사이버·우주·방산·과학기술·해양안보 등 새로운 분야로 동맹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

4) ①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지침’, ②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 ③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④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

5)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6)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 원본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곳. 미국 전역에 2개의 보관소, 12개의 지역기록보관소, 13개의 대통령도서관, 1개의 인사기록센터를 운영하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소재(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미는 2014년 9월 우주상황 인식 정보공유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주상황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으며, 2017년 9월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TTX⁷⁾)을 개설하여 위성통신·항법 장치에 대한 재밍 시도와 같은 공동의 우주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국방부는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 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도 한미는 양국의 비교우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⁹⁾), 방산기술보호협의체(DTSCM¹⁰⁾), 안보협력위원회(SCC¹¹⁾), 군수협력위원회(LCC¹²⁾) 등 다양한 고위급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맹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미는 전·평시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비한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연습·독수리(FE)훈련 등 연합연습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지휘통제능력을 강화해 왔으며, 대잠수함전 훈련, 탐색·구조 훈련, 한미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¹³⁾ 등 연합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켰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되었

7) Table Top Exercise

8)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9)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10) Defense Technology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11)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12)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13) 대규모 공격편대군 임무계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

을 때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달성한 바 있다.

2018년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써 일부 엄선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유예 또는 조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미는 양국 군의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단독 및 연합훈련은 지속 시행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F-15K, B-1B, F-35B 연합훈련(2017년 6월)

한편 2018년 5월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완료 시까지 용산기지 내에 잠정 유지하기로 하였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국방부 부지 내에 조기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국방부 부지 내 이전은 한미 공

조와 연합방위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용산기지의 반환을 가속하여 용산공원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진전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정책, 전략, 전술 등 모든 수준에서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주한미군기지 이전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지이전계획(YRP¹⁴)’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¹⁵)’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 건설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미국 측과 시설물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대별 이전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14) Yongsan Relocation Plan

15) Land Partnership Plan

용산에 있던 미8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 부대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보다 안정적인 주둔 여건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지 이전 사업과 함께 미군기지 반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점차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이전과 기지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¹⁶⁾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¹⁷⁾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였다.¹⁸⁾ 2018년 현재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당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세 가지 항목에 배정 및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¹⁹⁾

16) SOFA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 제1항 :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 제2항 :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

17)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18)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 만 아니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와 동맹국인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받는 중

19)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5~2018년 분담금 총액은 매년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총액과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고려하여 결정

방위비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건비의 100%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와 군수지원비의 100%는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도표 5-1] 방위비분담금 연도별 합의액

단위 : 억 달러

차 수	1·2차					3차			4차			5차		
	연도(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액 수	1.5	1.8	2.2	2.6	3.0	3.3	3.6	3.9	3.3	3.9	4.4	4.7	5.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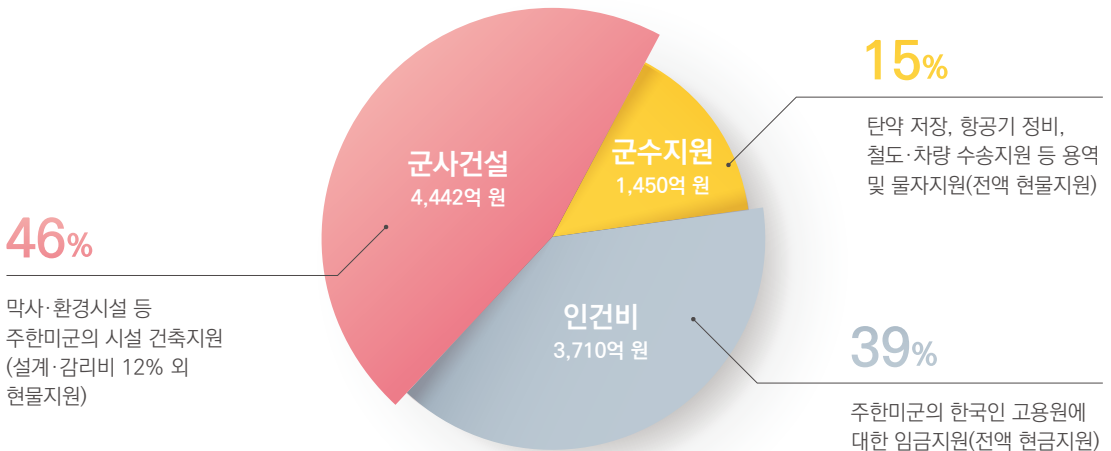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차 수	6차		7차		8차					9차				
	연도(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액 수	6,804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507	9,602

* 제6차 협정 이후로는 원화로 지급방식 변경

[도표 5-2] 방위비분담금 배정액 현황

2018년 기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28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제8·9차 협정을 거치면서 방위비분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제10차 방

위비분담협정을 통해 투명성, 상호존중과 호혜성, 제도적 합리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방위비분담금 배정과 집행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직·간접지원²⁰⁾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세부항목 구성과 규모도 변화해 왔으며, 평택기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추산할 경우 2015년 기준 약 3.4조 원에 달한다.²¹⁾

|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 한미는 양국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Friends Forever-영원한 친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9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5회에 걸쳐 약 250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들이 태권도 캠프와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하였고, 공주, 경주 등 유적지를 탐방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계기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대표단과 정부 주요 인사,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장병, 카투사 등 500여 명을 초청하여 한미동맹 만찬을 개최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기념하여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KWVA²²⁾), 주한미군전우회(KDVA²³⁾), 장진호 참전용사 모임(Chosin Few), 한국전 참전 기념비재단(KWVMF²⁴⁾) 임원 등 한미동맹 발전에 공로가 큰 미국 인사들을 초청하여 격려만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수상자로 선정된 마크 클라크 예비역 대장²⁵⁾을 대신하여 유가족에게 한미동맹상을 수여하였



한미동맹 만찬(2017년 10월)

20) 직접지원은 정부지출을 직접 수반하는 형태의 지원을 의미하고, 간접지원은 정부지출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주한미군에 재정·자원 절감효과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지원을 의미

21) 세부 내역은 일반부록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285p)’ 참고

22)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23)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24)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

25) Mark Clark, 제3대 유엔군사령관 역임, 유엔군 대표로 정전협정 협상 및 체결(2018년 수상)

다. ‘백선엽 한미동맹상²⁶⁾’은 국방부가 2013년부터 매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헌신한 미국 시민에게 수여해 온 것으로, 지난 5년간 윌튼 워커 예비역 대장²⁷⁾,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²⁸⁾, 제임스 밴플리트 예비역 대장²⁹⁾, 존 싱글라브 예비역 소장³⁰⁾, 존 베시 예비역 대장³¹⁾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2018년 10월)

주한미군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영어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장병들은 태풍 피해 복구, 연탄배달 등 각종 대민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 26)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여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조명하고 미래 동맹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한미동맹상’을 제정
- 27) Walton Walker, 한국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의 기틀을 마련(2013년 수상)
- 28) William Weber,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재단 회장으로, 한국전쟁이 미국에서 ‘잊힌 전쟁’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2014년 수상)
- 29) James Van Fleet, 미8군사령관으로 한국전 참전, 전후 한국군 훈련체계 정비 등 한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2015년 수상)
- 30) John Singlab,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 극복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크게 기여(2016년 수상)
- 31) John Vessey, 초대 연합군사령관 역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에 결정적 역할(2017년 수상)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한미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연합지휘구조 및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우리 군의 능력 확보 등의 과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미 양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발전,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등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적극적인 추진

| 연합지휘구조 발전 | 연합지휘구조란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여 양국 국가통수권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의 지시에 의해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방어 및 격멸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지휘구조(안)은 [도표 5-3]과 같다.

[도표 5-3] 전략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새로운 편성안을 적용하여 연합연습을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에 최종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전략문서 발전 |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전략문서를 통해 연합군사령관의 임무·역할과 양국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의 관계를 포함한 연합지휘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엔사 및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을 지속 유지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구조를 위해 한미 국방·군사 당국 및 전구급 사령부 간 임무와 역할, 지휘·협조 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연합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 한미 양국은 위기관리 및 공동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지휘구조하에서 한미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³²⁾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확정 이후 우리 군은 포괄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소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예산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 한미는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바탕으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조정위원회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공조하에 준비 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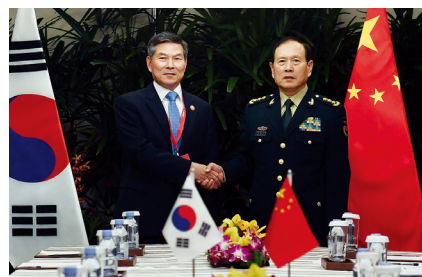
32)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까지 우리 군이 확보해야 할 능력임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우리 군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국방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강화

한중 국방교류협력 |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8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나,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중국은 자국과 지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고, 이후 양국 간에는 인도주의 차원의 중국군 유해송환과 교육교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방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한중 국방장관회담(2018년 10월)

2017년 12월 한중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간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양국 간에는 2018년 5월 제16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등 국방교류협력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신뢰 증진은 물론 고위 인사 교류, 부대 교류 활성화 및 공군 방공실무회의의 재개를 통한 공군 간 직통망 추가 개설 추진 등 국방교류협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간에는 장·차관, 합참의장 등의 고위급 인사교류와 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의 등 정례회의, 각 군 간 부대교류, 중국군 유해송환, 군사 연구기관 간 학술회의 및 교육기관의 위·수탁 교육, 체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공중충돌 방지를 위해 2013년 이후 중단된 방공실무회의의 재개를 협의 중이며, 이외에도 차관급 국방전략대화 재개, 한중 해군 간 직통망

추가설치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은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수준 및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및 국방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한일 국방교류협력 |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한일 양국은 1994년부터 정례적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09년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5년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아시아 안보회의의 등 다자간회의를 계기로 장관회담이 지속해서 개최되었으며, 2018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도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일 국방장관회담(2018년 10월)

이외에도 국방정책실무회의,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18년 3월에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개최되어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양국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러 국방교류협력 |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11월 정상 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심화시키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국방 당국자가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합참 본부장급 회의, 합동군사위원회, 각 군 회의체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군사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부대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1994년 체결한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한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따라 양국 공군 간 직통망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국방 전략대화를 계기로 양측은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대화의 수준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군 인사교류, 공군 간 직통망 설치,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해상 신뢰구축을 위한 한러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3차 한러 국방전략대화(2018년 8월)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의 '신북방정책'³³⁾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 확대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 군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³⁴⁾ 기조에 따라 다원화된 국방외교의 틀을 구축하고 동남아 국가와 실질적 국방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과는 역내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증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 안보 수요에 부응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호혜적·맞춤형 국방·방산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 9월 개최된 차관급 제6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에서는 고위급인사교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해양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군수협력의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미얀마 양국은 차관급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아세안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18년에는 '신남방협력 추진 범정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동남아 국가와의 국방·방산협력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

2018년 1월 말 우리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 풀러톤 포럼(Fullerton Forum)³⁵⁾ 기조연설 참석을 계기로

33)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34)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

35)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 창설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 지역 30여 개국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이 참석하는 상그릴라 사전준비 회의 성격의 1.5트랙(정부+민간 참가 회의) 국장급 다자안보협의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을 방문하여 3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 및 태국 총리 등을 예방하였다.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및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인도네시아와는 방산·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18년 만에 성사된 한·태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향후 국방·방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3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의제 논의를 위해 방한한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테러, 해양안보 등에 관한 다자간 공동대처능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자안보협의체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주도하는 데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4월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베트남 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성명」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양국 국방협력 강화·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8년 4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호위함 건조식 참가를 위해 방한한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양국 간 국방 현안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18년 6월 초 우리 국방부장관은 제17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베트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군수 분야에서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방협력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2018년 9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차관은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 국방차관과 차관회담을 개최하고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의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12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국방부차관은 베트남을 방문하여 제7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PKO 협력, 유해발굴 및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KFX-IFX 및 잠수함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호주·뉴질랜드와는 정례협의체 등 군 고위급 인사 교류를 계기로 국방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호주와는 2017년 9월 서울안보대화 중,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내 안보정세와 방산협력, 국방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였다.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제2차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심화·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회담 시에는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으며, 양국 장관은 서울안보대화 중 진행된 국방장관 회담, 각 군 간 정례협의체를 통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해군 간 내실 있는 연합훈련 등이 양국 간 상호 운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뉴질랜드와는 2017년 2월 제15차, 2018년 3월 제16차 한·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와 2018년 10월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연합훈련, 유엔 평화유지활동, 방산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 평가를 통해 국제 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북한 제재의 핵심임에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서남아시아 |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는 군 고위급 인사 교류,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 인도 총리 방한 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인도와 2017년 6월 양국 국방장관 대담을 통해 대북대응 공조, 군사교육교류 및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의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15년에 합의한 한·인도 외교·국방차관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7년 10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스리랑카 국방정부장관과의 대담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의 중요성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인도 R&D 차관과의 대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8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8년 7월 한·인도 정상 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한·인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한·인도 외교·국방차관회의 및 각 군 간 정례협의체의 조속한 개최, 군사교육 교류, PKO 협력, 방산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에도 서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군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정례협의체 개최를 통해, 국방·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공간의 핵심지대이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중부 권역에 위치하는 주요 국가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관통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동되는 등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구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CIS³⁶)을 형성하고 있으며 독립 이후

36)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2015년 4월 「한·우즈벡 군사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매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합동군사대학교 교관요원이 우즈베키스탄 군사 아카데미에 파견되어 작전술 등 군사학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등 교육교류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18년 8월 우리 국방부차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우즈벡 국방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은 교육교류 및 대테러 분야, 방산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정부에게 최대한의 지지와 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추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는 2013년 12월에 「한·아제르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방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과도 2015년 5월에는 「한·투르크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체계적인 국방 방산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서울안보대화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교류 및 방산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설했다.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는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소다



한·중앙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2018년 9월)

자협의체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몽골이 참여하는 국방차관급 회의체이다. 2018년 개최된 첫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차관급 인사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주한 대사가 참석하여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상호 신뢰구축과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국방교류협력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중동 | 중동 지역은 세계 에너지 자원의 주요 공급처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1980년 수교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2009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아크 부대를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는 2018년 3월, 정상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외교·국방 협의체 신설과 함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4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정상 회담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하고, 국방특임장관과 회담하여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차관이 방한하여 차관급 회담 및 제1차 외교·국방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장관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17년 3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이집트를 방문하여 「한·이집트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군사 교육, 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이집트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 개최된 제6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보좌관은 우리 국방부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10월 우리 국방부장관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한 레바논 국방장관, 오만 국방사무총장, 이집트 방산물자장관과 개별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산제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등 방산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오만을 방문하여 양국 장관회담을 실시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오만 간 국방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우리 국방부장관이 레바논을 방문하여 동명부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야콥 엘사라프 레바논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7월에는 한·이집트 양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서울안보대화 계기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보좌관과 차관급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과 군 고위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유럽·캐나다 | 군 고위급 인사교류 등을 통해 유럽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7년 3월 개최된 한·핀란드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군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와 방산협력 활성화 등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3월 우리 국방정책실장과 프랑스 국제관계전략본부장을 대표로 제4차 한·프랑스 국방전략 대화를 개최하여 2016년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9월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 국방부장관이 프랑스 국방장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국방부차관은 2017년 4월 영국 국방정무차관과 2018년 1월에는 영국 국방참모차장, 2018년 8월 영국 합동군사령관, 2018년 9월 영국 국방정무차관과 대담을 열고 영국군의 6·25 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며 지역 안보정세, 국방·방산협력 현안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8년 1월에는 30년 만에 방한한 스페인 국방장관과 한·스페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다양한 국방·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하였고, 후속조치로 4월에 한·스페인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하고 국방협력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스위스 국방장관 및 라트비아 국방장관과 각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18년 2월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비셰그라드 그룹³⁷⁾ 국방차관회의에 우리 국방부차관이 참석하여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비셰그라드 그룹 각국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유럽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유럽 국가와의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7년 9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방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연맹 대표단과 사이버안보 협력 등 양측의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한·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측의 공조를 당부하였다.

유럽연합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16년 말에 발효된 한·유럽연합 위기관리 기본협정에 따라 우리 청해부대가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제2차 한·유럽연합 안보국방대화를 개최하였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8년 4월 방한한 유럽의회 외교위원장과 대담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 실질적인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17년 9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제6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캐나다 국방수석 차관

37)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를 의미하며, 1991년 최초 회의가 헝가리 비셰그라드시에서 개최된 데서 명칭이 유래

보와 대담을 갖고, 2017년 11월 '유엔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캐나다가 세계평화 및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면서 양국 해군 간 지속적인 상호방문과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 향상 및 우호증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국가와의 양자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로 국방외교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중남미 |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 경제 분야 협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군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2017년 6월 정부 합동 중남미 방산협력사절단이 콜롬비아·멕시코를 방문하여 해당국의 방산 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와의 방산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2017년 8월에는 멕시코 훈련함이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 차 부산기지에 방문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졌다. 2017년 10월에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에콰도르 합참의장과 대담을 갖고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중남미 지역의 주요국들과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 | 2017년 3월 우리 국방부차관은 앙골라를 방문하여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군 고위급 교류, 각 군 간 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 7월에는 국방부 대표단이 에티오피아 및 우간다를 각각 방문하여 제1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지역 정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양자 간 국방교류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7년 9월에는 우리 국방부차관이 서울안보대화 참석 차 방한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국방차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양국 간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에티오피아 국방부 대표단이 방한하여 우리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국방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국방 발전 과정과 경험에 관해 연구하였다.

2018년 9월 서울안보대화에서 우리 국방부차관이 에티오피아 국방차관, 우간다 보훈국무장관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에티오피아와는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 군사교육교류, 국제평화활동 협력, 보훈 사업 지원 등 상호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간다 측은 미래의 양국 국방 관계를 이끌 젊은 장교들의 군사교육 교류에 감사를 표하였다.

국방부는 향후 아프리카 주요국과 국방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호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 안보 분야 신남방정책 구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재난재해, 테러, 해적, 난민 문제 등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비전통적·초국가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아태 지역 내 다자안보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 우리 정부 안보정책의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다자안보회의체인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에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무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다자안보회의의 참가와 적극적인 안보협력 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다자안보회의의 참가를 계기로 양자·3자 등 다수의 개별회담을 개최하여 주요국과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국방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2017년부터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구현에 일조하고 있다.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간안보협의체는 [도표 5-4]와 같다.

[도표 5-4] 국방부가 참가하는 아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

Track 1 ³⁸⁾ 다자안보회의	Track 1.5 ³⁹⁾ 다자안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 동경방위포럼(T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안보대화(SDD) • 아시아 안보회의(ASS) •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HISF) • 동북아 협력대화(NEACD) • 풀러튼 포럼

| 서울안보대화(SDD) | 국방부는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38)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39)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2018
서울안보대화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를 통해 군사적 공동이익과 관심 사항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역내 주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제1회 서울안보대화는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더욱 안전한 아태 지역을 위한 협력-과제와 해법’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를 전개하여 아태 지역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대화체의 성공적인 발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회 때는 유럽 국가가 최초로 참석하여 20개 국가, 3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제3회 서울안보대화에는 남미국가를 포함한 24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였고 특히 사이버위킹그룹 회의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켜 사이버안보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석하는 ‘동북아소다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국방협력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2015년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는 30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다자간 국방협력 활성화를 위한 서울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믹타(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 국방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과 지역·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제5회 서울안보대화에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에티오피아 차관급 관료가 최초로 참가하는 등 34개국, 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비셰그라드 4개국과 ‘한·비셰그라드 그룹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여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과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7년 제6회 서울안보대화에는 40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불확실성 시대의 안보 협력 비전’이라는 대주제하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기반을 확산하였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2018년 제7회 서울안보대화에는 52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평화 : 갈등에서 협력으로’라는 대주제하에 본회의 1(주제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방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정



서울안보대화(2018년 9월)

착이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입장과 역할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사회의 공통 관심사인 동북아 전략균형과 해양안보 협력, 사이버안보를 비롯하여 에너지안보와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위협 현안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018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아시아 플러스 국방차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31개 참가국과의 양자대담을 통해 상호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세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서 서울안보대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아시아 안보회의(ASS) | 우리 국방부장관은 아태 지역의 안보 분야 최대 다자안보회의체인 아시아 안보회의에 2004년부터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18년 제17차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이루어진 남북 정상 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국방 당국자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참여 국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 국방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매 회 참가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본회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중임을 강조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동 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세안 국가들과 각각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주변 4국과 국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하여 안보 분야에서 신남방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의 6개 분과회의중 하나인 ‘평화유지활동 분과회의’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캄보디아와 함께 수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싱가포르와 함께 ‘해양안보 분과회의’ 공동의장국 임무를 적극 수행 중이다.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2018년 10월)

|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 2017년 서울안보대화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처음 서

을에서 개최되었다. 아세안 각국 참가 대표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개최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2018년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간 방산 협력 증진 방안 논의를 통해 한·아세안 간 호혜적인 방산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공감하였다.

| 기타 다자안보협력회의 | 국방부는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풀러톤 포럼에 참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 지역 국가 고위 국방 관료 및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와 역내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풀러톤 포럼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다.

국방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2003년부터 참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태국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공동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태 지역 국장급 안보협의체인 동경방위포럼(TDF)과 중국에서 개최하는 향산포럼⁴⁰⁾에도 매년 참가하여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이 주요 회원국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매년 참가하여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다자안보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4. 국제 비확산·대확산 활동 강화

| 국제 비확산 활동⁴¹⁾ |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왔다. 국제 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과 협약 이행을 감독하고 검증하기 위한 국제기구, 관련 물자·장비·기술 이전을 통제하는 수출통제체제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비확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적용 문제를 보완하면서 비확산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다자수출통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국제 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⁴²⁾ 국방부는 국방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비확산 분야 협약과 국제기구 내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40) 중국 국방부 주관으로 2014년 출범(2006~2013년까지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민간기관이 참가하는 포럼)되었으며 세계 50개국 국방관료,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1.5트랙(정부+민간 참가) 다자안보협의체

41)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군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Non-proliferation)

42) 일반부록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288p)' 참조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군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핵 비확산체제⁴³⁾ 가입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⁴⁴⁾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핵공급국그룹(NSG)⁴⁵⁾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을 방지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 비확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 확산 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⁴⁶⁾,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⁴⁷⁾에 가입하고, 협약 이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⁴⁸⁾을 제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연구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국방 차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확산 우려국 정보를 공유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1996년 화학·생물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⁴⁹⁾에 가입한 이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보다 체계적인 수출통제 의무 이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⁵⁰⁾

핵무기,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사일 확산 통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⁵¹⁾, 2002년 헤이그 행동규약(HCOC)⁵²⁾ 등 자발적 성격의 수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43)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1995년 쟁거위원회(ZC), 1996년 핵공급국그룹(NSG), 1999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차례로 가입

4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 전용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57년 설립, 170개국 가입)

45) 핵물질·기술·장비·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통제체제 쟁거위원회(ZC)와 달리 핵비확산조약(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NSG : Nuclear Suppliers Group, 1978년 설립, 48개국 가입)

46)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생산·비축 전면 금지(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975년 설립, 182개국 가입)

47)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협약으로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97년 설립, 193개국 가입)

4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화학·생물무기금지법) 등

49)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화학·생물무기 사용 및 제조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AG : Australia Group, 1985년 설립, 43개국 가입)

50)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화학·생물작용제 및 그 제조·장비기술 관련 사항은 호주그룹의 통제사항을 이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호주그룹이 통제 목록으로 규정한 모든 물질을 통제 목록으로 지정. 개정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요구사항을 이행

51)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987년 설립, 35개국 가입)

52)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통제 행동지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계획 지원을 금지(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2002년 설립, 139개국 가입)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련 국제회의에 국방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책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및 연례보고서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비확산 활동은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무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왔다. 바세나르 체제(WA)⁵³⁾ 회원국들은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물품⁵⁴⁾, 기술의 이전 통제를 위한 지침과 통제목록에 합의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한 후 자발적으로 이행정보를 교환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으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에 반기별로 무기 이전 실적을 통보하고 우리 방위산업 보호를 위하여 통제목록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무기거래조약(ATT)⁵⁵⁾은 7대 무기체계⁵⁶⁾와 소형무기·경화기, 탄약 부품의 국가 간 이전을 통제하는 재래식무기 분야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원서명국으로서 2017년 협약을 비준하였다.⁵⁷⁾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조약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한층 강화된 국제기준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점진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⁵⁸⁾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 등 거래 제한이 필요한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⁵⁹⁾로 지정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수출허가 시 수출대상국의 통제규범 준수 여부, 수출 관련 군사적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⁶⁰⁾

향후에도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해나갈 것이다.

| 국제 대확산 활동⁶¹⁾ |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의 연계 위협이 대두되면서, 수출통제 등 전통적인 수단만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

53)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1996년 설립, 42개국 가입)

54) 일반산업 분야와 군사 분야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55)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하고자 재래식무기의 국제거래 규제에 관한 공통기준을 수립한 조약(ATT : Arms Trade Treaty, 2014년 설립, 99개국 가입)

56)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발사대를 포함

57) 주요 미서명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며 미국은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은 상태

58)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로 구성되며, 현재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Clean Country)는 총 30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59)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이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

60) 현재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최종 허가는 국방부의 위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담당

61) 대량살상무기의 실질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함으로써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Counter-proliferation)

되며 보다 적극적인 대확산 정책이 부상하였다.⁶²⁾ 미국 주도하에 실시 중인 확산방지구상(PSI)⁶³⁾ 등이 대표적인 대확산 조치에 해당되며,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주도국 모임인 운영전문가그룹(OEG)⁶⁴⁾에도 가입하였다. 2010년과 2012년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주관하여 확산방지와 압류처리 등에 대한 토의식 연습과 해양차단·승선검색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9월에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 회의의 서울 개최를 지원한 바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2017년)

2014년부터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6개국이 매년 아태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회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하였다. 특히 우리 해군은 2014년과 2016년 해군함정과 승선검색팀을 미국과 싱가포르에 각각 파견하여 해양차단훈련 국면에 참가하였으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2017년부터 대량살상무기 검색팀 일부를 파견하여 한미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참관국 대상 대량살상무기 검색절차 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에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대확산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도표 5-5]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주관 국가 현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 가	싱가포르	한국	미개최	한국 일본	UAE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62) 비확산이 전략물자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대확산은 이미 이동 중인 자원(물자, 자금)의 물리적 차단 등을 상정

63)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 가입국 간 정보의 공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불법무기 등의 수출금지, 합동작전 등을 포함(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64) PSI 운영은 21개 주요 회원국들로 구성된 운영전문가그룹(OEG : Operational Experts Group)이 담당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유엔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6·25 전쟁의 비극을 극복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도움을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라,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기준 약 1,000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파병활동⁶⁵⁾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 유엔 평화유지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정전협정 감시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UNTSO⁶⁶⁾)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14개 임무단⁶⁷⁾이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후 서부 사하라 공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를 파견하였고, 지금도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331명, 남수단 한빛부대 280명과 개인 단위 파병 등 6개국에서 635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도표 5-6]과 같다.

65)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 비교

구 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국방교류협력활동
주 체	유엔이 직접 주도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	파견국 주도
지휘 통제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평화유지군 사령관	다국적군 사령관	파견국 군지휘관
소요경비	유엔에서 경비 보전	파견국 부담	파견국 부담

66)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67) 현재 아프리카에 7개 임무단(서부 사하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아브예이, 남수단), 중동에 3개 임무단(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유럽에 2개 임무단(코소보, 사이프러스), 남미에 1개 임무단(아이티), 아시아에 1개 임무단(인도·파키스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20여 개 국가에서 약 7만 명을 파견



| 레바논 동명⁶⁸⁾부대 | 유엔은 197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25호와 427호가 채택됨에 따라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UNIFIL⁶⁹⁾)을 설치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대한 정전 감시 임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로 사태가 악화되자, 유엔은 평화유지군 규모를 2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하고 회원국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2007년 7월에 350여 명 규모의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견하였다. 동명부대는 경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무기와 무장세력이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며, 정전 감시활동 이외에도 피스웨이브(Peace Wave)라는 다기능 민군 작전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하수도 와 학교 시설 개선, 도서관 설치 등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다. 동명부대의 성공적인 민군 작전은 레바논 현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정세 안



고정초소 감시활동(2017년 7월)

68) 동쪽 나라에서 온 동쪽의 밝은 빛, 밝은 미래와 평화를 소망한다는 의미

69)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명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7]과 같다.

[도표 5-7] 동명부대 주요 활동

2018년 11월 기준

작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지역 감시정찰 : 36,474회 • 자체 도보·기동정찰 및 EOD(폭발물 처리반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정찰 : 47,456회 • 레바논군과 연합정찰 : 8,714회
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주민 의료지원 : 108,386회 • 가축 진료 : 33,963두 • 컴퓨터·한글·태권도·재봉 교실 운영 : 5개 마을 • 주민 숙원사업 : 390건(공공시설, 학교시설, 하수시설 등) • 레바논군 지원 : 92건

남수단 한빛⁷⁰부대 |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에서 벗어난 수단은 1955년 정치·종교적 이유로 내전이 시작되었고 두 차례의 평화협정을 거쳐 2011년 7월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유엔은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을 설치하고 회원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2년 9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2013년 1월 공병부대인 남수단 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창설하고 2013년 3월 31일 남수단 현지로 파병하였다.⁷¹⁾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남수단 보르 지역에서 도로, 비행장, 교량 건설 및 보수, 나일강 차수벽 설치 등 재건지원 활동과, 난민 보호, 식수 및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빛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8]과 같다.

또한 남수단 현지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기술연구센터 농업, 목공 등 한빛직업학교에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보르~피보르 도로 복구공사(2018년 6월)

70) 남수단 재건지원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이끄는 환한 큰 빛'이 되라는 의미

71) 남수단 파병은 소말리아(1993~1994, 재건지원), 서부 사하라(1994~2006, 의료지원), 앙골라(1995~1996, 재건지원), 동티모르(1999~2003, 치안 유지 및 국경선 통제), 레바논(2007~현재, 정전감시), 아이티(2010~2012, 재건지원)에 이어 일곱 번째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p>재건지원 작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공항 신터미널(12동) 신설, 편의시설 설치(정화조, 체육시설, 유통고 등) 및 시설 보수(내·외부 진입로, 활주로, 주기장, 울타리 등) • 보르~피보르(197km), 보르~망겔라(125km) 구간 도로 재건 • 보르 지역 도로 보수, 배수시설 개선, 수물 지역 배수 및 복구 장비 지원 • 기반시설(토취장, 쓰레기 매립장 등) 개설 및 유지 보수 • 피보르 마을 진입로(200m) 및 축구장 보수
<p>민군 작전 및 인도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글레이주 피스센터 설립 • 보르병원 의약품·물자 지원 • 보르·피보르 지역 초등학교 교육물자 지원 • 존가랑 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장 리모델링 • 한빛농장 운영 : 망고·구아바 묘목 350주 식재 • 한빛직업학교(농업 등 7개 분야) 운영 : 556명 수료, 현재 9기 교육 중 • 방한 연수 : 6회차 62명 방한 • 대민 의료지원 : 2만 1,500여 명 • UNMISS 태권도·한국어 교실 운영
<p>난민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도로 보수 및 우기 수물 지역 배수 지원 • 난민보호소 시설보수, 방호벽 보강 및 경계초소(14개소) 신축
<p>UN군 시설공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르기지 UN 직원 숙소 설치(12동), 보르공항 경계초소 및 숙소 설치 • 보르기지 방호벽 및 내부도로(4.8km) 보강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피보르 2km, 아코보 200m) 보강 • 피보르 및 아코보 독립작전기지 방호벽, 외부 해자 및 순찰로(1.8km) 보강 • 보르기지 배수로 보수 및 발전기 패드 설치

|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 정부는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남수단, 서부 사하라 등 주요 분쟁지역에 설치된 유엔 임무단에 정전감시 요원인 옵서버와 유엔 임무단 참모장교 등 20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옵서버는 현지 임무단의 통제하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 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모장교는 각 사령부의 정보, 작전, 군수 등 주요 참모부에 소속되어 담당 임무를 수행 중이다.

2. 다국적군 평화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특정 국가나 지역기구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근거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평화활동을 의미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함께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에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를 파견하였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파견된 오쉬노부대는 2014년 6월

까지 1,800여 회에 달하는 호송 작전과 경찰 작전을 수행하여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지방재건팀의 재건활동을 보호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8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위해 청해부대 302명과 개인 단위 파병 9명 등 5개국에 총 311명을 파견하고 있다. 참여 현황은 아래 [도표 5-9]와 같다.

[도표 5-9] 다국적군 평화활동 참여 현황

2018년 11월 기준, 단위: 명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소말리아 내전으로 2004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 피해가 급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38호⁷²⁾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함정과 항공기 등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국내의 선박을 호송하고 안전항해를 지원하며 연합해군사령부와 유럽연합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여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해부대는 2018년 11월 기준으로 구축함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과 302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덴만 지역의 해적활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덴만 해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략물자의 주요 수송로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29%가 인근 해역을 통항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안전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⁷³⁾

72) 1. 청해부대 작전구역 : 남위 11° 이북, 동경 68° 이서, 2. 회원국들의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 파견 촉구, 3. 해적 퇴치를 위해 해군 함정 및 군용 항공기들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 사용 가능, 4.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해적퇴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5.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는 세계 식량계획(WFP)의 식량이 안전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호송

73) 중국의 구축함 2척과 군수지원함 1척이 대해적작전에 참여 중이며, 일본은 2009년부터 함정 2척과 초계기 2대를 대해적작전에 투입 중이며 2014년에는 함정 1척을 CTF-151에 제공하고 2015년에는 CTF-151사령관직 임무를 수행



아덴만
청해부대(홍보
애니메이션)

청해부대는 선박의 요청에 따라 선박을 호송하고, 아덴만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유무선으로 해적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경고하며, 연합해군사와 유럽연합의 협조하에 대해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7년 2월에는 최초로 유럽연합 대해적작전에 참여하여 소말리아 북부 해안으로부터 해적이 아덴만 해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⁷⁴⁾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만 여명작전’과 2011년 3월과 2014년 8월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인접 국가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다. 2015년 4월에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고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왕건함’에 대한민국 최초로 함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군과 외교부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선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4월에는 가나 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후 석방된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에서 가나 테마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작전을 실시하였다. 청해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0]과 같다.

[도표 5-10] 청해부대 주요 활동

2018년 11월 기준

선박 호송		안전항해지원		해양안보 작전	해적 퇴치
우리 선박	타국 선박	우리 선박	타국 선박		
499척	1,807척	15,828척	2,922척	612회(1,827일)	21회 / 31척
안전항해지원					
아덴만 작전(2011년 1월)		선장 및 선원 전원 구출,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1년 3월)		우리 국민 37명을 리비아에서 몰타, 그리스로 철수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4년 8월)		우리 국민 18명, 외국인 86명을 리비아에서 몰타로 철수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년 4월)		우리 국민 6명, 외국인 6명을 예멘에서 오만으로 철수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2018년 4월)		우리 국민 3명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가나 테마항으로 호송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 장교 | 우리 군은 바레인의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 등에 총 10여 명의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여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업무 수행, 연합작전계획 수립, 한국군 해외파병부대 교대 및 전투근무 지원, 현지 동맹군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74) 유럽연합 대해적작전(Atalanta 작전)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통행하는 선박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CTF-465)에서 실시 중인 대해적작전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청해부대는 2017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해적작전에 참여

3. 국방교류협력활동

우리 군은 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전투 위협이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하여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전투 분야에서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라우부대를 파견하였다. 아라우부대는 피해지역 복구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2014년 12월에 철수하였다. 2014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실종 여객기 탐색 지원을 위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다국적 연합탐색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아프리카 주요 발병 국가인 시에라리온에 민간 의료인력과 함께 군의관 6명과 간호장교 9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⁷⁵)를 파견하였다.

| UAE 아크⁷⁶부대 | UAE는 우리 군의 교육훈련체계를 벤치마킹하여 UAE군의 교육훈련 수준을 높이고 국방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2010년 8월에 우리 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2011년 1월에 1진 130여 명 규모의 ‘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알 아인 지역에 파견하였으며, 5진부터는 150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6년 9월 28일 UAE 총참모부에서 아크부대 이전을 국방부로 요청하여 스웨이한으로 이전하였으며, 공사 및 이전 비용 320억 원을 UAE에서 전액 부담하였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연습을 실시하며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군은 UAE군의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특수전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온·건조한 사막훈련과 UAE군의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공·야간 강하 훈련은 국내에서 6~7년이 소요되는 훈련량을 6개월 만에 실시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는 UAE군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한국과 UAE는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특수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육·해·공군의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와 UAE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크부대의 주요 활동은 [도표 5-11]과 같다.

75) Korea Disaster Relief Team

76)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으로, UAE 국민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

<p>UAE군 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군의 특수전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UAE군 정예화에 기여 • UAE군 교육훈련체계 개선
<p>우리 군의 능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특수작전 능력 향상 • 약조건하(50℃ 이상 고온, 사막) 생존능력 강화 훈련 시행 • 장거리 사격훈련 및 고공낙하 훈련 시행
<p>국방교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군 주요 훈련 시 UAE군 참관 및 양국 연합훈련 시행 • 각 군 교육과정에 UAE장교 수탁교육 및 한국군 위탁교육 실시 • UAE군·가족의 국내 민간 병원 진료 등 의료협력 • 방산수출 협력 등 중동 지역의 국방외교 허브 구축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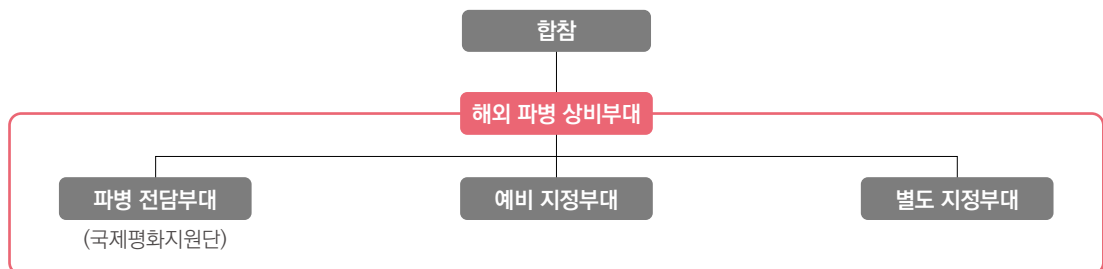
|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활동은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률안은 파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파병 장병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국회의 파병 철수 요구권 및 철수 후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파병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 우리 군은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임무가 부여되면 1~2개월 이내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2009년 12월부터 3,000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상비부대는 각각 1,000여 명의 파병 전담부대, 예비 지정부대와 2,000명의 별도 지정부대로 편성된다. 파병 전담부대는 파병 소요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2010년 7월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⁷⁷⁾’을 창설하여 파병 전담부대로 운영하고 있다. 예비 지정부대는 파병 인원 교대나 추가 파병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이며 별도 지정부대는 다양한 파병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능부대다.

77) 전체 또는 전부를 뜻하는 ‘온’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세계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의미

유엔을 통해 공병·의무부대 파견요청이 오면 별도 지정부대로 기 지정된 모체부대(공병·의무)를 중심으로 필요 인원을 충원하여 파병하게 된다.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과 파견 인원은 [도표 5-12] 및 [도표 5-13]과 같다.

[도표 5-12] 해외 파병 상비부대 편성



* 별도 지정부대 : 공병, 의무, 헌병, 경비부대(해병), 해·공군 수송부대, 무인항공기·헬기부대 등

[도표 5-13] 상비부대 파견 인원

2010년 ~ 2018년 12월

동명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계
7,008명(21개진)	1,745명(8개진)	1,791명(14개진)	2,874명(10개진)	13,391명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기능 강화 | PKO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준비하는 교육 전담기관으로써 1995년 8월 합동참모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PKO센터를 국제평화활동센터로 명명하고 국방대학교로 소속을 변경하여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파병부대의 주요 간부와 개인 파병요원에 대한 파병 전 사전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⁷⁸⁾), 외교부 유엔과와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경찰 국제평화활동센터 및 국내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파병부대와 개인 파병요원이 임무를 마치게 되면 파병부대 교훈집과 파병요원 귀국보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있다. 2013년 11월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유엔참모과정이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으로부터 '교육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엔 군사전문가과정을 유엔으로부터 인증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연구,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78) Department of Peace Keeping Operation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제평화활동센터 교육 인원은 [도표 5-14]와 같다. 또한 2017년에는 유엔 통합훈련처(ITS)와 협조하여 유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교관교육(Training of Trainer)을 개최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를 개최⁷⁹⁾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도표 5-14] 국제평화활동(PKO)센터 교육 인원

2018년 12월 기준

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기 타
7개 과정 1,216명	3개 과정 994명	2개 과정 47명	2개 과정 175명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국제평화활동분과 및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임무 수행 | 한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국제평화활동분과⁸⁰⁾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평화활동 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6년 3월에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인도에서 실시⁸¹⁾하여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전파하고 국제 사회에 평화유지활동 선도 국가로서 이미지를 확산시켰다.

동시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해양안보분과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우리나라 주관으로 해양안보분과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해양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국제 사회에 우리 군의 해양안보 역량과 다자협력 활동을 소개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다.

| 국제평화활동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 추진 | 우리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베트남과 국제평화활동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 9월 한·베트남 국제평화활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

79) 아시아·태평양 국제평화활동센터 협의체 연례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9차 회의로 회원국(20개국)과 유엔본부 참모장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국제평화활동 발전 방향을 토의

80) ADMM-Plus 분과회의는 ①국제평화유지활동, ②대테러, ③해양안보, ④군 의료, ⑤재난 구호 및 인도적 지원, ⑥인도적 지뢰 제거, ⑦사이버 분과회의로 구성되며,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 1개국과 Plus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 1개국이 공동으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

81) 2016년 인도 푸네에서 실시된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인도적 지뢰 제거 합동 최초 야외훈련(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국 18개국 총 280여 명이 참가)에 국제평화지원단 교관 및 훈련팀 31명이 참가하여 도보정찰, 검문소 운영, 호송 작전, 검색 및 차단 임무 관련 훈련을 실시

였으며, 2015년 12월과 2018년 9월에는 베트남 국제평화활동센터에 우리 공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평화활동 파병 노하우를 전수하였고, 파견지에서 위기상황 발생을 가정한 부대방호와 생존기술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2016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하는 4주 유엔참모과정과 군사 전문가 과정에 베트남 장교를 초청하여 관측·감시, 조사·검증, 협상·중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베트남군의 국제평화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2017년 3월의 영국 공병부대 남수단 파병을 계기로 2018년 1월, 영국과 한영 국제평화활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국제평화활동 관련 정보 공유는 물론 영국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엔참모과정에 장교 1명을 파견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164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170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182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187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192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01



국군의 날 행사(2018년 10월)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우리 군은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장병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강한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 군의 기본 임무인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바로 선 가운데 일과 시간에는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개발과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복무 규칙 준수 의지와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배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정해진 제반 규율을 준수하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장병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해 시범부대 운영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군에서는 외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생활관별 수신용 공용휴대전화와 영상 공중전화기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고립감과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국방부는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 군 기강 해이 등의 우려로 인해 병영 내에서의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으나,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 이후와 휴일에 한하여 개인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 시행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 전투임무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이후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한 병사 외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병사의 평일 외출은 현재도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되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¹⁾ 향후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단결활동, 병원 진료, 가족과의 면회 등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각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전·후방 부대별 특성에 맞는 외출 기준을 정립한 이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사적 생활영역 보장 | 헌법으로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병영 내에서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병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에는 영내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고, 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과 이후에는 영내 출·퇴근 개념을 정착시키고, 간부의 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간부들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사적 생활영역을 보장하는 등 장차 병영생활 관리자로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 자치위원회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7조(외출·외박의 구분) 제2항 : “특별외출·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성과제 외출·외박과 수감·포상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한다.”



2.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 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 우리 군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군 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로 인해 작은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병들의 불만은 생활 여건의 불편함보다는 군 내 잘못된 관행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에서 주로 비롯된다는 인식도 있다.

국방부는 지휘관과 참모 등 부대운영 지휘·감독 책임계층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국방부 주관으로 우수부대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포상

|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이라도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²⁾ 이 규정의 취지에 맞춰 장병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운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군은 임무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이나 공적인 영역을 벗어난 지시까지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명령과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들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각 군 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공관 관리병과 각종 테니스병, 골프병 등 복지지원병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군마트 판매병 등 비전투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 장병 사역임무 대체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 임무는 과감히 줄여 나갈 예정이다.

현재도 일부 부대와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전부대 장병들은 여전히 전투임무와 직접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1항 :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무 때문에 휴식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전방 및 전투부대의 제조, 청소작업 등에 필요한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 부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경계작전을 위한 제조작업

3.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 올바른 언어 사용 | 인격과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군인다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생활화하여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군 내 각종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영 언어 지침서와 병영 언어순화 만화책 발간, 국방일보 웹툰 기획연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병영 언어 선도부대’를 운영하여 언어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장병들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장병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영 언어순화 만화책

| 고충 식별 및 해소 | 장병들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군 생활에서의 고충을 식별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병영 환경과 단체생활로 인해 고충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복무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그린캠프, 24시간 고충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국방헬프콜센터, 각종 소원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장병 상담

[도표 6-1] 연도별 국방헬프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 건수

2018년 11월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 건수	47	111	159	176	170

향후에는 보다 예방적인 관점에서 인성검사의 신뢰도 향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연대급부대 → 대대급부대), 국방헬프콜센터 상담창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의 복무적응을 지원하고 제반 사건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연구조직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표 6-2] 연도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원	95	148	207	246	297	346	383	383	522	660

전 장병 자살예방 역량 강화 | 군의 전투력과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³⁾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대급 부대에 자살예방 전담 교관을 양성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별-관리-분리 등 3단계의 자살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군 내 자살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표 6-3] 연도별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원	824	1,601	540	434	550	534	653	664	668	822	650

그러나 자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자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관을 활용하여 지휘관·참모 등 부

3)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연계'하는 사람

대운영 지휘·감독 책임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군 차원의 전문 교관을 양성하고, 자살예방 교육은 반드시 지휘관이 동참하는 등 전 장병들의 자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군본부 자살예방 교육

4.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다른 장병들과 전우로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85만여 명에서 2017년 117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나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체계와 제도를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생활 환경 및 장병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스스로 가고 싶고,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병 봉급을 전년 대비 87.8%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병영생활 필수경비(25만 9,000원)를 제외하고도 계급별로 매달 4만 원에서 14만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하여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군 병사 적금상품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8년 8월에 14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5% 이상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월 4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신규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현재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 장애보상금 현실화 |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부상의 정도에만 보상하고 있어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장애를 입은 병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구분하여,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최소 약 569만 원에서 최대 1,706만 원 수준이던 장애보상금을 최소 약 1,566만 원에서 최대 약 1억 1,74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 피복·개인장구류의 품질 개선 |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투복은 2011년도에 얼룩무늬 전투복에서 디지털무늬 전투복으로 교체한 후 2013년부터 하계 전투복을 추가 보급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신축성과 착용감을 향상하고 적외선 위장성능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선한 전투복을 보급하였다. 또한 가볍고 보온성이 향상된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장병의 병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착용하고 사용되는 생활 밀착형 피복류에 대한 품질과 보급 기준을 개선하였다. 운동화 및 모장갑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속옷류는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기능성 러닝셔츠와 드로어즈 팬티를 확대 보급하였다. 향후 개인 전투용 장갑, 액상 세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급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장구류는 대대급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까지 부대 단위로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전 GOP사단(전투부대)까지 보급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투지원부대에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장에서의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력과 기능성이 개선된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2019년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고 장병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된 피복 및 개인장구류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 건강하고 안전한 군 급식 | 우리 군은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장병들은 교육훈련 등으로 활동량과 체력소모가 많아 일반인 권장

품질 개선 전투복/방한복 상의 연구개발



전투복 상의

전투복 하의



방한복 상의(야전상의) 외피

방한복 상의(야전상의) 내피

생활 밀착형 피복류 품질 개선



개선 운동화

기능성 러닝셔츠



드로어즈 팬티



개선 전투용 장갑(예)

열량 기준인 2,600kcal보다 높은 3,000kcal⁴⁾를 적용한 식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세대 장병의 선호를 반영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⁵⁾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표 6-4] 1인 1일 기본급식비 증가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가(원)	6,432	6,848	7,190	7,334	7,481	7,855
증가율(%)	4.5	6.5	5.0	2.0	2.0	5.0

2018년도에는 군에서 급식하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⁶⁾하고 한라봉, 거봉 포도 등 품목도 확대하여 급식의 질을 높였다. 매년 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선호를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우·갈비·전복·낙지 등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의 급식량은 증량하고 민물장어, 떡갈비, 천연벌꿀 등 16개 품목을 시험 급식품목⁷⁾으로 채택하여 장병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급식혁신사업’을 부대별 여건에 따라 전군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⁸⁾ 또한 급식의 맛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조리원을 2020년까지 소대급 규모의 전 취사장까지 확대하여 증원할 계획이다.



[도표 6-5] 민간 조리원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원(명)	1,373	1,473	1,547	1,586	1,721	1,767	1,841	1,903
증원(명)	187	100	74	39	135	46	74	62
운영 기준 (식수 인원)	180명 이상	150명 이상	140명 이상	130명 이상	120명 이상	110명 이상	100명 이상	90명 이상

- 4) 장병 체위, 군 생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장병 영양섭취 기준' 설정
- 5)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 포함하는 순수 식자재비
- 6)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선택 급식할 수 있도록 하였던 '수입산' 건 고사리, 간도라지, 명태, 코다리 등을 제외
- 7) 민물장어(순살, 연안), 문어(반가공, 연안), 떡갈비, 간소새우, 천연벌꿀, 피조개살(연안), 자숙 불소라(연안), 통살치킨가스, 돼지 곰탕(레토르트), 텐더 스틱, 계란 프라이, 도토리묵+소스, 매콤 만능양념장, 생선조림 양념장, 탕수육소스, 굴소스
- 8) 브런치 제공, 복수·자율 메뉴 제공 등 부대별 여건에 자율적으로 시행
* 2017년 급식혁신 시범사업 만족도 : 5점 만점에 4.1점(우수)

한편 2014년부터 군납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현장을 참관하고 장병들의 급식 실태를 확인하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용하여 군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머니 모니터링단 공군 10전투비행단 급식 현장 방문

군 급식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자재 계약부터 급식까지의 단계별 안전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식자재 계약 시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⁹⁾ 업체를 우대하고, 군납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위생 점검 및 하절기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회수·폐기하고, 해당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병사의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식자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군 급식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확대하여 급식 안전과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권 급식유통센터
(장성, 2012)

충청권 급식유통센터
(대전, 2016)

경상권 급식유통센터
(대구, 2017)

경기권 급식유통센터
(별내, 2017)

9) 위해 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 확인 평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10)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어머니 모니터링단
현장 방문

| 병영생활관 현대화 |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3년부터 협소하고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 구조로 변경하고, 1인당 2.3m²이었던 생활면적을 6.3m²로 확장하였다.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하고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 구조로 현대화하는 것은 생활관의 개념을 병사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주거와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연차별 개선계획에 따라 2026년 부대개편 완료와 함께 종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후

한편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5,000여 대를 설치하여 장병들이 시원한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마련하였다.

해체·이전이 예정된 부대와 같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어려운 부대에는 병영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로 이루어진 ‘병영문화쉼터’를 설치하여 장병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표 6-6]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 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생활실(내무반)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내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0명 소대 단위 침상형 • 1인당 2.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명 분대 단위 침대형, 에어컨 설치 • 1인당 6.3m²
	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신설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 공간	행정, 작전·훈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장실, 중대행정반만 생활관 내 위치 • 대대 행정시설은 별도 건물로 생활관 외부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2.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 여군 비중 확대 |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부응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군 내 활용을 위해 여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7년 기준 군 내 여군 비중은 5.9%(장교 7.4%, 부사관 5.0%)로 확대되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20년 여군 비중 확대목표(장교 7%, 부사관 5%)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에 2017년 9월 「여군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군 신규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군특전여군부사관 후보생 공수 기본교육 자격 강하 훈련(2018년 8월)

| 여군 인사관리제도 개선 |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를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군에서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군도 차별 없이 모든 부대로 확대 보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 직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우수한 여군인력 획득과 더불어 양성평등한 여군하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일·가정’ 양립지원 |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군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한 여군은 출산 후 1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받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이 학교 공식행사 등에 참여할 때는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는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에 따라 5~9일을 허용하던 것을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을 확대하여 셋째 자녀 이상만 최대 3년까지 산입되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소에서 2022년까지 164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2017년 22개소에서 2022년

3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¹¹⁾를 군에 도입하여 군부대의 일·가정 양립 시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성폭력 근절대책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근절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강도 높은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의식 교육 실시, 민간 전문가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민간 전문상담관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연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3개월간 운영하였다. 운영 기간 중 도출된 제도 개선 과제로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 반영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 강화 등 1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의 문화나 제도 전반을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군 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

| 여성 편의시설 확충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와 여군 초임 획득인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편의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병과별, 양성기관별 여군인력 획득 규모를 고려하여 생활관 및 훈련장의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편의시설과 관련한 「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전 부대에 여성 화장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인력 확대를 고려한 여성 편의시설 수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11)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3.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은 군의 사기와 임무 수행 역량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관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전세 등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택을 우선·특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주거지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재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인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 맞춤형 주거지원 | 수요자인 직업군인과 군인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고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거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소요 기준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수요자의 주거만족도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의 희망과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방식을 전환하여 양질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군 주거시설은 건립·매입·BTL¹²⁾ 등 직접공급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급속한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월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전세 대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 | 주거시설의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위해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이 민간주택에 비해 빠르게 노후화되는 것은 군인·군무원 등 비전문가에 의해 부대별로 직접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방부는 주거시설의 품질 유지와 장기 활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로써,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의 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한 권역별 통합관리 방식을 전군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23년 전군 확대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설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불명확했던 국가와 개인의 보수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 주택에 준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적기 예방보수도 시행할 계획이다.



4. 군 의료시스템 개편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자 중심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의 질 향상, 셋째,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 향상할 것이다.

| 군 의무시설 현대화 | 병사들이 제일 먼저 진료를 받게 되는 사단급 이하의 노후한 의무대와 전방 군단지원병원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2025년까지, 전방 군단지원병원은 2023년까지 신축, 리모델링, 증·개축 중 부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병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기존에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하였으나, 1차 의료기관인 사단급 이하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병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장병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병사들이 군 병원의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 스스로 진료일을 예약하고, 간부의 인솔 없이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병원 진료, 환자 면회 등 병원 방문객들의 출입절차를 완화하고 업무시간 중 병원 출입을 자유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장병과 그 가족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병원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갖춘 환자 중심의 병원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 과거 공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민간병원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군 병원 특성화 및 효율화 | 과거 지속적인 군 의료 역량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의 발전속도가 민간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장병과 국민의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장병들의 민간병원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병원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외상 분야를 특성화하는 등 군 병원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방군단을 직접 지원하는 군 병원은 유지하되, 민간병원 이용이 용이한 후방지역 군 병원 16개를 11개로 통·폐합하고, 수술 기능은 권역별 4개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군 의료기관별 기능을 조정하고 특성화할 것이다. 또한 수술기능이 폐지되는 군 병원의 수술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수술집중병원'으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군 병원의 수술역량을 전문화·고도화하고, 기타 군 병원은 환자의 안정·요양 및 재활 기능으로 특성화하거나 지역 내 외래진료와 장병 신체검사 등을 수행하는 '외래검진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군수도병원에 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 총상, 폭발상 등 군 특수질환과 다빈도 질환에 대해 국내 상급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도표 6-7] 군 병원별 기능 조정 및 특성화 방향

구 분		현 재	개편 후	비 고
군 병 원	계	16개	11개	
	국군수도병원	1개	1개	2020년 국군외상센터 설치
	전방병원	7개	5개(고양, 양주, 포천, 춘천, 홍천)	
	후방병원	4개	1개(대전)	수술집중병원(4개) : 수도·대전·양주·춘천병원
	특수목적병원	4개	4개(서울지구, 향의원, 해의원, 포항)	
외래검진센터		-	5개	구리, 부산, 강릉, 함평, 대구

| 군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방부는 그간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의료행위를 보조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 의료기관 내 숙련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복무 군의관은 행정직위 보다는 전방 임상직위에 우선 활용하여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군 병원의 현역군인 의무인력은 필수 직위만 운영하고 그 외에는 민간 의료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민간의 의료역량과 문화를 군 병원에 접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염출된 군의관, 의무부사관 등 현역군인은 전방 일선 부대 의료취약지로 재배치할 것이다.

| 야전부대 의무인력 보강 | 군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빨리 응급 조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골든타임(Golden Time)¹³⁾’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까지 후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국방부는 군의관이 없고 민간병원 이용이 제한된 격오지 및 독립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의무부사관을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전방지역의 격오지 및 독립부대에 응급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현장 응급의료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GOP 연대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고 상비사단 전투중대급 부대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구조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투현장의 응급 의료지원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 환자 후송능력 제고 | 국방부는 2015년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헬기 후송을 전담하는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였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구급차, 후송헬기 등 가용자산을 운용하고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 상황을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악천후 및 야간 시에도 서북도서 등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하여 응급환자 후송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후송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공공의료 기여 | 국방부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군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과거 우리 군은 사스, 메르스 사태 등 국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의무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군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에게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가적 감염병 감시 및 관리, 보건의료 위기대응 등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발전적 민군 의료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3)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술실로 이송되어 결정적 치료를 받아 생존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 통상 1시간 이내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 군 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 |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학업 및 경력 단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장병들의 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원격강좌는 본인이 다니던 대학의 인터넷 개설 정규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07년 최초 강원대, 전북대 등 6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18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82개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정기검정과 지게차와 굴삭기 기능사는 상시검정을 하고 있다.¹⁴⁾ 이를 통해 매년 약 2만여 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도표 6-8】 연도별 원격강좌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격강좌 개설 대학 수(개)	99	110	122	134	141	145
원격강좌 개설 강좌 수(개)	3,225	3,337	3,506	3,871	3,922	4,145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병 수(명)	18,291	19,443	20,206	20,653	19,436	19,530

|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무료화, 2017년 대학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지원¹⁵⁾ 등에 이어 2018년부터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병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4) 국가기술자격 군 내 검정은 산업기사 21개 종목, 기능사 61개 종목에 대해 전·후반기에 각 1회씩 정기검정으로 시행되며, 이 중 수요가 많은 지게차운전 및 굴착기운전기능사 검정은 상시 실시(2018년 38회 시행)

15) 2016년 이전에는 개인이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와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를 지불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국방부는 병영 내 악성사고, 인권침해 행위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국방부는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유가족의 의혹 해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재조사, 수사, 순직심사 등 원스톱(One-Stop)식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군 사망사고 초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순직·공상 기준 확대를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으로 객관적 진상규명 여건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2,699명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 왔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면서도, 안

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8년 12월 28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군 인권보호관 설치 | 장병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군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장병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부대방문·조사권 등 군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에 지장이 없도록 군 인권보호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 인권보호관은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군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하여 군 대 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관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 군 인권교육 강화 |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군 인권교육에 대한 중기계획(5년)을 수립하고, 국방부 및 각 군이 유기적 협력 아래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 복무주기와 부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휘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대별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교육, 의료·수사·교정 등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인권교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활성화 및 장병 참여형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인격과 명예, 권리가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만들 것이다.

| 군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장병 인권 의식 변화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현행 군 인권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 장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인권상담, 진정접수 기능을 체계화하며,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장병 인권실태조사 등을 지속 실



국방인권모니터단 간담회(2018년 6월)

시할 것이다. 또한 인권 현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인권자문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단급 부대에 군 인권자문번호시를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인권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병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병 징계제도 개선 | 군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원칙¹⁶⁾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등의 징계로 보완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징계제도가 개정될 경우 군기교육은 군 공동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6-9] 현행 징계 종류와 개선안 비교

현행	개선안	비고
강등	강등	현행 유지
영창	군기교육	영창 폐지/신설
	감봉	신설
휴가 제한	휴가 단축	현행 유지(용어 수정)
근신	근신	현행 유지
	견책	신설

2. 군 사법제도 개선

|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군 사법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하였다.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하며,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군사법원의 근간이 되어 온 관

16)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압수, 수색, 체포,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헌법 제12조 제3항)

할관 확인제도¹⁷⁾ 및 심판관 제도¹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판사에 대한 별도의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급추천권,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고, 군 판사는 법무참모, 군 검사 등 다른 법무직역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군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군 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도표 6-10] 군 사법개혁의 목표와 주요 내용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보장			
군사법원 제도 개선		수사제도 개선	
조 직	재 판	군 검찰	군 사법경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지역 군사법원장 민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조치권 폐지 군 판사 순환보직 금지 군 판사 신분보장 심판관 제도 폐지 순회 재판 실시 장병참여재판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군 검찰단 설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 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작전 헌병 분리 경찰 인권강화 방안 도입 군 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병사의 군 사법경찰 임명 금지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 마련 |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창설하기로 하였고,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¹⁹⁾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수사와 작전 군사경찰로 조직·기능 분리, 군사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군사경찰 병사의 사법경찰관리²⁰⁾ 임명 금

- 17)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으로(군사법원법 제7조), 관할관은 군사법원 판결을 확인조치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보유(군사법원법 제379조)
- 18) 군사재판의 특유한 제도로서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 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제도
- 19)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에 따라, 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
- 20)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군 수사기관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며, 군 사법경찰관리에는 군 사법경찰관과 군 사법경찰리가 있음. 군 사법경찰관은 관할이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군 사법경찰리는 군 검찰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군사법원법 제46조). 현재 군 사법경찰리는 군사경찰인 병,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등이 있음

지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 2018년 7월부터 군 수사절차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피의자의 휴식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군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국방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군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문민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민·군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 마련, 정책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국방운영을 개방화하고 있다.

1. 국방부 문민화 적극 추진

| 국방부 문민화²¹⁾ 실질적 추진 |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며, 국방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통제 원칙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전제로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문민통제의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실질적인 국방부 문민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 실장급 직위를 예비역이 아닌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최초로 민간 출신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는 한편 현역장성이 보임해 온 전력정책관을 민간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등 실질적인 문민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에도 군인이 보임되어 있는 국방부본부의 국·과장급 직위 중 문민화 필요 직위를 추가 식별하여 대체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민간인의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국방·군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인 필수직위는 최적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방 교육·연구기관의 주요 직위 문민화를 위해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민간출신을 보임한

21)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및 행정부 각료인 국방부장관과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함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

데 이어서, 국방대학교 총장도 현역 장성에서 문민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순수 민간출신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장관의 군사 보좌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다.

| 국방부분부 공무원 군사 전문성 강화 |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국방부분부의 인적 구성을 문민 중심으로 편성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민간 관료와 직업군인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국방부분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 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군사전문성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부 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은 군사전문성 및 정책 분야별 전문성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 분야별 보직 관리 및 현장 중심의 업무 정착으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및 정책전문성 역량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군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및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에 한정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무가 없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정치적 개입을 지시한 군인 이외에 외부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거부 의무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 「부대관리훈령」상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완할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전투력의 근간이며, 국민의 신뢰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통해 군은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진정한 군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제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 | 국방부는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인성 친화적 군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병들에게 인문학, 역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에

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며 스스로 실천하여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 본연의 조국 수호 임무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3. 개방형 국방운영

|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 국방부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 전략인 ‘참여와 협력’에 맞게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및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국방NGO 포럼’²²⁾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인권모니터단’,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국민디자인단’²³⁾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피복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집행 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2018년 1월에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장병 복지 및 인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약 40여 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학생, 시민, 장병 등이 두루 참여하여 총 613건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또한 국방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5월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장병이 함께 모여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 제안 사업 중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대표적인 사업들은 2019년 국방예산에 반영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2) 국방 현안에 대하여 민·군 간 양방향 정보공유·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NGO 단체가 함께하는 포럼

23)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해 나가는 정책 워킹그룹



2018 국방예산 대토론회

| 민·군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 마련 | 국방부는 청렴국방 실현을 위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에 의해 군의 부패행위를 감사하고 개선권고 기능을 갖는 ‘청렴옵부즈만’ 제도 도입, 군의 반부패 대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운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시민단체와 청렴협약 체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이 공직자의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직무 수행의 근간으로 삼도록 전군 차원의 청렴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신고자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 색출, 신상정보 유출, 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국방 발전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적극 보상할 계획이다.

| 정책 홍보 활성화 | 국방부는 정책참여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매체, 온라인 및 현장 소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방개혁 2.0」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22 군인복지 기본계획」, 군 의료체계 개편, 군 사법개혁 등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와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제70주년 국군의 날, 2018 국제관함식 등 주요 행사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국방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온라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서도 여전히 과급력이 높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²⁴⁾도 지속 추진하여 병영생활 개선과 국군의 대외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평창, 우리 군이 책임진다’ 등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방송을 통해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리 군의 활약상을 전파하였다.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장병사랑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하여 진

24) 2017년 7월 ‘혹서기 장병 의식주 개선’편(KBS), 2017년 12월 ‘전문의무병제도 및 군 의료서비스’편(KBS), 2018년 4월 ‘한빛부대 창설 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SBS) 등



고마워요 우리국군 경례 이벤트(2017년 11월)

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기 연예인과 장병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송’을 제작하였고, 국민을 대상으로 ‘따라 부르기 공모전’도 실시하였다.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이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오프라인 ‘경례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영상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2017년 최초로 추진한 ‘국군화보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직책별 전문성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페이스북 등에 총 260만 회 이상 조회되고 달력으로도 제작되어 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민 및 장병들과의 소통 활성화,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의 비무장지대(DMZ) 현장 견학 및 부대 병영식당 체험행사, 울릉도에 근무하는 장병 응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2017년 제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 2017년 12월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정부 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온라인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소통하기 위해 언론·홍보·사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소통전문가단’²⁵⁾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²⁶⁾를 운영하는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25) 2015년부터 국방정책 홍보 아이디어 발굴과 전문가들의 재능 활용을 위해 운영(2017년 19명 → 2018년 22명)

26)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 소통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젊은 층 위주의 온라인 기자단(2017년 30명 → 2018년 52명)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국방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병무행정 개선

| 병역자원의 안정적 총원 | 전환·대체복무²⁷⁾는 병역자원의 총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2020년대 초반 이후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폐지·감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우수인재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 |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대체 불가능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들의 불성실한 병역이행 사례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요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하여 2016년 6월부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이행사항을 별도로 관리해 왔으며, 2017년 9월 22일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자녀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들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병역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병역 이행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27) 전환복무는 현역병 임명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대체복무는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이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업 등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병역회피·면탈 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²⁸⁾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판정검사 개선 |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를 개선하고 있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심리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수검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질병·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입영 후 군부대 내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 있다.

2.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방부는 군 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요구한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은 2018년 3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화성 지역 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은 군 공항 입지 적정지역에 대한 군사사전 적합성을 검토한 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8)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후보자

앞으로도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전사업으로 야기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 해·강안 지역 경계작전을 위해 설치한 철책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주도로 철거할 예정이다.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은 관광자원 개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철거 요청 시 군의 작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된 구간에 한하여 지자체 예산(또는 국비 50% 지원)으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주도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18년 실시한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결과는 [도표 6-11]과 같다.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구간은 외부 설계용역을 통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2019년부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또는 대체를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표 6-11]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 결과

단위 : km

구 분	대 상	기존 철거 승인구간			작전성 검토 결과			
		계	완 료	진 행	계	존 치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즉시 철거
계	413.3	114.62	69.3	45.32	298.68	129.08	34.67	134.93
1야전군	183.55	92.02	64.7	27.32	91.53	52.36	0.31	38.86
2작전사	51.23	-	-	-	51.23	26.88	10.12	14.23
3야전군	178.52	22.6	4.6	18	155.92	49.84	24.24	81.84

| 유희·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 |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군 유희시설에 대한 철거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희·방치 군사시설을 정리하여 왔으나, 과학화 감시 장비의 발달과 군 병력 감

소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 해체·축소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진 기존 시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군 유휴시설물 방치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를 위해 2018년 현장 확인과 작전성 검토 등을 병행하여 영·내외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시설 철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유휴 군사시설들을 2021년까지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 과거 군이 전시, 긴급 작전수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한 사·공유지로 인해 일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군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적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540만^m² 중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2,572만^m²이다. 국방부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임차하고 있으며, 부대 이전·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 반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 사업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 및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입, 임차,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점유 사·공유지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안 마련 | 군 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 있을 뿐 관련 지원 및 보상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권 침해 등을 완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내외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군사시설 적용 범위 확대²⁹⁾, 주민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등이 포함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2019년에 재정당

29) 18·19대 국회 제출 정부안의 적용 대상 군사시설은 군용비행장, 사격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

국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민군 공동 사용 활성화 | 국방부는 군 보유시설을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시설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은 40여 개소의 체육·문화시설을 주민에 개방 중이나, 지역사회의 공공 체육·복지시설 부족으로 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추가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군 시설의 개방을 위해 개방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도표 6-12] 주요 개방 사례 : 공군사관학교

구 분	주요 내용
주민편의 제공	• 생활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주민에게 상시 개방
지자체 대규모 행사 지원	• 전국체전, 소년체전, 세계 소방관경기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대규모 지자체 행사 장소 지원
민간행사 지원	• 체육대회, 단합행사 등의 행사에 학교시설(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하늘공원) 제공 • 콘서트 등 문화행사 시 대형강당(안중근홀) 대관

2018년 4월부터 군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주차장·회의실 등의 공공자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개방 소요가 많은 시설을 시범 개방한 후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복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4. 국방 규제 개혁

| 국방 분야 규제 개선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에 맞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도록 미래 신산업, 군사시설,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설 분야의 신기술·우수제품을 군 시설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선정 절차를 간소화³⁰⁾하고 신기술·우수제품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군복과 군용장

30) 당해 연도 군 시설 사업에 적용할 신기술·우수 제품을 일괄 선정함으로써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적용기술을 선정함에 따른 업체의 입찰공고 부담 등을 경감

구의 제조·판매 허가신청이 처리기간인 40일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의 핵심인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원을 위해 미래 도전 기술 개발 제도 도입을 추진³¹⁾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무인·로봇·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방산물자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간소화³²⁾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추진³³⁾을 적극 지원하여 군 관할공역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허가, 사업용 드론의 시험비행 공역 확대 등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규제 개선과제 추진 외에도 국방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령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의 적절성을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및 기업 현장의 수요조사,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도표 6-1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비행안전구역 해제 현황 포함)

단위 : km²

구분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제	778.59	225.71	25.22	49.54	1.59	27.79	26.72	20.36	26.12	37.13	338.41
완화	320.47	240.66	2.67	5.70	6.25	0.76	46.53	4.51	0.22	0	13.17
합계	1,099.05	466.37	27.89	55.24	7.84	28.55	73.25	24.87	26.34	37.13	351.57

아울러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국민

31) 현행법상 국방기술개발은 소요에 의한 개발에 한정되어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이 어려우므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무인, 로봇,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여 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칭)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제정 추진

32) 주요 방산물자 수출허가 전 '수출 예비승인'과 '국제입찰 참가승인'을 '수출 예비승인'으로 통합

33)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에서 발굴한 국방 분야 규제

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위탁³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25.29km²를 추가로 위탁하였다.

[도표 6-14] 협의위탁 지역 현황

단위 : km²

합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43.64	643.33	230.06	55.24	40.56	93.49	46.65	344.17	57.2	7.65	25.29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병행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군 협의 대상을 축소하고, 폭발물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³⁵⁾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침해할 여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민군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및 지자체 불편사항 등 접경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향후 작전환경이 변화³⁶⁾되면 국방부는 이에 맞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탄약 안전거리 조정 |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건물 신축 및 증축 제한, 공공도로 건설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탄약시설 주변 주민들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체 탄약고의 31%를 차지한 노후화된 지상형 탄약고를 이글루형 탄약고로 현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는 안전거리를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특히 2017년에 경기도 포천시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지하(터널)형 탄약고를 군 최초로 신축하여 송우리 일대 18만m²를 포함, 해당 탄약부대의 안전거리를 기존의 452만m²에서 133만m²로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송우~양주 지선의 개통을 보장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지하(터널)형 탄약고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탄약저장 지원능력을 향상

34)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행위 가능

35)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개정 및 제7조 제2항 삭제

36) 미래병력 감소, 무기체계 변화, 부대구조 개편 등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18년 정책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지질상 지하형 탄약고 신축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지하(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중장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 군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 | 국방부는 군에서 배출된 오·폐수³⁷⁾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오수처리시설 2,973개소와 폐수처리시설 1,34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4,107개의 특정 토양오염대상시설³⁸⁾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사업 등 토양환경 복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된 드럼야적장, 방유조³⁹⁾ 등 토양오염 방지 시설 소요 17,595개 중 2017년까지 14,245개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294개소,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총 3,05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 국방부는 장병들이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라돈 저감사업, 유해환경작업장 개선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⁴⁰⁾ 석면 함유 건축물 총 23,975동을 확인했다. 이 중 부대 이전, 유희시설 철거공사 등 타사업 대상인 7,794동을 제외한 16,181동을 대상으로 2018년에 262동에 대한 석면 함유 자재를 제거하였다. 2019년부터는 2배 이상 증액된 500억 원 이상을 지속 투입하여 석면 함유 자재의 제거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병영생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408동 중 225동에 대해서 토양배기법·실내환기법⁴¹⁾ 등을 적용하여 저감사업을 완료했다. 2018년에는 38동을 대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시설 145동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저

37) 오수(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하수도법」 제2조)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물환경보전법」 제2조)

38)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로 20,000ℓ 이상 유류저장시설이 포함됨

39)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욱조 형태의 구조물

40) 육군·해군·해병대는 환경담당관이, 공군은 고용노동청에 등록된 자체 석면조사팀에서 조사 시행

41) 토양배기법 : 건물 하부의 토양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토양의 압력이 낮게 되어 실내로의 라돈 유입 방지)
실내환기법 :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공법

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해환경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탄약창 등의 도금·정비를 수행하는 2,500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작업환경 측정 및 5년 주기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환기설비 및 집진기⁴²⁾ 등을 설치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해서 이상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상 정도에 따라 인원 교체, 입원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추진 | 국방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부대운영 분야, 군 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 등 총 2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대운영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18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육군훈련소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각 군 신병교육대와 지휘통제실, 전 병영생활관 및 병원 병실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 병사에게 연간 보급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2018년 14매에서 2019년 18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상용 지프와 버스, 트럭 등 노후 경유차량을 2019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분부와 소속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를 2019년까지 친환경차량으로 전량 교체하고, 각 군은 2028년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50%를 친환경차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압축천연가스(CNG⁴³⁾ 및 전기 차량은 시범사업 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42) 국소배기장치 : 분진, 가스, 증기 등 발생물을 처리하는 장치
집진기 :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43) Compressed Natural Gas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국방부는 제대하는 모든 장병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전직교육과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전역 예정 장병 취업지원 강화

|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 국방부는 입대-복무-전역 후까지 군 복무 전주기를 아우르는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⁴⁴⁾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취업역량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관이 일선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과 ‘1:1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도에 시행한 병영멘토링과 부대순회교육을 진로도움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개편하였다. 진로도움교육은 ‘진로지도반’과 ‘취업지원반’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로탐색 및 설계와 정부 청년고용정책 사업 이해를 공통적으로 교육한 후 반별 맞춤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8년에는 연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총 350회를 시행하고 2020년까지 2,000개 대대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1 취업상담은 ‘취업지원반’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기업과 채용을 연계하거나 정부 청년고용사업 알선을 지원하며 2018년 육·해·공군 26개 사·여단급 소속 장병 중 구직희망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0년에는 3만 명까지 교육수혜자를 확대할 것이다.

2단계는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1일 또는 1박 2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한 취업역량 전문교육과 기술병과 간부 대상 창업역량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44) 청년장병들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의무복무장병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SOS : Soldiers on SMEs & Startups, 청년장병을 중소벤처기업으로)

3단계는 1, 2단계를 거친 장병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자리 커플 매니저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매칭하고 2단계의 창업역량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역예정 장병 중 희망자는 중소기업부의 창업사관학교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 중·장기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자의 연령은 30~40대로 생애 기간 중 지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전직기간 확대, 전직교육체계⁴⁵⁾ 개선 등 맞춤형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이전의 연계 교육과 주문식 교육을 특성화맞춤형 교육⁴⁶⁾으로 통합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과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자들의 전역 후 진로와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각 군 보수교육과정에 복무 설계교육을 반영하여 초기에 진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전역 1~2년 전에는 진로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기복무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복무 연수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전직 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3개월의 전직 기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이후에는 전직 기간을 3~7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게는 진로교육을 전직교육기간 2~3년 전에 실시하고, 기본교육은 전직교육기간 중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 연수에 따라 10개월에서 12개월의 전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복무자들이 복무 중에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만남 행사, 해외취업설명회, 취업 아카데미 등 취업지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부대 지휘관이 전역 예정자의 전직지원 기간 전이나 전역 6개월 전에 전직 준비상태를 확인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직준비상태보고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⁴⁷⁾ 기반의 군 직무 표준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교육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목으로 개편하고 있다.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역 후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무표준화를 완료하여 장병이 전역할 때 사회의 동

45) 진로설계 → 진로교육(1박 2일) → 기본교육(4박 5일) → 컨설팅(온라인 또는 4박 5일) → 군 특성화맞춤형 교육

46) 군 기본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 취업과 연계하여 자신의 전문능력을 향상할 목적의 교육으로 군과 기업·단체와의 상호 협력하에 진행

47)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중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표준화된 직무를 편제표에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된 직무경력을 군 경력증명서⁴⁸⁾에 표기함으로써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학점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학계 등 민·관·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표 6-15]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방안



|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 제대군인을 위한 군 내 일자리는 군수, 교육, 행정 등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민간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직위를 제대군인 적합 직위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군 외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따라 의무해경, 의무소방원의 대체인력 충원, 의무경찰 감원에 따른 경찰관 충원 등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는 곳에 제대군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경력 채용과 군 경력 응시요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기업 및 단체들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채용,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기업인력 애로센터에서 인공지능 잡매칭과 일자리 커플 매니저를 통해 매칭을 지원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매년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2018년 전역 예정 장병 취업박람회(2018년 3월)

48) 군 경력증명서는 경력증명서를 전역증 대신 발급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년 1월)하여 자신의 복무 성과 확대, 전역 후 취업기회 확대, 병사의 성실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

업인 대회 등 제대군인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용협력을 위해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용

|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연령·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적 성격뿐만 아니라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보장적 성격,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다. 또한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 연금보다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

| 군인연금제도 개선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이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을 2017년 11월 28일 개정하였다. 또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반영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 장병 재해보상 강화 |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 함에도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될 때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군인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병사에 대한 장애보상금 대폭 상향, 순직유족연금의 보상수준 현실화 등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3.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6·25 전사자 유해발굴⁴⁹⁾ |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유해발굴 전문기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획운영, 조사, 발굴, 감식, 대외협력 5개 과, 8개 발굴팀에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11,551위(位)⁵⁰⁾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44,428명의 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하였다. 전사자 신원도 추가로 확인하여 131위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렸다.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좀 더 많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유해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표 6-16]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위

구 분	계	2000~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굴유해	11,551	2,875	1,284	1,440	1,387	1,041	736	913	622	429	448	376
아군·경	10,204	2,233	1,143	1,328	1,300	989	671	809	561	387	420	362

* 유해발굴 누계 : 총 11,551위(아군·경 10,204위, 유엔군 18위, 적군 1,329위) / 미 DPAA 봉환 국군 유해 65구 포함

[도표 6-17]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구 분	계	2000~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DNA 시료 채취	44,428	3,378	2,282	4,524	3,388	4,252	4,765	4,005	2,645	2,921	4,041	4,072	4,155
신원 확인	131	31	13	11	6	7	11	5	17	8	9	9	4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국무부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⁵¹⁾)과 우리 국방부 간의 합의서(MOA⁵²⁾)를 체결

49) 6·25 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위(位)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 차원의 호국보훈 사업

50) 군·경 10,204위, 유엔군 18위, 북한군 725위, 중국군 604위

51)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52) ①유해발굴 관련 상호 정책적 지원 제공, ②6·25 전쟁 시 사망자·실종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 협력, ③양국 간 공동조사 및 발굴 시행, ④한미 연례회의 개최(공동관심사 논의, 협력보장) 등을 합의



하와이에 보관 중이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결하였다. 2017년 6월에는 2017년 3월 충북 영동 지역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 1위에 대해 ‘미국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중국군 유해 20위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2018년 10월 1일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64위의 호국영웅을 하와이에서 우리 국방부차관이 직접 인수하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주관하에 최고의 예우로 봉환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경험과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러 2017년 9월에는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 대표단 5명이 방한⁵³⁾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협업 사항을 논의하였고, 10월에는 호주 국방부장·차관, 국방총장 등 일행이 우리의 선진화된 유해사업의 식별, 탐지, 발굴 및 사후관리 등 유해발굴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다.⁵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언과 제보자가 줄어들고, 국토개발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발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현재 10,204위의 군·경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불과 1.3%인 131위에 그치고 있다. 전사자 직계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후 2~3세대와 국민의 참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전·출입 신고서 작성 양식지와 통계청 정기 인구조사 간 설문지에 유가족 관련 사항을 추가 작성토록 협조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 관계협의회⁵⁵⁾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발굴 유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밀감식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신원확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 | 국방부는 비군인 참전자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6천여 명의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도표 6-18]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누적 현황

2018년 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학도 의용군	노무자	국민 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의용경찰	철도 공무원	강화청소년 유격대	청년 방위대	기타
현황	36,190	1,188	4,215	1,594	1,534	8,578	6,466	6,036	2,405	576	3,598

53) 베트남 1237국가지도위원회(소장 쩌픽중) 등 5명 방문(2017. 9. 11. ~ 15.)

54) 호주 국방장관(마리스 페인) 등 9명 방문(2017. 10. 12.)

55)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 제647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상 매년 실시(위원장 : 국방부차관)

1995년 이후 축적된 6만 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고, 비군인 참전검색시스템⁵⁶⁾을 구축하여 참전사실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참전유공자로 확인된 분들이 참전명예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급,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보훈병원 진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참전용사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 2002년 6월 29일 서해 해상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전사’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전사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 개원 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오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2017년 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1월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2018년 7월 17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2002년 당시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하고 전사자 1인당 1억 4,000만 원~1억 8,00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56) 참전사실 확인 자료를 즉시 비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10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15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2018년 9월)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도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 정책 배경 |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하에서 남북 간 더 이상의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발전 전략이 필요하였고,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였다.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경과 |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축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7월에는 ‘베를린 구상’¹⁾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9월 유엔 기조연설 등 외교무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일관된 메시지

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코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돌파구로 남북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실천 과제를 북한에 제안

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은 2018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 오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 및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화답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마침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의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²⁾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의 준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 위에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³⁾에 합의하였다.



2018 남북 정상 회담 시 공동 식수 행사(2018년 4월)

| 우리 군의 노력 |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 맞추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2017년 7월 17일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4월 남북 정상 회담 개최를 전후로 남과 북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였다.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군

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 회담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

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실천 방안에 합의

4) 국방부는 2018년 4월 23일 00시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장비를 철거했으며, 북한군 역시 4월 24일에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2일 사이에 장비를 철거

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⁵⁾ 복원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간 국제상선 공통망 운용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또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되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7월 16일부터,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18년 6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8월 15일부터 정상화되었다. 2018년 7월 31일에는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어, 「관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견해 일치를 이루었고,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관문점선언」의 다양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실제 조치를 담은 합의서안을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하였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서의 최종 문안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은 양 정상에 지켜보는 가운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관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행실태를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관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였고, 남·북·유엔사는 총 3차례의 '3자 협

5)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서해 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국제상선 공통망 이용, ②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③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 ④서해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포함



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이행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11개 GP에서 화기·장비 및 인원을 철수시키고 2018년 11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 GP를 제외한 10개 GP에 대해 철거·파괴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중단하면서 시범적 철수 대상이었던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철원 지역 화살머리고지에서는 2019년 4월로 예정된 공동유해발굴 개시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 평화체제⁶⁾ 구축 |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현 정부도 2017년 5월 출범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전체제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진전과 연계하여, 군사적으로도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공존과 공동

6)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공고하게 평가가 보장된 상태



북한 DMZ 내 GP 목록

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군비통제⁷⁾ 추진 |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남북기본합의서」⁸⁾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판문점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가 평화의 땅,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⁹⁾와 ‘구조적 군비통제’¹⁰⁾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7)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 안보를 증대하려는 모든 노력

8)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 남과 북은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9)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군사적 조치(運用的 軍備統制, Operational Arms Control)

10) 군사력의 규모, 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 및 감축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構造的 軍備統制, Structural Arms Control)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국방부는 남북 통행의 군사적 보장 및 군 통신선 운영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과 양래가 활성화되는 데에 따라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개요 |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다방면의 남북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동해·경의선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서해지구에서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정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통행·통신 등을 유지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남북 통행의 군사적 보장 | 남북한 사이의 직접 통행은 대부분 육로 통행이며 간헐적으로 해로와 공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로 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철도 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다. 육로 통행의 대부분도 개성공단 출입을 목적으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중단되었다.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의 한국 방문 시에 서해지구를 이용하는 등 도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육로 통행 시 우리 군은 유엔사 및 북한군과 협의하여 군사적 보장조치를 이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 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제



남북관리구역 육로 통행 호송(동해지구)

공하고 있다.

해로 통행은 '5·24 조치'¹¹⁾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이 탑승한 만경봉92호가 북한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우리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해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향후 해로 통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우리 군은 남북 간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할 것이다.

공로 통행은 일반적으로 서해 임시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어서 3월 한국 특별사절단과 예술단의 북한 방문 시에 서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2018년 1월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 선수단과 5월 북한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한국기자단 방문 시에는 동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방문단은 우리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우리 공군 수송기는 9월 평양 정상 회담 관련 물품과 정상 회담 답례품인 '제주산 감귤' 수송도 지원하였다. 우리 군은 동·서해 임시 직항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남북 군 통신선 운영 | 남북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과 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 17일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24일에는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0년 11월 산불로 소실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이후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약 2년간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군 통신선 복원에 합의하면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다시 복구되었으나, 노후화의 문제 등으로 유선통화만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에 2018년 6월 14일 남북 군사당국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단절된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노후화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6월 25일에는 '남북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남북통신실무접촉(2018년 6월)

11)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한(2010. 5. 24.)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7월 16일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였다.¹²⁾ 군 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군 통신선 정상화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 우리 정부는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존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자력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며, 귀환 국군포로 현황은 [도표 7-1]과 같다.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는 2018년 12월 말 기준 27명이 생존해 있다.

[도표 7-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연도	총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8
포로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우리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조속히 국내로 송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정부는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대북 물품 지원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지원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승인

한편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은 2000년 6월 정상 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선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따라 2014년 국군포로 20명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2018년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국군포로는 56명에 달하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귀환 가족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서의 대우 및 지원 이외에 세 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초청 행사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등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금 형태의 위로 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귀환 국군포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귀환 국군포로 초청 행사

국방부는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 국군포로 생존 확인과 송환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가족의 탈북 시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제3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귀환 국군포로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전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부 록





공군 블랙이글스

특별부록

1.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222
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27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231
4.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236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40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42
3. 연도별 국방비 현황	243
4. 남북 군사력 현황	244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245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246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247
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48
9. 남북 군사관계 일시	261
10.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시	267
11.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269
12.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270
13.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1
1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76
15.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81
16.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83
17.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285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287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88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91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92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93
23. 국방기구도	294
24.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296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06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1.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및 성과

새 정부의 개혁과제 1호인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 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적폐청산위원회는 위원 선정, 과제 선정, 논의, 결론 도출 및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9월 25일 출범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하면서 군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정의롭고 신뢰받는 군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강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감사, 법무, 인권 분야, 시민단체 등 9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적·민주적 가치 훼손, 인권침해, 군에 대한 신뢰 실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부조리·불공정 사건들을 중심으로 10대 권고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별로 국방부 소관 부서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였다.

| 군 적폐청산위원회 성과 | 위원회는 약 5개월 동안 11회의 전체회의와 30여 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10대 권고 의제와 69건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10대 권고 의제

1차 권고 (2017. 12. 14.)	2차 권고 (2018. 1. 11.)	3차 권고 (2018. 2. 8.)	4차 권고 (2018. 2. 22.)
① 군 정치 개입 근절 법제화 ②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③ 좌우 극편향 안보 교육 제도 개선 ④ 병역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⑤ 군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및 제도 개선	⑥ 기무사 군인·민간인 사찰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 ⑦ 군 인권침해 근절 및 제도 개선 ⑧ 군 내부신고 활성화	⑨ 군 인사적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⑩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부 과제 : 18	세부 과제 : 6	세부 과제 : 29	세부 과제 : 16

2.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 세부 내용

| **군 정치 개입 근절 법제화** |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 2012년 4월 제20대 총선과 그해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여론 조작 인터넷 댓글 활동 사건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켰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 개입은 이를 지시하는 외부나 상급자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군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정치 관여 등을 지시하는 상관과 외부공직자를 처벌하고, 하급자는 내외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해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더 이상 군에 대한 정치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군 의문사 진상 규명** | 군 의문사란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 또는 사고를 말한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의문사 유가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순직 제도를 개선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진실 규명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차관 직속으로 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2018년 9월 14일 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였다. 또한, 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 인정 기준을 완화했으며, 2008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¹⁾가 조사한 230명의 진상규명자 중에 유가족이 순직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91명을 일괄심사하여 90명을 순직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군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외부전문가 수사 과정 참여, 보훈신청 업무 처리 간소화, 자해사망 순직자 대상 전우사랑위로금 지급 등도 제도를 개선하였다.

| **좌우 극편향 안보교육 개선** | 장병 및 예비군 대상 일부 안보교육에서 특정 정치이념에 편향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 내용에 거부감을 갖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안보교육 과정에서 군에 대한 정치적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하며, 외부 전문 강사 선정 기준과 교육 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장병 및 예비군 대상 안보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1)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2006.1.1.부터 2008.12.31.까지 활동한 한시적 기구임

국방부는 정훈 교육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정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절 거론하지 못하도록,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예비군 안보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부 강사 초빙 교육에 대한 검증 관리와 교육 피드백 강화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장병 선호도와 최신 경향이 반영된 ‘강군비타민’, ‘TV특강 지식 in’ 등의 강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병역비리 근절 | 그동안 일부 고위 공직자나 그 자녀,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병역면탈 소식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반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2000년 이후에는 내부 직원이 연루된 병역비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대기기간 장기화 및 사회복지요원 배치 기관 선정에 있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지방재정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중식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사회복지요원 소요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대기에 따른 병역의무 면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배치 기관 선정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고위 공직자 자녀의 사회복지요원 근무기관 선택 대상에서 국가 기관을 제외하고, 본인 선택은 사회복지시설, 지하철 공단 등 비선호 기관을 우선 선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대기에 따른 전시근로역 처분 대기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전체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기관을 선택할 때 선호 기관을 제외하는 방안을 수립·실시할 계획이다.

| 군 장병 사적 운용 근절 | 4성 장군이 공관병에게 사적인 업무나 부당한 지시, 폭언 등을 일삼은 ‘공관병 갑질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였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문제가 되는 4성 장군은 제도상 징계가 불가하고, 비전투 분야인 복지회관에 관리병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4성 장군은 선임 장교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공간 규모 기준을 마련하여 병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징계 및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부족한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편제 대비 초과 운영 중인 복지회관 관리병은 보직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복지회관 관리병도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각 군 복무 규정 개정, 직권남용 사례집을 제작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올해 지휘관 공관의 적정 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기사사 군인·민간인 사찰 근절 및 인권보호 강화 ｜ 국군기무사령부는 본연의 업무인 보안, 방첩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위법 소지가 있는 활동을 금지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사사는 장병들의 일과 후 개인 생활이나 가정사를 관찰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전면 폐지하고 신원진술서 기재 항목이었던 보유 재산, 친교 인물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사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민간인 사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인권보호센터(위원회)에 민간자원을 확대하고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신원조사 업무지침」과 「부대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보안, 방첩, 부정비리 예방과 무관한 활동과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사찰을 전면 폐지하였다. 또한, 신원조사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인권보호센터에 민간자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군 인권침해 근절 ｜ 우리 군은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여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이어져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내부에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 인권 보호 컨트롤 타워 정립’, ‘인권 평가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보호 강화’, ‘군 외출·외박 구역 제한과 같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인권 업무를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인권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2019년 10개 사단급 부대를 선정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군 인권 자문번호사 도입, 인권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청구권 활성화 유도, 사관학교 생도 이성 교제 보고 의무화 폐지 등 군 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 및 질병을 입은 전역자 및 그 가족과 고통을 분담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 이외에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군인 외출·외박 구역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 상생 발전,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군 내부 신고 활성화 ｜ 내부 신고는 비리나 부패를 근절하고 자정 기회로 삼을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색출, 인적사항 유출,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내부 신고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내부 고발로 인한 불이익·피해 구제 조치, 법·제도 마련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군 부패·비리 사건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방부 소관 법률을 포함해 국방 관련 공익신고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그리고 신고자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조치한 책임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군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군 부패 비리 사건 조사에 외부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군 인사는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특히 우수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분야별 전문가 식별 및 관리에 허점이 있고 기존 임기제 진급 제도와 중복되는 등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가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장군 진급 심사에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폐지하고, 정성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군 참모총장을 제청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군 성폭력 근절** |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 의제로 분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군 성폭력 방지 정책 관리 감독기구 설립,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재조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 환경 구축, 피해자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립기구 신설을 포함하여 성폭력 근절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성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 정책, 조직 환경,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3. 체계적인 권고 과제 이행

국방부는 약 5개월간의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군 내 불합리한 부조리와 관행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성찰하였고,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위원회 권고 과제(총 69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폐청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1. 핵 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 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 부에 핵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라늄 광산 개발과 채광된 우라늄을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료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90년 완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 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 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 옵션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기본합의」²⁾ 타결로 북핵 문제가 극적으로 봉합³⁾됨으로써 북한의 핵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안전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선언하였고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과 경수로 건설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2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1차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약 3~4kt의 위력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 시	2006. 10. 9. (월) 10:36	2009. 5. 25. (월) 09:54	2013. 2. 12. (화) 11:57	2016. 1. 6. (수) 10:30	2016. 9. 9. (금) 09:30	2017. 9. 3. (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1994. 10. 21.)

3)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북미 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⁴⁾ 달성을 주장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2. 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북한은 핵·고폭탄·화생무기 장거리 투발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76년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스커드 미사일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였고, 이를 개량하여 1988년에 작전배치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2006년과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위성 발사 명분하에 발사하였다. 또한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하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을 시험발사 없이 2007년에 작전배치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였다.

2016년에는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였고, 2017년 7월과 11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여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을 시험발사하였으며,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발사하였다.

4) 표준화 : 여러 종류의 미사일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소형화·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을 의미
다중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 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2017. 1. 1. 이후)

일 자	주요 내용
2017. 2. 12.	평북 구성에서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2017. 3. 6.	평북 동창리에서 SCUD-ER 미사일 발사
2017. 3. 22.	강원 원산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5.	함남 신포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16.	함남 신포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4. 29.	평남 북창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실패)
2017. 5. 14.	평북 구성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5. 21.	평남 북창에서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
2017. 5. 29.	강원 원산에서 SCUD 계열 미사일 발사
2017. 7. 4.	평북 방현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2017. 7. 28.	자강 무평에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2017. 8. 26.	강원 깃대령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 8. 29.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9. 15.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형 미사일 발사
2017. 11. 29.	평남 평성에서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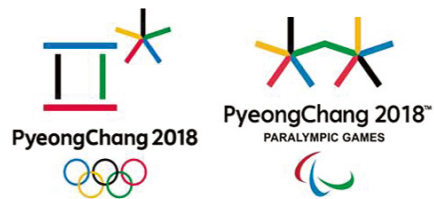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 분	SCUD-B/C	SCUD-ER	노 동	무수단	대포동 2호	북극성/북극성-2형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사거리 (km)	300~500	약 1,000	1,300	3,000 이상	10,000 이상	약 1,3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 중량 (kg)	1,000	500	700	650	500~1,000	650	650	미상	1,000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특별부록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지원

1. 대회 소개

제23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세계 4대 스포츠 제전을 모두 개최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패럴림픽은 49개국 59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는 올림픽 7위(금 5, 은 8, 동 4), 패럴림픽 16위(금 1, 동 2)의 성적을 거두었다. 국방부는 인적·물적자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문화·평화·ICT·환경 올림픽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평창의 'ㅍ'과 'ㅊ'을 형상화한 로고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2. 국방부 지원 준비

국방부의 지원 목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경비작전과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평화적인 올림픽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특히,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계, 대테러, 폭설 시 대비책, 운전, 통역, 의료, 의장대 등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대회 준비를 위한 테스트 이벤트⁵⁾(2016. 11. 25. ~ 2017. 4. 8.) 기간 중 1,053명의 인력을 지원하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사전점검과 '봄' 조성의 일환으로 열린 대회로, 총 28번의 국제대회를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와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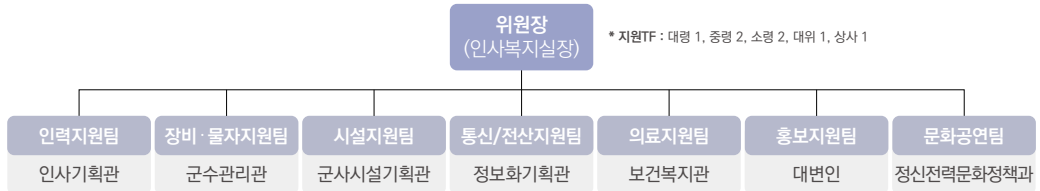
여 준비상태 점검에 참여하였다.

테스트 이벤트 시 군 지원 현황

구 분	계	시상/경기운영	대회 보조	알파인스키 경험자	군악대	의료서비스
지원 인원(명)	1,053	687	163	4	180	19

또한 대회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2016년 2월 22일부터 비상설기구로 운용되던 국방부 지원위원회를 2017년 7월 1일부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실무추진기구로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TF를 구성하였다. 2017년 10월 16일에는 지원TF를 국방부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구성하였다.

국방부 지원위원회 편성



3. 국방부 지원사항

| 업무협약 체결 | 우리 국방부장관은 2017년 12월 27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대회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군의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고 올림픽 홍보·붙임 행사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

| 성화봉송 지원 |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요 이벤트로 성화봉송을 지원하였다. 국무총리 주관 성화 입국 행사 시 전통악대(취타대) 지원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 군함 봉송(구축함 문무대왕함), 신안군도 1,004개 섬의 수리온 헬기 봉송,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최북단 대성동 자유의 마을⁶⁾ 특별 봉송, 비무장지대(DMZ) 일대 자전거 봉송, 임진



자유의 마을 성화봉송

6)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남측 마을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 1953년 7월부터 조성되어 약 50세대가 거주 중

클래식 행사⁷⁾ 등을 지원함으로써 동계올림픽 '봄'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군함 봉송은 주요 일간지 및 방송에 소개되어 군의 적극적인 올림픽 지원 노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최북단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출발한 성화는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자전거 봉송으로 이어졌다.

성화봉송 지원 사항

구 분	해상, 군함 봉송	신안군도 헬기 봉송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최북단 자전거 봉송	임진 클래식 지원
내 용	구축함 1척, 고속정 2정, 헬기 2대, 주자 2명	헬기 3대, 주자 1명	T-50항공기 8대, 주자 1명	환영 인력 1,150명, 컨보이 및 군악대, 주자 5명	24인용 천막 20동, 전시품 등

인력지원 |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을 위해 운전 및 도핑시료 운반, 종합운영센터 및 경기장 통제소 운영, 의장 및 통역지원, 경기지원, 의료, 개·폐회식 공연 참가, 교통관리, 대회 안전 관리 및 시설 자산 보호, 제설지원, 보안요원 및 안전통제, 주요 인사 경호 안전, 경비작전 및 대테러 임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4,199명(연 인원 425,65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군 인력지원 현황

구 분	총 계	경기지원										경비 지원
		계	운 전	통 신	의 장	통 역	경기 지원	의 료	개·폐 회식	제 설	자 산 보호	
올림픽(명)	9,003	5,260	519	205	153	165	2,668	76	254	420	800	3,743
패럴림픽(명)	5,196	2,732	446	34	142	118	998	41	12	406	535	2,464

특히, 경기지원 분야는 혹한의 날씨 속에 장시간 야외 활동이 요구되는 경기장 코스조정·정비와 주요 구역 통제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운전 분야는 대회 선수단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⁸⁾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⁹⁾의 주요 인사 수송, 도핑시료 운반 등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업무를 지원하였다. 의장대는 선수촌 입촌식 국기계양 등 의장행사 임무를 지원하여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대테러 임무 및 경비작전에 대테러특공대와 화생방테러특임대, 폭발물처리반, 신속대응팀 등 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을 투입하여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및 시설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빈틈없는 경계 근무를 수행함으로써

7) 6·25 전쟁 당시 캐나다 군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임진강 근처에서 개최한 아이스하키 경기를 재현하는 행사

8) 18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206개국이 회원국이다. (IOC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9)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현재 174개국이 회원국이다. (IPC :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대회지원

의장대지원

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에 크게 기여하였다.

| 보안지원 | 대회 시작 5일 전 민간보안요원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으로 전체 약 1,200명이 격리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군 인력을 단시간에 긴급 배치하여 경기장 등의 시설보안과 검문·검색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군이 평소부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인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언론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까지 국방부의 신속한 대응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회의 성공적 진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군의 지원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 제설지원 | 동계올림픽 종료 후 패럴림픽 시작 전까지 대관령 지역에 폭설이 내려 정상적인 개회식 진행이 어려웠다. 이 상황에서 군 장병 1,500여 명이 새벽 5시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제설작업으로 올림픽 스타디움 및 주변 도로를 말끔하게 정리함으로써 개회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 장비 및 물자지원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와 긴급 후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팀을 포함한 의무 후송헬기 1대 등 의료장비·물자 28종 294점과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설 장비 5종 55대 등 연 912대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대테러 임무 및 경비작전



대회 민간 보안요원 대체임무



의무후송헬기

장비·물자 지원 현황

구 분	의료 장비·물자(28종 294점)	제설 장비(5종 55대)	군(軍) 비행장
올림픽 / 패럴림픽	응급후송헬기 1대, 이동용 치과 및 진료차량, X-Ray, 초음파검사기 등	다기능제설기 14대, 일반제설기 24대, 로더 3대, 굴착기 6대, 덤프트럭 8대 등	강릉, 원주 비행장 (방송사 촬영헬기)

| 기타 | 조립형 숙소 191동(79.2억)을 지원하여 대회지원 인력들의 숙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였고, 1,868회(민간 매체 35회, 온라인 59회, 국방 매체 1,774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 또한 국군체육부대에 동계종목(8개 종목, 49명)을 한시적으로 편성하고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등 3개 종목에 9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하여 우리나라의 종합 7위 달성에 기여하였다.

| 총평 | “군이 없으면 올림픽 성공은 불가능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조직위원회와 언론은 국방부의 지원을 극찬하였다. 14,199명의 인원과 33종 349대의 장비, 군 비행장, 조립형 숙소 191동 등 약 1,153억 원 이상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평화·안전 올림픽과 경제 올림픽에 기여하였다. 특색 있는 성화봉송과 1,868회의 언론홍보로 올림픽 ‘봄’을 조성하였으며, 타 국가·비인기 종목의 티켓 구매와 약 11,000명에 달하는 장병 및 군 가족 관중지원, 체육부대 참가 등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친군 이미지 구축에도 성공하였다.

특별부록 4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

1. 개요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독일(당시 서독)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과 성과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6월에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6·25 전쟁 의료지원국(5개국 → 6개국)

참전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독일
연인원	623	630	1,124	128	627	117(의사)
참전 형태	이동외과병원	병원선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야전병원	적십자병원

2. 검토 배경

정부 차원에서는 이전부터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예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방문 당시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 단원을 만나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11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그 가족 및 후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독일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부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으나, 의료지원활동이 1953년 7월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6·25 전쟁 물자 및 재정지원국으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독일 방문 당시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 단원 접견(2017년 7월)



“턴 투워드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 및 가족 방한(2017년 11월)

3.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독일은 6·25 전쟁 중이었던 1953년 5월, 참전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야전병원 파견 의사를 유엔본부에 전달하였다. 이후,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연인원 117명에 이르는 독일 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다.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단은 부산 서독적십자병원의 이름으로 30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독일 의료지원단은 41명의 한국 의사에게 진료, 수술 등 임상 수련을 실시하게 하고, 60명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의료진 양성사업을 펼쳤다.



		계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입원환자		21,562	2,305	4,480	4,750	4,857	5,170
외래환자		277,250	32,410	65,550	47,904	67,159	64,227
수술	외과	6,155	605	1,541	1,217	1,341	1,451
	산부인과	3,529	297	665	742	877	948
	소아과	6,551	643	1,287	1,098	1,337	2,186
출산		6,025	239	1,055	1,298	1,503	1,930

4. 추진 경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18년 2월부터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과 관련된 사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독일 의료지원단의 파견 과정과 성과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18년 5월 10일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방부는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이 정전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지원 의사 전달은 전쟁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서독적십자병원이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구호 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했으며, 서독적십자병원이 유엔군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활동했고, 기존 물자 및 재정지원 국 분류 기준도 정전 이후의 활동을 포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포함하기로 하였다.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활동 재조명 학술회의(2018년 5월)

10) Deutsches Rotes Kreuz : DAS DRK Korea Hospital(독일적십자사), 1954. 4., pp. 6-7, 조성훈, 「6.25 전쟁 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 과정과 성과」에서 재인용

5. 후속조치

국방부는 향후 6·25 전쟁 참전국 대상 보훈 행사 등에서 기존 5개 의료지원국과 함께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예우하고, 군사사 등 관련 기록물,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도 독일이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18년 6월 25일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와 2018년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서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예우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역사의 일부로서 기억할 것이다.



6·25 전쟁 제68주년 행사 당시 독일 국기 게양(2018년 6월)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당시 독일 국기 포함(2018년 7월)

주변국 군사력 현황

병력

단위 : 명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총 병력	1,348,400		900,000		2,035,000		247,150	
육 군	476,250		280,000		975,000		150,850	
해 군	323,950		150,000		240,000		45,350	
공 군	322,800		165,000		395,000		46,950	
기 타	해병대	184,400	공수	45,000	로켓군	100,000	통막	4,000
	해안경비	41,000	전략	50,000	전략지원군	175,000		
			지휘/지원	180,000	기타	150,000		
			철도군	29,000				
			특수군	1,000				

육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사 단	10(여단 49)		8(여단 89)		집단군	13	9(여단 5)	
전차(대)	5,884		12,980		6,740		690	
보병전투차량(대)	4,834		13,640		3,800		68	
정찰차(대)	2,545		2,700		650(경전차)		111	
장갑차(대)	18,746		12,100		5,020		795	
견인포(문)	1,339		12,565		6,140		398	
자주포(문)	947		5,856		2,320		172	
다련장포(문)	600		4,082		1,872		99	
박격포(문)	2,507		4,130		2,586		1,105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924	SP	37
지대공미사일(기)	1,183		1,520		344		327	
헬기(대)	3,740		-		973		420	
항공기(대)	187		-		9		7	

해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전술잠수함(척)	54	49	58	19
	전략핵잠수함(척)	14	13	4	-
	항공모함(척)	11	1	1	-
	순양함(척)	23	5	-	-
	구축함(척)	64	15	23	38
	호위함(척)	9	13	59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7	100	206	6
	소해함(척)	11	43	42	26
	상륙함(척)	31	19	53	3
	상륙정(척)	245	28	87	8
	지원함(척)	14	265	186	21
	전투기(대)	736	156	283	-
	헬기(대)	670	193	113	130
해 병 전 력	해병사단(개)	3	여단 3	여단 3	-
	전차(대)	447	250	73	-
	보병전투차량(대)	502	1,000	60	-
	상륙돌격장갑차(대)	1,200	-	152	-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	-
	야포(문)	1,501	365	40	-
	대전차미사일(기)	106	-	-	-
	UAV·ISR(대)	100	-	-	-
	항공기(대)	455	-	-	-
	헬기(대)	437	-	-	-

공군

구 분	미 국	러시아	중 국	일 본
전략폭격기(대)	157	139	-	-
폭격기(대)	-	-	162	-
정찰기(대)	ISR·UAV·CISR 487	87	66	17
지휘기(대)	4	10	5	-
전투기(대)	FTR·FGA·ATK 2,014	865	1,625	332
수송기(대)	631	428	333	57
급유기(대)	301	15	13	6
조기경보기(대)	AWE&C 31	18	10	17
훈련기(대)	1,129	213	974	246
헬기(대)	171	806	53	51
민간예비(대)	517	-	-	-
전자전기(대)	EW 14	3	13	3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 일본 구축함에는 휴가급 2척, 이즈모급 2척, 아타고급 2척 포함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2017년 기준

국 가	GDP (억 달러)	국방비 (억 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 력 (천 명)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대한민국	15,300	356	2.33	625	697
미 국	194,000	6,028	3.11	1,348	1,845
일 본	48,800	460	0.94	247	364
중 국	119,000	1,505	1.26	2,035	108
러시아	14,700	456	3.10	900	321
대 만	5,710	104	1.82	215	444
영 국	25,700	507	1.98	150	783
프랑스	25,700	486	1.89	203	725
독 일	36,500	417	1.14	179	518
이스라엘	3,480	185	5.33	177	2,235
이집트	1,963	27	1.36	439	28
사우디아라비아	6,790	767	11.30	227	2,684
호 주	13,900	250	1.80	58	1,075
터 키	8,410	80	0.95	355	99
말레이시아	3,100	35	1.12	109	111
태 국	4,380	62	1.41	361	90
싱가포르	3,060	102	3.34	73	1,736
캐나다	16,400	170	1.04	63	478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8」(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8년 2월)
 * 병력, 국방비, GDP 등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2017년 11월 수집 자료 기준

연도별 국방비 현황

연 도	국방비(억 원)	GDP 대비 국방비(%)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1980	2조 2,465	5.69	34.7	46.2
1981	2조 6,979	5.47	33.6	20.1
1982	3조 1,207	5.49	33.5	15.7
1983	3조 2,741	4.85	31.4	4.9
1984	3조 3,061	4.25	29.6	1.0
1985	3조 6,892	4.23	29.4	11.6
1986	4조 1,580	4.08	30.1	12.7
1987	4조 7,454	3.95	29.6	14.1
1988	5조 5,202	3.83	30.0	16.3
1989	6조 0,148	3.68	27.3	9.0
1990	6조 6,378	3.36	24.2	10.4
1991	7조 4,764	3.13	23.8	12.6
1992	8조 4,100	3.08	25.1	12.5
1993	9조 2,154	2.97	24.2	9.6
1994	10조 0,753	2.75	23.3	9.3
1995	11조 0,744	2.58	21.3	9.9
1996	12조 2,434	2.54	20.8	10.6
1997	13조 7,865	2.60	20.7	12.6
1998	13조 8,000	2.63	18.3	0.1
1999	13조 7,490	2.38	16.4	△0.4
2000	14조 4,774	2.28	16.3	5.3
2001	15조 3,884	2.24	15.5	6.3
2002	16조 3,640	2.15	14.9	6.3
2003	17조 5,148	2.16	14.8	7.0
2004	18조 9,412	2.16	15.8	8.1
2005	21조 1,026	2.29	15.6	11.4
2006	22조 5,129	2.33	15.3	6.7
2007	24조 4,972	2.35	15.7	8.8
2008	26조 6,490	2.41	14.8	8.8
2009	28조 9,803	2.52	14.2	8.7
2010	29조 5,627	2.34	14.7	2.0
2011	31조 4,031	2.36	15.0	6.2
2012	32조 9,576	2.39	14.8	5.0
2013	34조 4,970	2.41	14.3	4.7
2014	35조 7,056	2.40	14.4	3.5
2015	37조 5,550	2.40	14.3	5.2
2016	38조 8,421	2.37	13.9	3.4
2017	40조 3,347	2.33	14.2	3.8
2018	43조 1,581	2.38	14.3	7.0

* GDP : 한국은행의 국민 계정 2010년 기준으로 재계산, 추경예산 기준

* 2016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잠정치, 2017년 및 2018년은 기획재정부 명목 GDP 예상치 기준

※ 명목 GDP : GDP를 구하는 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적용

남북 군사력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한 국	북 한		
병력 (평시)	육 군	46.4만여 명	110만여 명		
	해 군	7.0만여 명(해병대 2.9만여 명 포함)	6만여 명		
	공 군	6.5만여 명	11만여 명		
	전략군	-	1만여 명		
	계	59.9만여 명	128만여 명		
주요 전력	육군	부 대	군단(급)	13(해병대 포함)	17
			사 단	40(해병대 포함)	81
			여단(독립여단)	31(해병대 포함)	131
		장비	전 차	2,300여 대(해병대 포함)	4,300여 대
			장갑차	2,800여 대(해병대 포함)	2,500여 대
			야 포	5,800여 문(해병대 포함)	8,6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5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발사대 60여 기	발사대 100여 기(전략군)		
	해군	수상 함정	전투함정	100여 척	430여 척
			상륙함정	10여 척	250여 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 척	2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4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 대	810여 대	
		정찰·감시통제기	7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50여 대	34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170여 대	
헬기(육·해·공군)	680여 대	290여 대			
예비병력		310만여 명 (사관 후보생, 전시근로 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 명 (교도대, 노동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북한군 야포문 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하고 산출
 *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남북 기동여단만 비교하였으나,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 분	한 국		북 한		한국/북한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명목 GNI(조 원)	1,646.2	1,730.5	36.4	36.6	45.3배	47.2배
1인당 GNI(만 원)	3,212.4	3,363.6	146.1	146.4	22배	23배
경제성장률(%)	2.9	3.1	3.9	-3.5	-	-
무역총액(억 달러)	9,016.2	10,521.7	65.3	55.5	138.1배	189.6배
총인구(천 명)	51,246	51,446	24,897	25,014	2.1배	2.1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GNP)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구 분	배 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 7. 15.)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6.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 10. 14.)	1차 핵실험 (2006.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 6. 12.)	2차 핵실험 (2009.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 1. 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 3. 7.)	3차 핵실험 (2013.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북한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 3. 2.)	4차 핵실험(2016. 1. 6.)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북한 핵·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 11. 30.)	5차 핵실험 (2016.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핵·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조형물 수출 금지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 6. 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 8. 5.)	탄도미사일 발사 (2017. 7. 4.,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 9. 11.)	6차 핵실험 (2017.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 12. 22.)	화성-15형 발사 (2017. 1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대상 나포, 검색, 억류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식료품,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 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북미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9 공동성명 (2005.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 합의 (2007.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 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 합의 (2007.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 합의 (2012.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 대북 적대이사 없음을 확인 • 북미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북미공동성명 (2018.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 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 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 미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 지역(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 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붙임 1】
-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붙임 2】
-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3】
-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붙임 4】
-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통신·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붙임 5】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부	장	관	인	민	무	력	상
송	영	무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붙임 1】

비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1.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 ① 1단계 :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② 2단계 : 근무인원 철수
- ③ 3단계 : 시설물 완전파괴
- ④ 4단계 : 상호 검증

2.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제반 조치들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한다.

3. 비무장지대 안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적물과 유적, 유물들은 민족공동의 재산으로 원래 상태를 보존하여 관리한다.

4. 비무장지대 안의 1km 거리 내에 근접해 있는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를 시범적으로 철수한다.

① 지역별로 철수할 양측 감시초소들은 다음과 같다.

- 동부 지역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73호와 제1278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123호와 제1135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99호와 제0808호 사이의 쌍방초소

- 중부 지역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52호와 제0660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79호와 제068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717호와 제0724호 사이의 쌍방초소

- 서부 지역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23호와 제0027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4호와 제0043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55호와 제016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12호와 제0216호 사이의 쌍방초소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233호와 제0240호 사이의 쌍방초소

② 양측의 11개 감시초소들에 대한 철수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붙임 2】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1. 첫 단계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

- ① 남·북·유엔사(이하 3자로 표기)는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를 20일 안에 제거한다.
- ②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지뢰 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내에 쌍방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 장비를 전부 철수한다.
- ③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불필요한 감시장비를 철수하고, 협의를 통해 필요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 ④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완료 상태를 2일간 공동으로 검증한다.
- ⑤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무장화 조치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리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경비근무조직 및 초소 설치
 -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수행한다.
 -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한다.
 - 양측 경비근무 인원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한다.
 - 공동경비구역 북측 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를, 남측 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북측 초소를 새로 설치하며, 남과 북이 근접하여 근무한다.
- ② 건물 관리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자기 측 건물들은 각 측이 관리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건물을 보수 또는 새로 건설해야 할 경우, 공동관리기구의 승인하에 진행한다.
- ③ 참관(방문)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참관은 09시부터 17시까지의 사이에 진행한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

비무장지대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1.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과 지뢰 제거

①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설정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은 강원도 철원지역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489호~제0497호 구간에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끝점 좌표는 다음과 같다.

○ 북측 : ㄱ) 북위 38° 17' 35" 동경 127° 05' 22"

 ㄴ) 북위 38° 18' 23" 동경 127° 06' 52"

○ 남측 : ㄱ) 북위 38° 16' 38" 동경 127° 06' 04"

 ㄴ) 북위 38° 17' 26" 동경 127° 07' 33"

- 공동유해발굴지역에 있는 양측의 감시초소와 장애물들은 전부 철수한다.

② 지뢰 제거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자기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한다.

- 쌍방은 지뢰 제거 작업을 10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총 4시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다.

- 쌍방은 시범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가 제거된 구역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식물을 설치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 지뢰 제거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이용은 상호 협조한다.

- 지뢰 제거 과정에서 발굴되는 유해들은 수습하여 공동으로 감식, 협의, 처리한다.

2.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남북도로 개설

①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 내에 남북 간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② 도로는 각각 비무장지대 각 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지뢰 제거 작업을 선행한 후 개설하며,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한다.

③ 굴착기를 비롯하여 도로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 ④ 도로개설 작업 인원과 장비들의 수량과 식별표식, 작업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하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⑤ 도로연결과 관련하여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에 통보한다.
- ⑥ 도로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3. 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운영

- ① 공동유해발굴단의 구성
 - 쌍방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하여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한다.
 - 유해발굴단은 쌍방에서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한다.
 - 쌍방은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여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단의 운영
 -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공동유해발굴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진행한다.
 -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시간은 계절 특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2시까지, 15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한다.

4. 안전보장 및 공동관리

- ① 공동유해발굴 과정에서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 ② 공동유해발굴지역에 무기, 폭발물 등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물자 및 장비의 반입을 불허한다.
- ③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공동유해발굴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⑤ 공동유해발굴이 완료된 후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자기 측 경계선까지의 지역과 도로에 대해서는 각 측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도로 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4】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

1. 평화수역 설정

1) 평화수역 범위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하에 있는 섬들의 지리적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평화수역 출입 질서

- ① 평화수역에는 쌍방의 비무장 선박들만 출입한다. 해군 함정들이 평화수역으로 불가피하게 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하에 출입한다.
- ② 평화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선박 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선박들의 평화수역 출입 및 활동 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③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8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평화수역에서의 행동 질서

- ① 평화수역에서 남측 선박은 평화수역 북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평화수역 남경계선을 넘지 않으며, 평화적 활동으로만 한정한다.
평화수역을 벗어나 상대측 수역에서 상대측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적대행위를 즉시 제지시키고 상대측에 통보한 후 남과 북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평화수역에서 쌍방 선박들은 식별을 위하여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줄에 게양한다.
- ③ 평화수역에서 심리전 행위를 비롯하여 상대측을 자극하는 일체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④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들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4) 평화수역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문제

개별 인원과 선박, 함정, 항공기 등이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로 인한 항로미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화수역에 들어가는 경우 상대측에 연락 수단을 통해 즉시 통보한다.

평화수역 안에서 상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평화수역 활용

쌍방은 서해 평화수역을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 구축 및 공영·공리 원칙에 맞게 해양 측량·공동조사, 민간선박 운항 등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1)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2)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용질서

- ①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어선들은 기관(소속) 명칭, 선장(대표자), 선원명단, 어선명, 출입경로, 조업일자 등이 기록된 출입신청 문건을 출입예정 2일(48시간) 전까지 상대방에 제출한다.
- ② 쌍방 해당기관은 어선의 출항예정 1일(24시간) 전까지 출입 신청서 검토 결과(동의 여부)를 상대방에 통보하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 ③ 쌍방 해당기관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연속조업을 신청한 어선들에 대하여 최대 5일간까지 공동어로구역 내 체류를 허가한다.
- ④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어선들은 상호 승인한 경로를 이용하며 쌍방 어업지도선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
- ⑤ 향후 평화수역 내에 공동어로구역을 확대하여 설정하는 경우, 남북 어선들의 공동어로구역 출입질서와 관련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공동순찰

1) 남북공동순찰대 조직

- ① 쌍방은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한다. 공동순찰정은 250톤급 이하로 한다.
- ② 공동순찰을 실시하는 순찰정은 쌍방이 각각 3척(총 6척)으로 하며 합의에 따라 척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가로 900mm×세로 600mm 크기의 황색 깃발을 선박 마스트 상단 부분에 게양한다.

2) 남북공동순찰대의 임무

- ① 서해 해상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통하여 평화수역에 진입하는 제3국 불법 어선들을 차단하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처리한다.
- ②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남북 어선들과 어업지도선들의 항행질서를 통제한다.
- ③ 기관고장, 조난, 기상악화 등으로 표류하는 쌍방의 선박들을 구조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돌려 보낸다.

3) 남북공동순찰대의 운용

- ① 남북공동순찰대의 순찰정들은 공동어로구역 내로 진입을 금지한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 조난, 인명구조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 후 진입할 수 있다.
- ② 공동순찰은 조업 일정과 제3국 불법조업선박 차단 등과 연계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진행한다.
- ③ 공동순찰은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측 공동순찰대의 순찰계획은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상황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④ 공동순찰은 공동어로구역 외곽선을 따라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상호 합의하여 기동한다.
- ⑤ 남북공동순찰대는 각기 자기 측 상부의 지휘에 따라 행동하며, 쌍방 순찰정 간 교신, 호출부호 등은 2004년 「6.4 합의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⑥ 공동순찰 과정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순찰정을 격리시키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

1. 공동이용수역 설정

- ①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안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공동조사

- ①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2018년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 ② 공동조사단은 쌍방에서 해당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10여 명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 ③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기재, 선박 이용 문제는 상호 협조한다.
- ④ 현장조사 인원들은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며,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⑤ 공동조사 중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상대측 지역에 정박할 수 있으며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3. 공동이용수역에서의 군사적 보장 대책

- ① 공동이용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선박의 형태, 길이 및 톤수, 출입목적, 탑승인원 수, 적재화물)에 대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1일 전에 상호 통보한다.
- ② 공동이용수역 내 쌍방이 합의한 위치에 각 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인원과 선박들에 대한 통행검사를 진행한다.
- ③ 공동이용수역에 항행하는 선박들은 상대측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
- ④ 공동이용수역에서 선박들의 통행시간은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7시부터 19시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⑤ 공동이용수역에서 항행하는 인원 및 선박들은 정찰 및 감시 장비, 폭발물 및 각종 무기, 총탄 등을 일체 휴대하지 않는다.

- ⑥ 공동이용수역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⑦ 쌍방 선박은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항행신호 교환을 제외하고 상대측 선박과 연락 및 통신을 할 수 없다.
- ⑧ 공동이용수역 내에서 선박이나 인원이 표류하거나 기타 요인에 의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서 상호 협력한다.

4. 공동이용수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보장 대책은 쌍방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간다.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16. 12. 1. ~ 2018. 11. 30.)

북 측	일 자	남 측
김정은 위원장, 수도권을 타격 목표로 설정한 포병사격훈련 현지 지도	2016. 12. 1.	
김정은 위원장,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 현지지도	12.11.	
신년사 발표 * "ICBM 시험발사 준비 마감 단계, 핵무력 중심 선제공격 능력 계속 강화, 남북관계 개선 대책을 세워야"	2017. 1. 1.	정부, ICBM 시험발사 준비 마감 단계 주장 강력 규탄 *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1. 20.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 배양을 위한 미사일 경보훈련 실시(1. 20. ~ 1. 22.)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구성)	2. 12.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한반도 및 국제 사회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인민군 총참모부 담화, "한미 연합훈련 비난, 초강경 대응 조치 위협"	3. 1.	한미, KR/FE 연합연습 시작 * KR : 3. 13. ~ 3. 24., FE : 3. 1. ~ 4. 30.
탄도미사일 4발 발사(평북 동창리)	3. 6.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히 규탄"
전략군 대변인 담화, 탄도미사일 발사 정당화 * "조정밀착된 로켓들로 임의 시각, 임의 지점에 적들을 타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	3. 9.	
신형 대출력 미사일 엔진시험 실시(평북 동창리)	3. 19.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KR/FE 연습 관련 * "우리식 선제공격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겠"	3. 26.	합참,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관련 입장 발표 * "북한 궤변에 대응 가치 없음. 도발 시 단호히 응징"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함남 신포)	4. 5.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이 자멸을 앞당길 것"
	4. 6.	북한 전역 사정권 8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 "북한 지휘부 응징 핵심무기, 북한 미사일 도발에 경고"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진행	4. 15.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함남 신포)	4. 16.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경고 *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
인민군 창건 85주년 화력훈련 진행	4. 25.	
	4. 26.	2017 통합 화력격멸 훈련 실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북창비행장)	4.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 "강력한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구성)	5. 14.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일체의 도발중단 촉구"

북 측	일 자	남 측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북창)	5. 21.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
탄도미사일 1발 발사(강원 원산)	5.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일체의 도발 중단 및 조속한 비핵화 촉구"
아태위 담화, 한반도 내 연합·합동 훈련 비난	6. 1.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발사(원산 일대)	6. 8.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북 방현)	7. 4.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와야"
	7. 5.	한미, 북한 도발 대응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실시
조선중앙 TV, 김정은 위원장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격려행 사 보도	7. 13.	
	7. 17.	국방부·통일부, 남북군사회담·적십자회담 동시 제의 * 7. 21. 판문점 통일각에서 적대행위 중단 관련 논의 촉구
	7. 21.	정부, 남북군사회담 개최 촉구
탄도미사일 1발 발사(자강 무평)	7. 28.	
	7.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비핵화 및 평화 구축 호응 촉구"
	8. 5.	유엔 안보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2371호) 채택
정부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2371호) 관련 비난 * "자주권 침해, 정면 도전이라며 전면배격 위협"	8. 7.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계획 비난 및 군사적 대응 위협"	8. 8.	
	8. 21.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실시(8. 21. ~ 8. 31.)
판문점대표부 담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관련 비난	8. 22.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동해상)	8. 26.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비행장)	8.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무모한 도발 대신 조속한 비핵화 길로 나와야"
수소탄 탑재 핵탄두 공개 주장 풍계리 핵실험장 6차 핵실험 감행	9. 3.	정부, 6차 핵실험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 동해상 대북 억제 타격훈련 실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양 순안비행장)	9. 15.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해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
조중통, 김정은 위원장 탄도미사일 발사 명령 및 훈련 참관 공개	9. 16.	
김정은 위원장 명의 성명 발표 *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 온 이상 상응한 사상 최고의 대응조치 단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	9. 21.	

북 측	일 자	남 측
	10. 16.	한미 해군, 동·서해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 실시(10. 16. ~ 10. 20.)
	10. 27.	한미 MCM,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연합방위태세 강화
	11. 12.	한미 해군,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11. 12. ~ 11. 14.) 실시
군인 1명, 판문점 JSA에서 귀순 * 귀순 과정에서 추격하던 북한군의 총격 발생	11. 13.	유엔 총회,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 올림픽·패럴림픽 기간(2018. 2. 9. ~ 3. 8.) 전후 7일간
	11. 22.	유엔사(UNC), JSA 귀순 조사결과 발표, 북한 정전협정 위반 명시
탄도미사일 1발 발사(평남 평성) 국가 핵무력 완성 성명 발표	11. 29.	정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성명 발표 *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 지·해·공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 시행
외무성 성명, 한미 연합공군훈련 관련 비난 * “미국 핵전쟁 구걸, 핵전쟁 발생 시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	12. 2.	
	12. 4.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Vigilant Ace) 실시(12. 4. ~ 12. 8.)
	12. 11.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12. 11. ~ 12. 12.) 실시
신년사 발표 * “대미 핵억제력 보유, 대남 유화 메시지(긴장 완화·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2018. 1. 1.	
	1. 3.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 채널 재가동 * 2016. 2. 12. 중단
	1. 4.	한미 정상,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
	1. 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공동보도문 채택 * 북한 대표단 방남, 군사당국회담 개최, 각 분야 회담 개최
인민군 창건일 70주년 열병식 진행	2. 8.	
고위급 대표단 서해 직항로 방남(2. 9. ~ 2. 11.) * 김영남, 김여정, 최취, 리선권 등	2. 9.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고위급 대표단 경의선 육로 방남(2. 25. ~ 2. 27.) * 김영철, 리선권 등	2. 25.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3. 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3. 5. ~ 3. 6., 서해직항로) *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3. 6.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 발표 * ①남북 정상 회담 개최, ②정상 간 핫라인 설치, ③북 비핵화 의지, ④북미대화 용의, ⑤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핵·재래식 무기 대남 불사용, ⑥남 태권도·예술단 방북
김정은 위원장 1차 방중(3. 25. ~ 3. 28.)	3. 25.	
	4. 1.	한미, KR/FE 연합연습 시작 * KR : 4. 23. ~ 5. 4., FE : 4. 1. ~ 4. 26.

북 측	일 자	남 측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진행 *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및 북미대화 첫 공식 언급	4. 9.	
제13기 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 추대 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 최룡해, "군사대국, 전략국가의 지위" 언급	4. 11.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 * 【핵】 ①핵무기 병기화 ②핵·미사일 실험 중단 ③핵군축 국제적 노력 동참 ④핵 비사용·비확산 ⑤경제·민생 집중 ⑥국제 사회 대화 참여 * 【경제】 ①경제 집중 ②기관 역할 강화 ③결정이행 관리 ④관련 실제적 조치	4. 20.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	4. 23.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4. 27.	2018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채택 * 【남북관계】 민족자주, 분야별 대화, 교류 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 【군사 분야】 적대행위 중지,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5월 장성급회담 * 【비핵·평화】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
"핵실험장 폐쇄 공개, 서울 표준시로 통일" * 4. 27. 정상 회담 간 발언 공개	4. 29.	
대남 확성기 시설 철거 개시	5. 1.	대북 확성기 시설 철거 개시
김정은 위원장, 2차 방중(5. 7. ~ 5. 8.)	5. 7.	
	5. 11.	한미, Max-Thunder 훈련(5. 11. ~ 25.)
외무성, "핵실험장 폐기(5. 23. ~ 5. 25.), 기자단 취재 허용"	5. 12.	
핵실험장 폐기 외신 기자단(미·중·러·영) 방북	5. 22.	
핵실험장 폐기 우리 기자단 방북	5. 23.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통일각)	5. 26.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5. 31.	
	6. 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 군사회담 6월 14일, 체육회담 6월 18일, 적십자회담 6월 22일 개최 합의
북미 정상 회담(싱가포르) 개최 * 「센토사합의」(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	6. 12.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 「6.4 합의」 이행,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등 합의	6. 14.	
김정은 위원장, 3차 방중(6. 19. ~ 6. 20.)	6. 19.	한미,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유예 발표
	6. 22.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연기

북 측	일 자	남 측
	6. 25.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통신실무접촉' 개최(남북출입사무소)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동망' 운용 정상화	7. 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동망' 운용 정상화
	7. 10.	'을지프리트림가디언(UFG)연습 잠정 유예' 발표
	7. 14.	유엔 대북제재위, 군 통신선 복원 관련 제재 예외 인정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7. 15.	
유엔사·북한군 대령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7. 16.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 2016. 2. 11. 단절
미군 유해 55구 송환	7. 27.	
	7. 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 JSA 비무장화, 유해공동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견해 일치
	8. 15.	남북 동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 2010. 11. 28. 산발로 소실
	9. 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서해 직항로)
	9. 7.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자유의 집, 유해송환·발굴 관련)
정권 설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진행	9. 9.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9. 13. ~ 9. 14., 통일각) *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논의	9. 13.	
2018 남북 정상 회담 평양 개최(9. 18. ~ 9. 20., 평양)	9. 18.	
「평양공동선언」 채택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협력 강화 등 합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 수역 설정,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합의	9. 19.	
남북, JSA·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개시	10. 1.	남북, JSA·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개시
	10. 12.	남북군사실무접촉 개최(판문점) *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관련 실무적 문제 협의
	10. 15.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진행 등
	10. 1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1차, 자유의 집)
	10. 19.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Ace) 연기 발표
JSA 지뢰 제거 완료	10. 20.	JSA 지뢰 제거 완료
	10. 22.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2차, 자유의 집)

북 측	일 자	남 측
	10. 23.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10. 24.	공동유해발굴(화살머리) 첫 국군(추정) 유해 발견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10. 25.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남북,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 11월 1일부 적대행위 금지, 11월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수 및 완전파괴 이행 등 합의	10. 26.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10. 26. ~ 10. 27., JSA)
	10. 29.	태극연습(10. 29. ~ 11. 2.)·호국훈련(10. 29. ~ 11. 9.) 개시
	10. 31.	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11. 1.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재개 * 2008년 5월 이후 중단	11. 2.	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재개 * 2008년 5월 이후 중단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개시(11. 5. ~ 12. 9.)	11. 5.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개시(11. 5. ~ 12. 9.)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재개
	11. 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3차, 자유의 집)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완료	11. 10.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완료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개시	11. 11.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개시
	11. 12.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개최(판문점)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11. 30.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구 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19	398	1,336	403	227	250	241	251	8	5	0
침 투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4	1	2	0
국지도발	1,117	19	327	93	60	156	225	227	7	3	0

* 2018년은 11월 30일까지 현황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2016. 12. 1. ~ 2018. 11. 30.)

일 자	주요 내용
2017. 1. 17.	북한 상선, 동해 거진 동방 NLL 침범
6. 9.	북 소형무인기, 강원도 인제 일대 추락
6. 24.	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
비공개	탈북가장, 침투 간첩 검거(비공개)
11. 13.	JSA 지역, 북한군 귀순 시 총격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 현황

구 분	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3,119	398	1,336	403	227	250	241	251	8	5	0
침투	직접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간접침투	214	0	0	0	127	44	16	24	1	2
	월북·납북자 간접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소 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4	1	2
국지도발	지상 도발	502	7	298	51	44	48	42	11	0	1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3	5	1
	공중 도발	51	10	7	15	4	1	3	9	1	1
	전자전· 사이버공격	5	0	0	0	0	0	0	4	1	0
	소 계	1,117	19	327	93	60	156	225	227	7	3

연합·합동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총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지휘관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등
키리졸브/독수리 (KR/FE)연습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 절차 숙달 •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 태	목 적	내 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협을 대비한 작전수행 절차 연습
호국훈련	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작전 수행 및 전력 운용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지도발 및 전면전 관련 작계시행훈련 •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작전수행 절차 적용 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평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국지도발 대비 작전 • 전시전환 • 전면전 대비 작전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39개국

2018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터키	1999. 11.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파키스탄	2006. 5.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콰도르	2010. 1.	우즈베키스탄	2010. 2.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프랑스	2016. 8.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국제기술협력 협정 (12개국)	품질보증 협정 (23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 (4개국)
국 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7년 10월 28일, 서울

1.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과 결심수립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이 국제 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재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6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EDSCG 관련 새로운 운영체제 설립 방안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EDSCG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DSCG 메커니즘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북 억제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영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사드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 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사드, 패트리엇 포함)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지는 양국 정상 합의의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양국 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 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 이 지난 60여 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미 장관은 한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해군협력을 지속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해군 간 연합 항모강습 단 훈련, 탄도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 실시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작전기지 내로 이전한 이후 한미 해군 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한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 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S 격퇴 노력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한미 화생방대응훈련(Adaptive Shield) 연습이 다양한 화생방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TTX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간 공조를 확대하고, 우주임무를 보장하도록 우주역량을 증진하며,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위협과 미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국방당국 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례적인 양자회의와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하여 로봇과 자율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련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동맹의 국방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2.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8군사령부 등 평택기지로의 부대이전이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의 잔여부대들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나머지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라 기지 반환

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4.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ICBM과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양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미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3국 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 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은 지난해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기 DTSCG를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송영무 장관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지난 10월 26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주한미군사 미2사단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과 제4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성명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C.

1.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조셉 던포드 대장이 제43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968년 5월 28일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향후 발생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4.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양측은 「역

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의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 합의에 기초하여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 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평양 남북 정상 회담 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상호 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역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창설 4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 양국 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본 이전이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 방안들을 이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기여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능력확보, 전략문서 발전 등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5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수정안에도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3년에 작성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의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 능력 향상 및 관련 작전개념과 군사계획,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 및 우주 분야 동맹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 1호의 재진입 시 양국이 우주상황정보 공유를 통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험을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

유하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2017년 제49차 SCM 이후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로봇 공학,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의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의 심화·확대는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연구개발, 방위산업 발전, 안보지원, 군수, 기술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연합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동맹의 비교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양 장관은 정례협의체들을 통해 관련 분야의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력활동의 기획, 조정 및 실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 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완화를 위한 동맹의 연합 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증진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난해 미8군사령부에 이어 올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2사단 본부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주목하였다. 양측은 험프리스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험프리스 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양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지이전 및 기지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 및 기지반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훈련장 인근 거주 주민 배려조치 등 효과적인 민군관계 관리를 위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8.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SMA)」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증진,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과 제43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끝.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

2018년 10월 26일

2018년 10월 31일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이다.

SCM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서 양국 국방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 1971년 제4차 회의 시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되었고, 명칭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로 변경되어 올해 50회를 맞이하였다.

SCM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미 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하게 통합된 연합방위체계로서 올해로 창설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MCM은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최상위 군사협의기구로 지난 10월 25일 제4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SCM은 한미 양국의 미래 동맹발전을 위한 핵심 협의창구로서 강력한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양국은 그동안 SCM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속에서도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안보를 위한 상호 협력을 촉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SCM은 「한미동맹 비전(2006)」, 「한미 국방협력지침(2010)」, 그리고 「맞춤형 억제전략(2013)」 등의 합의문 채택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을 공유하는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SCM은 그동안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과 동맹의 공동 방위역량 구축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소화기 군수공장 건립 지원과 대외군사판매 차관 제공 등은 한국군 현대화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방위산업 협력확대 등을 통해 동맹의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은 SCM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 향상과 동맹의 포괄적인 대응능력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SCM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주요 정책결정 및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하였다.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제반 조건을 구비하는 데 동맹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SCM은 한미 양국 군의 협력 수준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CM은 대테러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대해적작전,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대응과 양국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사이버·우주 등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 분야에서 양자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SCM은 동맹의 포괄적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 기술보호, 방위산업 등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SCM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해온 대체불가능한 동맹 협의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항상 공동의 안보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왔으며, SCM이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SCM은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SCM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목표에 맞도록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목적)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전문)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 내역 : 약 3.4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 목	2015년
직접 지원	국방 예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3,490), 군사건설(4,148), 군수지원(1,682)	9,320
		기 타	미 통신선·연합 C4체계 사용	154
			카투사 병력지원(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98
			기지 주변 정비 비용(Magnum 탄약고 정비)	82
			부동산 지원	82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평택 지원)		14,542
		공무집행 피해배상		1
합 계				24,279
간접 지원	기획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7,105
		KATUSA 기획 비용		936
		훈련장 사용지원		236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135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1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86
합 계				9,589
총 계				33,868

한시적 비용 : 약 2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항 목	2015년
직접 지원	국방예산	기지 이전 특별협정(YRP·LPP)	7,169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기지 토양오염 정화)	84
	국방예산 외 지원	기지 이전사업 관련 비용(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	13,442
총 계			20,695

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미 통신선·연합 C4체계 사용비	미 통신선 사용료(전체 사용액의 35%) 및 연합 C4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상호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기본급, 피복비 등 운영 지원비)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지원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Magnum 탄약고 정비	주한미군 Magnum 탄약고 주변 안전구역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사업 추진 비용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5조, SOFA 양해사항 2조·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8조 및 동법 시행령 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조
주변 도로사업, 평택지원	평택기지 주변 도로 정비사업 및 평택 지역 지원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2조·3조·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무집행 피해배상	주한미군의 군사훈련·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비 지원	SOFA 23조
무상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여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 산출방식 : 공시지가 평균금액에 법령상 요율을 적용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
카투사 기회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이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 산출방식 : (계급별 미군 연 기본급+외국어 능력 수당)-계급별 한국군 연 급여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 간 구두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이용 지원비용 * 산출방식 : 면적×공시지가×사용일수/365×임대요율	SOFA 2조·5조, 우리 군 훈련장·사격장의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감면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 산출방식 : 1999~2011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한미군 병력수를 고려하여 추정	SOFA 6조, 10조, 14조, 16조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지자체가 오염정화를 실시하고,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른 토양오염 정화 비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2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된 공여구역 또는 주변지역 경제 진흥을 위해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¹¹⁾

2018년 11월 기준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상대국	체결 연월
독일	1994. 5.	스웨덴	2009. 7.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우간다	2016. 5.
캐나다	1995. 5.	요르단 (조약)	2009. 10.	인도네시아 (조약)	2013. 10.	에콰도르	2016. 7.
이스라엘	1995. 8.	싱가포르	2009. 12.	필리핀	2013. 10.	보츠와나	2017. 1.
러시아	1996. 11.	리투아니아	2010. 2.	폴란드 (조약)	2013. 10.	피지	2017. 1.
터키	1999. 11.	인도	2010. 9.	아제르바이잔	2013. 12.	이집트	2017. 3.
몽골	1999. 12.	카자흐스탄	2010. 9.	뉴질랜드	2014. 5.	앙골라	2017. 3.
쿠웨이트	2004. 11.	베트남	2010. 10.	카타르 (조약)	2014. 11.	미얀마	2017. 9.
브라질 (조약)	2006. 3.	루마니아	2010. 10.	체코	2015. 2.	캄보디아	2018. 9.
우크라이나	2006. 9.	가봉	2011. 10.	콜롬비아	2015. 3.	브루나이	2018. 9.
UAE (조약)	2006. 11.	페루	2011. 10.	불가리아	2015. 5.	이탈리아 (조약)	2018. 10.
스페인	2006. 12.	호주	2011. 12.	투르크 메니스탄	2015. 5.		
우즈베키스탄	2008. 6.	태국	2012. 3.	파라과이	2016. 1.		
일본	2009. 4.	중국	2012. 7.	에티오피아	2016. 5.		

11) 의미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 발생 등)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18년 12월 기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 10.)	한국 (1991. 9.) 북한 (199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 1.)	한국 (1991. 9.) 북한 (199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 2.)	한국 (1996. 6.) 북한 (199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 3.)	한국 (1975. 4.) 북한 (1985. 12.) * 2003. 1. 탈퇴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0개국 (1957. 7.)	한국 (1957. 8.) 북한 (1974. 9.) * 1994. 6.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4개국 (미발효)	한국 (199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핵무기금지조약 (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69개국 (미발효)	남·북한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 등을 통한 획득·보유·축적 금지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 금지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9개국 (2002. 11.)	한국 (200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 지원 금지
	유엔 외기권 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87개국 (1959. 12.)	한국 (199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2개국 (1975. 3.)	한국 (1987. 6.) 북한 (198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 4.)	한국 (199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을 전면 금지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완전 폐기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 4.)	한국 (199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재래식 무기	무기거래조약 (ATT : Arms Trade Treaty)	99개국 (2014. 12.)	한국 (201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무기의 불법 거래 및 전역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재래식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5개국 (1983. 12.)	한국 제1의정서 (2001. 5.) (개정) 제2의정서 (2001. 5.) 제5의정서 (200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 탐지 불가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 12.)	한국 (199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 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 3.)	남·북한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 금지 대인지뢰 폐기 (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구 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 현황	주요 내용
재래식 무기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05개국 (2010. 8.)	남·북한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다 자 수 출 통 제 체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 8.)	한국 (199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T 미가입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 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 1.)	한국 (199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 6.)	한국 (1996.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 4.)	한국 (200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 7.)	한국 (199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5개국 (2003. 6.)	한국 (200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2개국 1,095명

2018년 11월 30일 기준

구 분		현재 인원 (명)	지 역	최초 파병 시기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31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80	보르	2013. 3.		
	개인 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7	주바	2011. 7.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2009. 6.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서부 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운	2009. 7.		
	소 계		635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청해부대	302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2009. 3.	6개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4	마나마	2008. 1.
지부티 연합합동 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2	지부티	2003. 12.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 3.	
소 계		311					
국방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49	알 아인	2011. 1.	8개월	
	소 계		149				
총 계		1,095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연 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1970년	900	800	700	600
1971년	1,030	920	800	690
1972년	1,200	1,050	900	800
1973년	동 결			
1974년	1,560	1,370	1,170	1,040
1975년	동 결			
1976년	2,260	1,990	1,700	1,51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1978년	3,460	3,050	2,600	2,320
1979년	3,800	3,300	2,900	2,6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1981년	동 결			
1982년	4,200	3,700	3,300	3,0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1984년	동 결			
1985년	4,600	4,000	3,600	3,3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1988년	7,500	6,500	6,000	5,5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연 도	병 장	상 병	일 병	이 병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 결			
1999년	동 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2009년	동 결			
2010년	동 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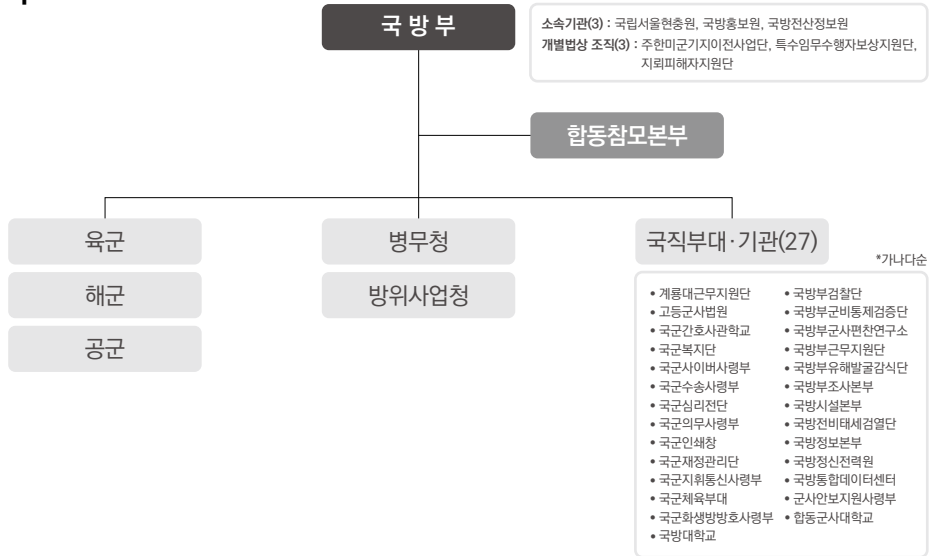
* 출처 : - 1983~2018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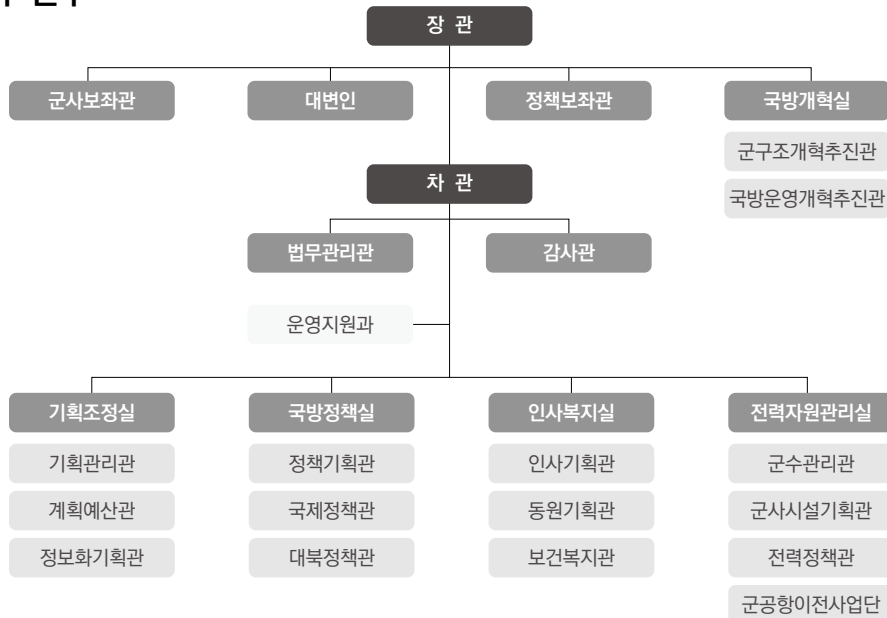
연 도	복무 기간(개월)			조정 사유
	육군·해병	해 군	공 군	
1952년 이전	전역 제도 없음			6·25 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 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 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18	26→20	27→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18	23→20	24→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국방개혁 2.0」)

국방기구도

국방 조직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 행사 실시 참배 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국립서울현충원 시설·요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 교육 국방뉴스, 시사 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국방 관련 행사 사진 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국방부 및 소속기관의 통신망, 전산장비 등의 획득·운영 신 정보기술의 연구, 습득, 전파 및 관리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지원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장애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조사 그 밖에 지뢰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전쟁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기타 학예활동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역 예정 군인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전역 예정 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전역 예정 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전역 예정 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법령 정비 현황(2016. 12. 1. ~ 2018. 11. 30.)

합 계	법 률	대통령령	부 령
113	24	46	43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4416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4418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및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419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4420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특수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421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 등의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422호 (2016.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수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4609호 (2017.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의 신분을 가지는 준사관후보생을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 가산복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용어를 변경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4610호 (2017.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4612호 (2017. 3.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045호 (2017. 11. 28.)	•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제·개정법률을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제15046호 (2017. 11. 28.)	•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047호 (2017. 11. 28.)	• 군 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제15048호 (2017. 11. 28.)	•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5049호 (2017. 11. 28.)	•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5050호 (2017. 11. 28.)	•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는 한편,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5051호 (2017. 11. 28.)	• 재정 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정원을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방위사업청장 추천 민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각각 확대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제15052호 (2017. 11. 28.)	•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시 벌칙 조항 강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5165호 (2017. 12. 12.)	• 「군사법원법」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166호 (2017. 12. 12.)	•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원 비밀의 누설죄와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5345호 (2018. 1. 16.)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인도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5346호 (2018. 1. 16.)	•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5434호 (2018. 3. 13.)	•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15435호 (2018. 3. 13.)	• 「국군조직법」 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각종 사망사고 중 그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에 폭넓게 기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5497호 (2018. 3. 20.)	•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655호 (2016. 12.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 통제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완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708호 (2016. 12. 30.)	• 지뢰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 및 위로금의 조정·지급 기준 마련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 제27813호 (2017. 1. 31.)	• 군 장학생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학생의 휴학 사유 및 기간을 확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제27957호 (2017. 3. 27.)	•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017호 (2017. 5. 8.)	• 전역 예정 군인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성실한 군 복무 유도를 위하여, 전직 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에서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 전체로 확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16호 (2017. 6. 20.)	•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전공사상에 관하여 재심사를 한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시 한 차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17호 (2017. 6. 20.)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8149호 (2017. 6. 27.)	•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정부출연기관이 군용항공기의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28174호 (2017.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3명의 영관급 이상 군판사로 군사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군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201호 (2017. 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 중인 군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도 연가 일수 중 위탁 교육 또는 전직 지원교육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기간으로 정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266호 (2017.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함
군 표창 규정	일부개정 제28297호 (2017.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창권자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 또는 부서의 장까지 확대하여 일부 부서의 장도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의 종류에서 정근상을 제외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 제28298호 (2017.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 이란 및 요르단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정원을 72명에서 75명으로 3명(영관급 장교 3명) 증원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39호 (2017. 9.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341호 (2017.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군인 외에 남성 군인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있는 군인에게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군인복제령	일부개정 제28346호 (2017.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예장의 착용빈도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예복과 예모의 제식을 정복과 정모의 제식으로 통합하고 정복에 견장을 부착하여 예복으로 활용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 제28423호 (2017.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관련 업무를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규정의 제목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변경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4호 (2017.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5호 (2017.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6호 (2017.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의 정책업무를 이관하여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정보작전지원참모부를 정보작전참모부로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28427호 (2017. 11. 14.)	• 해병대사령부의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신설하고, 의무실장은 보건의로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함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 제28428호 (2017. 11. 14.)	•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이를 합동군사대학교 임무에서 삭제하고, 합동전투발전부를 폐지하고 합동참모대학에 통합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 제28429호 (2017. 11. 14.)	• 「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육군 기본병과 중 경리과가 재정과로, 부관과가 인사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 제28430호 (2017. 11. 14.)	• 일부 참모부서의 명칭을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서와 부대의 설치에 관하여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육군공병학교령	일부개정 제28431호 (2017. 11. 14.)	• 육군공병학교의 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참모부서의 명칭을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부서와 부대의 설치에 관하여 융통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475호 (2017. 12. 19.)	•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 제28476호 (2017. 12. 19.)	•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군무원 구분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581호 (2018. 1. 16.)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장성급 장교를 위원으로 추가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 제28598호 (2018. 1. 23.)	•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해군 장병 또는 공군 장병 외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군수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직원을 포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652호 (2018. 2. 13.)	•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위하여 공상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순직자 분류기준을 개선하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확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684호 (2018. 2. 2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공무상요양비 심사 및 지급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고, 미지급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 계산 방식을 정함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 제28704호 (2018. 3. 20.)	• 육군 동원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동원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군 보건의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8882호 (2018. 5. 15.)	• 군 장례식장에는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8904호 (2018. 5. 28.)	• 전력소요사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명확히 함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035호 (2018. 7. 10.)	•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유족에게 당시 지급된 보상금과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통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 제29047호 (2018. 7. 17.)	•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의 직급을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
국난극복기장령	폐지 제29091호 (2018.8.14.)	•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등에게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나, 수여 대상자에 대한 수여행위가 과거에 종료되어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폐지함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 제29113호 (2018. 8. 21.)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군 조직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함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 제29114호 (2018. 8. 21.)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 운영 및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 제29119호 (2018. 8. 28.)	•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던 군사교육요원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143호 (2018. 9. 11.)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29144호 (2018. 9. 11.)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위수령	폐지 제29164호 (2018. 9. 18.)	• 위수령은 육군 군대가 주둔하는 지구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병력 출동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함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 제29225호 (2018. 10. 16.)	• 해외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인상하고, 기능직 군무원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 내용을 반영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257호 (2018. 10. 26.)	•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체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260호 (2018. 10. 30.)	•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군인이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군인의 복무 제도를 개선함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1호 (2016. 12. 14.)	• 연평해전 참전 등 전투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군 경력 사항에 포함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12호 (2016. 12. 14.)	•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각 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의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던 것을 균등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5호 (2016. 12. 27.)	• 국방부 본부 인력 5명 및 국방홍보원 인력 1명 감축 반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6호 (2017. 1. 31.)	• 전력자원관리실장의 보좌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서 전력자원관리실에 두는 보조기관인 군공항이전사업단으로 개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19호 (2017. 2. 28.)	• 국방민원상담센터를 총책인건비제팀으로 신설하며, 전력관리실장 밑에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를 신설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0호 (2017. 3. 27.)	•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이 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제921호 (2017. 3. 27.)	• 검찰관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2호 (2017. 4. 26.)	• 유족지원금 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군인 등의 특수근무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23호 (2017. 4. 27.)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잠수의무요원을 추가하고,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군무원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1인당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에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4호 (2017. 5. 2.)	• 국방 사이버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정책담당관에서 사이버대응기술팀을 분리·신설
방위사업에 관한 척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25호 (2017. 5. 4.)	• 정부와 합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조선업체가 정부에 합정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에 명시된 보증금액만큼 조선업체의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유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6호 (2017. 6. 8.)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7호 (2017. 6. 19.)	• 재외공관에 두는 무관의 임무로서 방위산업물자의 수입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는 등 주재무관의 임무를 국방외교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28호 (2017. 6. 21.)	•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 등을 할 때 관계 공무원에게 10억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경우 5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0호 (2017. 7. 24.)	•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존속기한을 2017년 7월 25일에서 2018년 7월 25일로 연장하는 내용 반영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괄개정 제931호 (2017. 8. 1.)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33호 (2017. 8. 16.)	• 예비군부대 지휘관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에 육군 군수과를 추가하고,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을 제외한 예비전력관리기구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를 각 군의 기본병과에 속하는 모든 병과로 확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5호 (2017. 9. 22.)	• 방위산업체 등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의 서식을 정함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38호 (2017. 10. 18.)	• 군인의 인사기록을 전자적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작성·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준사관 모집 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하여 담당할 기술 분야에 2년 이상 총사한 경력을 요구하던 제한 사항을 삭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39호 (2017. 10. 31.)	• 방위산업 기술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가 외부망과 방산 업무망 분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분리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간접경비에 계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40호 (2017. 11. 16.)	• 예비군 업무 공백 방지 및 우수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하여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미리 퇴직하여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1호 (2017. 11. 21.)	•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창조기획담당관 및 민청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총괄혁신담당관 및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하고, 법무관리관 밑에 두는 보좌 기관과 국방정책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에 두는 보조 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42호 (2017. 11. 28.)	•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방법을 개선하고, 선발대상자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44호 (2018. 1. 2.)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추천받도록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6호 (2018. 1. 2.)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국방교육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정책실장이 분장하던 국방교육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인사복지실 소관으로 변경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 제947호 (2018. 1. 22.)	• 군 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48호 (2018. 1. 22.)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시기를 변경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950호 (2018. 2. 1.)	•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하며,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을 개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1호 (2018. 2. 7.)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설치한 환경팀을 국방환경협력팀으로 개편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7일까지에서 2021년 2월 7일까지로 3년 연장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2호 (2018. 2. 19.)	•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상군인이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공무상 요양 기간연장 승인 신청서를 부대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4호 (2018. 2. 23.)	• 주요 전투장비의 정비 기간 동안 그 전투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총장비의 요건 중 전시에 동원할 수 없는 장비일 것을 삭제하여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5호 (2018. 2. 26.)	• 부사관의 군사 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직무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특수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에게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자격의 종목에 폭발물처리사와 국방사업관리사를 신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56호 (2018. 2. 27.)	• 군무원의 직종체계를 통합·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용 응시 구비서류 중에서 여권용 사진을 삭제함
군 표창 규칙	일부개정 제957호 (2018. 3. 8.)	•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부대·부서의 장의 범위를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근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공적상 표창 비율을 정한 내용을 삭제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0호 (2018. 3. 30.)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에서 총정원의 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1호 (2018. 5. 25.)	•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 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를 변경함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964호 (2018. 6. 25.)	• 계약상대자가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과 관계없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중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업체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5호 (2018. 7. 4.)	• 재외공관에 두는 주재무관 중 무관보의 계급 기준을 통일하고, 수석무관이 다른 주재무관의 임무 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것을 명확히 함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6호 (2018. 7. 25.)	•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여 국방개혁을 총괄하는 기구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존속기간을 연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967호 (2018. 8. 24.)	• 현역에서 7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부사관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의 구비서류 중 정보화자격증 사본을 삭제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을 신설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 내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968호 (2018.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 기준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하고 명확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969호 (2018. 9.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청렴의무 위반,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세분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 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971호 (2018.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 이하 잠수함정 승무원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공군·해군 고정익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수당 및 유급지원병의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전투기 조종사가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출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항공수당 가산금을 신설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급 김남근	1급 김부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 규 백(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3선(18·19·20대) 성균관대 및 동 무역대학원 수료,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민주당 조직위원장, 국방위 간사,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사무총장, 국토교통위 위원	본관 421호 784-1364 788-2721 FAX)788-3685
------------------------	-----------------------------------------------------------------------------------	---------------------------------------------------------------------------------------------------------------------------------------------------	-------------------------------------------------

입법조사관
3급 이옥순
4급 제민
4급 김애신
4급 김현식
5급 이구형
5급 주경덕

2018년 12월 3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 홍 철(61년생, 경남 김해시갑) 재선(19·20대)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석사, 육군 법무관, 고등군사법원장, (예)육군준장, (전)변호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현)예결위 위원	회관 554호 O)784-6491 788-2301 F)788-0195
		김 병 기(61년생, 서울 동작구갑) 초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의 위원 예결위 정보위 국방위 위원	회관 721호 O)784-1323 788-2004 F)788-0101
		김 진 표(47년생, 경기 수원시부) 4선(17·18·19·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국방위 위원	회관 744호 O)784-3808 788-2008 F)788-0109
		도 환(55년생, 충북 청주시흥덕구) 재선(19·20대) 충북대 국어교육과, 충북대 국문학과 박사 시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교문위 간사, 국회교육포럼 공동대표,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모임 공동대표	회관 333호 O)784-2538 788-2207 F)788-0185
		최 재 성(65년생, 서울 송파구을) 4선(17·18·19·20대) 동국대, 민주당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총무본부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제 영일 총괄 선거대책위원회 총합상황본부 1실장, 예결특위 정보위 간사	회관 836호 O)784-1308 788-2574 F)788-0162
		홍 영 표(57년생, 인천 부평구을) 3선(18·19·20대) 동국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원내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정보위 위원, 국회운영위원장	본관 202호 O)784-3143 788-3460 F)788-3446
바른미래당		하 태 경(68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재선(19·20대) 서울대 물리학과, 중국 지린대학교 대학원(세계경제 박사), (사)알리안북한방송 대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환노위-예결특위 위원, 헌법개정특위 간사	회관 939호 O)784-2492 788-2917 F)788-0382
		김 중 로(60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07), 서울대 사범대 중,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보병 제70사단장,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년미래특위 위원	회관 922호 O)784-9161 788-2465 F)788-0238

자유한국당		백 수 주(61년생, 경북 구미시갑) 초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부차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예결위·4차 산업혁명특위-미래일자리특위 위원	회관 830호 O)784-6731 788-2304 F)788-0199
		김 성 태(58년생, 서울 김서구을) 3선(18·19·20대)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노총 사무총장, 국회 예결·국토·환노위 간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최순실 국정특위위원장, 국회 운영위원장, (현)국회 비정규직차별 해소포럼 대표의원	회관 910호 O)784-3291 788-2309 F)788-0137
		이 중 명(59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군사관학교(39기), 육군장교(대령 전역), (현)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현)여가위 위원	회관 337호 O)784-2175 788-2252 F)788-0383
		이 주 영(51년생,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5선(16·17·18·19·20대) 서울법대, 영국 런던대, 서울고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경남도 부지사, 국회예결위원장, 국회사법개혁위원장, 정책위의장(최고위원), 18대대선거기획단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헌법특위위원장	본관 307호 O)784-5282 788-2852 F)788-0323
		정 중 석(57년생, 대구 동구갑) 초선 서울대 법대, 연세대 법학박사(헌법학), 제24회 사회사업학 석, 행정자치부 장관, 서울대 법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헌법학회장, (현)예결특위 위원	회관 1016호 O)784-6514 788-2893 F)788-0354
		황 영 철(65년생,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3선(18·19·20대) 서울대 정치학과, 홍천군의원, 강원도의원, 새누리당 대변인·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국회 안전행정부·헌법개정특위 간사, 국회광천동계물림피막제정기대회지원특위 위원장,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회관 618호 O)784-5705 788-2921 F)788-0397
비교섭		김 중 대(66년생, 비례대표) 초선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방정책관실 행정관, 월간 (D&D포커스), <디펜스21> 편집장, 정의당 원내대변인·평화로운반도 본부장, (현)예결위 위원	회관 549호 O)784-7611 788-2381 F)788-0212
		서 정 원(43년생, 경기 화성시갑) 8선(11·13·14·15·16·18·19·20대) 중앙대 정치외교, 총학생회장, 조선일보 기자, 통일민주당 대변인, 정무장관, 신한국당 원내총무, 국회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대표최고위원, (현)한일외교협력위원회	회관 601호 O)784-9516 788-2078 F)788-0100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16. 12. 12. ~ 2018. 11. 30.)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47회 임시국회 (2016. 12. 12. ~ 12. 31.)	2016.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 상황 평가, 군 해킹사고 조사 결과 및 후속대책)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제349회 임시국회 (2017. 2. 1. ~ 3. 2.)	2017. 2.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6년도 국정감사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2017.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제350회 임시국회 (2017. 3. 3. ~ 4. 1.)	2017. 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제350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제351회 임시국회 (2017. 5. 29. ~ 6. 27.)	2017.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등 2건
제351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6.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회
제352회 임시국회 (2017. 7. 4. ~ 7. 22.)	2017.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회계연도 결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7.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제352회 임시국회 폐회 중	2017.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관련)
	2017.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2017. 8.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광 포격 위협 문제, 사드의 전자파 측정 결과와 발사대 추가 배치 문제, 공관병 문제)
제353회 임시국회 (2017. 8. 18. ~ 8. 31.)	2017.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회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정경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회계연도 결산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2017.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UFG 훈련 경과 등)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54회 정기회 (2017. 9. 1. ~ 12. 9.)	2017. 9. 4.	• 긴급 현안 보고(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2017. 9. 18.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0건 • 사드 배치 유보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 국방부 현안 보고(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2017. 9. 20.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
	2017. 10. 12. ~10. 31.	• 국정감사(국방부 등 62개 기관)
	2017. 11. 7.	•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7. 11. 14.	• 2018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등 2건
	2017. 12. 1.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계속) •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현안 보고(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JSA 귀순 관련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2017. 12. 2.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제355회 임시국회 (2017. 12. 11. ~ 12. 29.)	2017. 12. 1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제356회 임시국회 (2018. 1. 30. ~ 2. 28.)	2018. 2. 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
	2018. 2. 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2018. 2. 7.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2018. 2. 20.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7건 • 업무 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8. 2. 28.	• 긴급 현안 보고(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제362회 임시국회 (2018. 7. 13. ~ 7. 26.)	2018. 7. 24.	• 업무 보고 및 현안 보고(국방부 소관)
	2018. 7. 25.	• 업무 보고 및 현안 보고(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63회 임시국회 (2018. 8. 16. ~ 8. 31.)	2018. 8. 21.	• 2017회계연도 결산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년 국정감사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2018. 8. 24.	• 2017회계연도 결산(계속)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 • 육·해·공·해병대 축구단 부활에 관한 청원 • 현안보고(「국방개혁 2.0」, 국군기무사 개혁,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사고 경과 등 관련)

회 기	회의 일자	주요 내용
제364회 정기회 (2018. 9. 1. ~ 12. 9.)	2018. 9. 17.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회
	2018. 9. 19.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정경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10. 5.	•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회
	2018. 10. 10.	• 합동참모의장후보자(박한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 10. 10. ~ 10. 29.	• 국정감사(국방부 등 66개 기관)
	2018. 11. 8.	•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 11. 14.	• 2019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2018. 11. 26.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 군 소음 관련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8. 11. 30.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

찾아보기

ㄱ

감염병	8, 9, 10, 31, 32, 180
개인전투체계	91, 112, 118
거부적 억제	53
고농축 우라늄	25
공동육아나눔터	175
공수/특수작전훈련	77
과학화 경계시스템	47
과학화 전투훈련	72, 74
국가군사전략	11
국가비전	30, 34
국가안보목표	30, 34
국가안보전략	11, 12, 30, 31, 34, 35, 36, 97
국군외상센터	179
국군의학연구소	120
국군포로	215, 217, 218, 302
국무위원회	18, 21
국방개혁	16, 34, 35, 37, 38, 39, 88, 89, 90, 113, 175, 274, 277, 278, 304, 307
국방개혁 2.0	32, 35, 37, 38, 59, 70, 71, 73, 88, 89, 93, 114, 115, 116, 132, 134, 174, 178, 187, 189, 190, 194, 277, 293, 308
국방경영기획 평가단	119
국방과학연구소	96, 100, 141
국방동원정보체계	105
국방목표	33, 34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6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5
국방비	13, 15, 35, 92, 113, 114, 115, 117, 119, 242, 243
국방비전	33, 34, 35
국방 연구개발	99
국방예산	14, 94, 109, 113, 115, 120, 134, 189, 285
국방우주력	56, 57
국방우주협력	57
국방인권모니터단	183, 189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119
국방전직교육원	295
국방정보화표준	109
국방정신전력원	73, 81, 294

국방정책	12, 33, 34, 35, 36, 73, 98, 113, 136, 139, 143, 187, 188, 189, 190, 191
국방중기계획	38, 95, 115, 116, 117, 176
국방헬프콜센터	167, 168
국제 군수협력	50, 111, 112
국제연합	15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158
국제평화유지활동	15, 34, 112, 137, 145, 151, 158, 159, 160
국제평화활동센터	159, 160, 161
국제해양방위산업전	103
국지도발 대비훈련	76, 7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93, 296, 30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307
군사시설 보호구역	197, 198, 298
군사전략	17, 21, 33, 36, 87, 91, 97, 295
군수 혁신	119
군인복지 기본계획	190
군인연금	201, 204
군인연금법	170, 179, 204, 207, 297, 300, 301, 304
군정찰위성	47, 56, 91, 93, 118
군 책임운영기관	120
근접항공지원훈련	45, 77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10
기뢰작전	44

ㄴ

남북공동유해발굴	249, 254
남북 군 통신선	216, 256, 259
남북기본합의서	47, 214

ㄷ

다련장	43, 44, 46, 47, 92, 93, 240, 244
다자간 연합훈련	75, 76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	76
대량살상무기	18, 21, 33, 51, 55, 75, 147, 148, 149, 150, 214, 246, 271, 273, 279, 289, 290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150
대륙간탄도미사일	13, 15, 16, 17, 19, 20, 210, 229
대잠작전	44, 9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조대	65, 157
대함작전	44
독립국가연합	139
독수리훈련	50, 79, 126
동명부대	141, 151, 152, 153, 159, 291
동북아협력대화	147
동원훈련	105, 106, 115
드론	44, 116, 118, 197
드론봇	43, 44, 84, 91, 116

□

마일즈 장비	73, 74, 115, 117
메르스	9, 10, 64, 180
무기거래조약	149, 289
물류 혁신	110
미래사령부	14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48, 149, 290
민간개방 기본계획	120, 121
민간 조리원	116, 118, 172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35, 67, 79, 269
민·군 기술협력사업	111

ㅂ

방산수출	96, 100, 101, 102, 103, 112, 141, 158
방어제공훈련	77
방위력개선훈련	92, 97, 115, 116, 117
방위력개선평가	94, 304
방위비분담금	128, 129, 130, 285
방위사업	32, 35, 94, 96, 97, 98, 197, 302, 303
방위사업법	99, 296, 297, 298, 299, 300, 301, 303
방위사업청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41, 148, 149, 294, 296, 297, 298, 300, 307, 308
배합작전	23
병영문화쉼터	17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67, 168
부사관 학군단	71, 72
북대서양조약기구	17, 137, 141, 142, 143
북방한계선	21, 47, 48, 75, 211, 212, 214, 250, 273, 277
불가침부속합의서	47

비무장지대	116, 191, 211, 212, 213, 214, 215, 232, 233, 249, 252, 254, 255, 265
비세그라드	142, 145

人

사이버공격	8, 18, 33, 35, 48, 60, 268
사이버사령부	14, 16, 59, 60, 86, 223, 274, 278
사이버안보	59, 60, 86, 142, 145
사이버위협	9, 10, 31, 32, 36, 59, 60, 68, 91, 274
사이버작전사령부	60, 86
상호군수지원협정	112, 282
상호운용성	54, 108, 109, 126, 127, 139, 143, 272, 274, 279, 286
생물무기금지협약	56, 148, 289
생활 밀착형 피복류	171
서북도서방위사령부	44
서울 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전	102, 103
서울안보대화	6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90
성과기반군수지원	110, 117
성실수행인정제도	100
소요검증 제도	94
수색 및 구조훈련	76
순항훈련	75, 76, 143
스톡홀름 합의	20
시차별부대전개제원	46
시험평가	94, 95, 97, 98
신속대응부대	44
신속억제방안	46
쌍룡훈련	78

○

아라우부대	157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0, 144, 147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10, 61, 66, 136, 138, 144, 146, 160
아시아 안보회의	136, 138, 144, 146
아크부대	157, 158, 159, 291
야외기동훈련	50, 79, 248, 269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	189
에볼라	9, 157

찾아보기

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	76, 126
연합토지관리계획	127, 128, 274
연합훈련	17, 61, 65, 74, 75, 76, 77, 78, 111, 126, 127, 139, 157, 158, 261, 263, 264, 266, 272, 279
예비군훈련	106, 117
예비군훈련대	117
예비전력관리기구	303
오쉬노부대	154, 159
온누리부대	158
외래검진센터	179
우주상황인식	57, 274
원격진료체계	107
유럽연합	8, 137, 141, 142, 143, 155, 156
유엔군사령부	128, 283
유엔 남수단임무단	153
유엔 레바논평화유지군	152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104
을지프리트가디언	50, 55, 79, 262, 264, 265, 269
응징적 억제	53
인도·태평양 전략	8, 11, 12

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3, 24, 229
장거리 미사일	19, 20, 246
장거리타격폭격기	14
장병사랑 캠페인	19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5, 62
적극적 평화주의	12, 15
적정 국방비	113, 114, 115
전략군	22, 25, 244, 261
전략적 타격체계	53
전력소요검증위원회	94
전력운영비	115, 116, 117
전력증강	16, 18, 19, 38, 54, 91, 92, 93
전력지원체계	109, 111
전문 연구기관	111
전문학위교육	71
전자사 유해발굴	205, 206
전술정보통신체계	92, 93, 95
전시작전 대비훈련	76

전시작전통제권	32, 35, 36, 39, 43, 50, 80, 93, 108, 116, 118, 125, 127, 132, 133, 134, 269, 277, 283, 28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6, 39, 43, 50, 80, 93, 108, 116, 118, 125, 127, 132, 133, 134, 269, 283, 284
전투지휘훈련	74, 75
전환·대체복무	192
정비지원 혁신	110
정전협정	47, 130, 151, 154, 213, 263, 273, 308
정찰용 무인항공기	47, 86, 93
정찰위성	56
제공작전	45
주한미군사령부	46, 127, 128, 129, 269, 274, 279, 280, 283
중군군 유해송환	135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67
지상작전사령부	16, 43, 84
지역군단	84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67, 68
지원예비군	105
집단적 자위권 행사	15

ㄴ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206
청해부대	155, 156, 291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8, 9, 33, 37, 91, 114, 125
충무훈련	79, 105

ㄷ

칸퀘스트 훈련	78
키리졸브	50, 79, 126, 269

ㄹ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54, 118
태극연습	79, 80, 266, 269
통제보호구역	298
통합방위본부	67, 68, 79
통합방위사태	67, 68
통합방위지원본부	67, 68

통합방위태세 35, 67, 79, 269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22

II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151
 포괄적 전략동맹 124
 폭력적 극단주의 8, 9
 플루토늄 25, 227, 228

III

한국방공식별구역 15, 13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53, 54, 118, 273
 한국형 전투기 92, 93
 한려 해상사고 방지협정 136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57
 한미군사위원회회의 124, 125, 133, 134, 271, 276, 278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111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 274
 한미 상호방위조약 46
 한미 생물방어연습 55
 한미안보협의회의 51, 52, 111, 124, 125, 130, 132, 133, 134, 205, 271, 276, 281
 한미연합훈련 263
 한미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 111
 한미통합국방협의체 51, 52, 124, 271
 한미 화생방 대응연습 55
 한빛부대 151, 152, 153, 154, 159, 291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136
 합동참모본부 42, 60, 98, 294, 300
 항공차단작전 45
 항공차단훈련 77
 해외긴급구호대 65, 157
 해외파병 상비부대 158
 핵비확산조약 148, 227, 288
 핵우산 51, 272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 144
 호국훈련 50, 78, 79, 266, 269
 화랑훈련 55, 68, 79, 269
 화학무기금지기구 56, 289
 화학무기금지협약 56, 148, 289
 확장억제 51, 52, 133, 272, 277, 284
 환태평양훈련 76, 78

A

ADEX 103
 ADMM-Plus 10, 61, 66, 144, 146, 160
 ARF 10, 65, 144, 147
 ASS 144, 146
 ATT 149, 289

B

BCTP 75
 BWC 56, 148, 289

C

C4I 22, 91, 93, 285, 286
 CAS 45
 CIS 139
 CWC 56, 148, 289

D

DMZ 47, 191, 213, 232, 233, 264
 DPKO 159
 DSC 51, 52, 272

E

EDSCG 51, 272
 EMP 92
 EU 8, 137, 141

F

FDO 46
 FE 50, 79, 126, 261, 263, 269
 FTX 50
 F-X 92, 93

G

GDACS 10

H

HEU 25

찾아보기

I

ICBM	13, 15, 16, 17, 19, 20, 210, 261, 275, 307
ICT	106, 116, 231
ISIS	8, 9, 273, 279

J

JAM-GC	13
JCPOA	9
JSTARS	77
JTS	80

K

KADIZ	15, 135
KF-X	92, 93
KIDD	51, 124, 271
KMEP	78, 264, 266
KR	50, 79, 126, 261, 263, 264, 269

L

LPP	127, 274, 285
L-SAM	86

M

Max Thunder	76, 126, 264
MCM	124, 133, 134, 263, 271, 274, 275, 276, 278, 280, 281
MDL	21
MILES	73
M-MOOC	72
MTCR	148, 149, 290

N

NATO	17, 137, 141
NDS	11, 12
NEACD	144, 147
NLL	21, 47, 267, 273, 277
NPT	148, 227, 288, 290
NSS	11, 12

O

OPCW	56, 289
------	---------

P

PBL	110, 117
PESCO	8
PKO	15, 137, 138, 139, 159, 160, 273, 291
PSI	150, 273, 279, 290

R

Red Flag-Alaska	76
RIMPAC	76, 78

S

SAM	86
SAREX	76
SCM	51, 111, 124, 126, 130, 133, 134, 205, 271, 274, 275, 276, 278, 279, 280, 281, 282
SDD	144, 190
SLBM	13, 24, 229, 275
Soaring Eagle	76
SOFA	128, 280, 286

T

TICN	92, 93, 95
TPFDD	46

U

UAV	46, 106, 241
UFG	50, 79, 262, 264, 265, 269, 307
UNIFIL	152, 291
UNTSO	151

W

WMD	21, 55, 91, 118, 246, 272, 273, 279
-----	----------------------------------------

Y

YRP 127, 274, 285

숫자

4D 작전개념 52, 53, 272

5·24 조치 216

QR코드 찾아보기



국방개혁 2.0
p37



대한민국 국군
공익광고
p42



육군 홍보 영상
p43



육군 드론봇
전투단 창설
p43



해군 홍보 영상
p44



해군 잠수함,
장보고-III 도산
안장호함 진수식
p44



해병대 홍보 영상
p44



공군 홍보 영상
p45



독도 홍보 영상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p48



국방 사이버안보
정책
p59



평창 동계올림픽 '신종
테러' 등 안벽 대비
p61



육·해·공군 사관생도,
해상 합동교육
p72



해군 동해상 전투단
실사격 훈련
p75



공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p76



2017 해병대
코브라골드
(연합상륙) 훈련
p78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p85



공군 블랙이글스
홍보 영상
p103



2017 서울 ADEX
p103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p104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회의
p125



2018 서울안보대화
p144



아템만 청해부대
(홍보 애니메이션)
p155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p165



어머니 모니터링단
현장 방문
p173



2018 국방예산
대토론회
p189



하와이에 보관 중이던
국군 전자자 유해,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p205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p212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p212



북한 DMZ 내 GP 폭파
p213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대표전화 : 02)748-1111 민원안내 : 02)748-6891 Fax : 02)748-6895

www.mnd.go.kr